2008 희망제작소 창립 3주년 기념 애뉴얼리포트

コンクン・シー

세상읽기

희망을 만드는 사람들

왜 커뮤니티비즈니스인가

희망제작소. 이런 일을 한다



2008 희망제작소 창립 3주년 기념 애뉴얼리포트

NE 3 physier

- 1 시_걸음
- 4 인사말
- 6 여는 말
- 10 초대에세이
- 14 안에서 본 희망제작소 3년
- 30 밖에서 본 희망제작소 3년
- 44 세상읽기
- 74 희망을 만드는 사람들
- 98 기획- 왜 커뮤니티비즈니스인가
- 133 리포트
- 151 희망제작소, 이런 일을 합니다
- 190 해외네트워크
- 208 서평
- 212 에코호프
- 214 희망제작소 24시
- 218 희망릴레이
- 220 희망제작소가 걸어온 길
- 224 희망제작소 간판이야기
- 228 도서목록
- 242 희망제작소를 후원하는 사람들



걸음

나눔으로 한 걸음 기쁨으로 두 걸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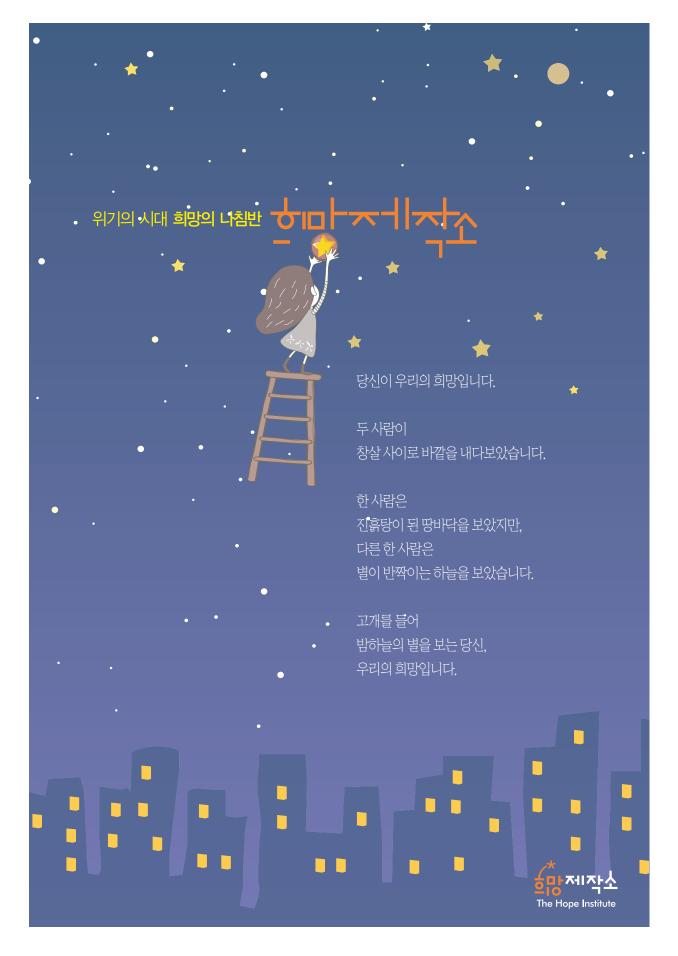
올바른 게 아니면 제대로 걸은 게 아니야

사랑으로 한 걸음 배움으로 두 걸음

새로운 게 아니면 앞으로 나간 게 아니야

더도 덜도 말고 한 번에 한 걸음씩

흔들리지 말고 정직하게 한 걸음씩



therefore and the second secon

イルトラ はりなるとくとくと

시민들의 아이디어 현실화 83건 세미나, 강연, 토론회 개최 321회 단행본, 자료집, 보고서 출간 153권 각종 교육생 1821명 인턴십 수료자 294명 희망소기업 지원 49곳

희망제작소가 3년 동안 한 일입니다. 지역, 농촌, 노년층, 소기업을 살리고, 살아 숨쉬는 대안을 만들기 위해 희망공장 엔진은 쉬지 않고 돌아갑니다.

우리 사회를 아름답게 디자인하는 일, 희망제작소가 하고 있습니다. 희망씨앗을 아름드리나무로 키워주세요. 큰 희망으로 보답하겠습니다.

1만명 시민의 힘으로 달리는 ·희·망·기·관·ㅊ



후원계좌 (예금주 희망제작소) 국민은행 006001-04-123533 하나은행 271-910002-36004

온라인 가입 070-7580-8119 후원사업팀으로 전화해서 후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전화번호를 남겨주시면 후원사업팀에서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전화 가입 희망제작소 홈페이지 www.makehope.org에서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우리는희망을 벗합니다

김창국

희망제작소 이사장

실사구시의 민간연구소를 표방하며 닻을 올린 희망제작소가 창립 3주년을 맞았습니다. 돌아보면 벌써 3년인가 하는 생각도 들지만, 그 세월이 어떤 시간이었는지를 잘 아는 저로서는 선뜻 그렇게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만큼 그 시간은 실험과 도전, 분투와 시행착오의 험난한 여정이었습니다. 애초에 각오한 일이기는 하지만, 남이 안 가는 길을 가다 보니 마땅히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모든 새로운 길은 부딪치면서 열어가는 법입니다. 부딪치면 깨지고, 깨지면 열립니다. 따라서 새로움을 추구하는 자들은 충돌을 숙명처럼 받아들여야 합니다. 희망제작소는 그 길을 때론 즐겁게, 대부분은 고통스럽게 걸어왔습니다. 희망은 고통의 생살을 뚫고 솟아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3년 시간을 불철주야 달려오다 보니 배우고, 알게 된 것이 많습니다. 그 전보다는 가야할 길이 훨씬 선명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입니다.

희망제작소는 창립 3주년을 맞아 좌표를 새로 설정하였습니다. 그동안의 실패를 교훈심아 성과는 다지고 한계는 극복하겠습니다.

먼저 시민 참여형 연구소로 거듭날 것입니다. 희망제작소는 정부나 기업의 출연금한 푼 없이 설립한 민간연구소입니다. 그러다보니 늘 재정구조가 불안정하고 취약할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상태로는 우리 사회의 주요 의제들에 대해 정책 대안을 마련하고, 이를 힘 있게 실천하기 어렵습니다. 하고 싶은 일은 하지 못하고, 존립에 목매는 답답한 상황이 지속되었습니다. 이걸 깨야합니다.

시민회원들의 강력한 지지와 뒷받침만이 희망제작소가 연구하며 행동하는 독립 연구소로 성장할 수 있는 유일하며 올바른 대안입니다. 그렇게만 되면 정부나 기업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습니다. 헤리티지재단을 비롯한 외국의 유수한 연구소



들이 후원회원들의 힘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희망제작소도 그 길을 가려 합니다.

다음, 시민사회 구성원으로서 할 말을 하려 합니다. 희망제작소는 그동안 밖에서 보기에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는 듯 비쳐졌습니다. 그럴 만한 여지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희망제작소는 기존의 관성에서 벗어나 새로운 길을 가려 했기 때문입니다. 커다란 담론이나 관념적인 이론이 아닌 구체적인 현실에서 변화를 이끌어 내고자 했습니다. 새로운 실험의 초기 단계인 만큼 실천으로 말하려 했습니다.

앞으로 희망제작소는 현장 경험과 성과를 기반으로 그 지평을 더욱 넓혀 나갈 생각입니다. 어떤 연구도 사람과 현장을 떠나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고, 작은 것이 중심이 되고, 시민이 주인 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긴급하고 주요한 사안에 대해 할 말을 하고, 원칙대로 행동할 것입니다. 희망제작소는 시민사회의소중한 자산입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참으로 우려스러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새해 들어서도 생존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처참하게 희생되는 일이 생겨났습니다. 또 역사의 시계바늘을 뒤로 돌리고, 가진 자들이 더 많이 갖게 하려고 법과 제도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삶은 피폐하고 앞은 보이지 않습니다. 좌절과 위기의 시대라 할 만합니다. 이처럼 비상한 시기에 민주주의와 개혁을 지키고 전진시키는 일은 동시대인의 책무이자 사명입니다. 희망제작소는 이러한 소명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싱그러운 봄비가 촉촉이 대지를 적시고 있습니다. 푸르른 새 생명들이 멋진 출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절망과 희망은 겨울과 봄의 관계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서로 맞서고 다투는 관계가 아니라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절망은 희망의 씨앗을 품고 있습니다. 새로운 탄생을 준비하기에 그토록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위기와 좌절속에 맞이하는 새봄, 그래서 다시 희망합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변치 않을 희망의 벗입니다.

고맙습니다.*

여는 말

이름을잘못지어웬고생이람

-희망제작소의 지난 3년과 앞으로 3년

박 원 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

3년 전, '희망제작소' 라는 이름을 지을 때는 신이 났다. 그냥 'OOO 연구소' 나 'OO 재단' 이라고 지었다면 얼마나 따분하였겠는가. 나는 늘 이름부터 재미나고 흥미로워야 한다고 믿었다. 아니나 다를까 사람들은 희망제작소라는 이름을 들으면서 "뭘 제작하는 곳이라구요?" 이렇게 묻곤 했다. "아! 우리는 무슨 물건을 만드는 곳이아니구요, 희망을 만드는 곳이라니까요!" 라는 답을 할라치면 서로 한바탕 웃게 되는 것이다.

이름에 관련된 사연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공작소' 와 '제작소' 를 구별 못하고 사람들은 흔히 '희망공작소' 라고 부르기도 한다. 아, 그러면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모두 '공작원' 이 되고 마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가장 당혹스러운 일은 그런 말장난에 있는 것이 아니고 진짜 희망제작소가 뭔가 희망을 제작하여 줄 것으로 기대하고 방문하거나 메일을 보내오는 시민들이다. 이들은 이주 진지하게 나를 찾아와 자신의 프로젝트를 설명하고 희망제작소가 도와 주거나 함께 하기를 청하는 것이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니까 슬슬 "우리가 진짜 이름을 잘못 지었구나"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제 와서 이름을 바꿀 수도 없으니 이제 '희망'의 '제작'은 우리의 운명이 되었다.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대한민국의 희망을, 시민들의 희망을 제작하지 않을 수 없게된 것이다. 사주 관상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이름이 운명을 결정한다고 하니 우리도이제 어쩔 수 없이 그 운명을 따를 수밖에 없지 않은가.

지난 3년간의 지독한 시행착오

우리가 헛갈린 것은 이름만이 아니다. 희망제작소는 3년 전 '21세기 실학운동' 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세우며 실증적이고 창의적인 정책을 양산하는 싱크탱크임을



자임하였다. 우리는 남이 잘하고 있거나 이미 잘되고 있는 일은 건드리지 않는다고 선언하였다. 아무도 관심이 없거나 소홀히 하는 일들만 다루려고 작심한 것이다.

그러나 막상 '실증적' 이고 '창의적' 인 정책을 개발한다는 것은 얼마나 힘든 일인가. 남들이 이미 하다가 포기하고 버린 것, 아무도 관심이 없는 것을 우리가 다루고 뭔가 성과를 낸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이런 일이라고는 처음 해보는 나 자신과 젊은 연구원들이 밤을 지새우며 국내외 사례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대 안을 만들려고 발버둥쳐 보았지만 아직 기대에는 미치지 못한다. 아직도 우리는 우리가 바라는 세상을 세밀히 디자인하고 그 경로를 설계하며, 우선 순위를 정하고 실천에 나서는 일에 충분히 성과를 거두고 모델을 만들었 다고 장담하기 어렵다. 아니, 이제 이 작업은 시작에 불과하다.

팀워크, 그리고 지속가능성이라는 숙제

나는 새로운 단체를 만들면서 늘 세 가지 숙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믿어 왔다. 첫째는, 사업의 포맷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것을 수행하기 위한 팀워크를 구축해야 하며 셋째는, 이러한 사업과 사람의 지속가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희망제작소는 지난 3년간 이 세 가지 과업을 이룩하기 위하여 무진 애를 써 왔다. 다양한 사업의 굴레 속에서 지지부진한 사업을 접기도 했고 사업의 성취도와 완성도를 높이는 과정에서 연구원들의 피로가 과도하게 축적되기도 했다. 서로 다른 배경과 전문성을 가지고 모인 연구원들이 한국사회에서 전혀 실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형태의 조직에 적응하고 조율하면서 시너지를 낸다는 것은 쉽지 않은 도전이었다.

특히 내가 독촉하는 속도에 따라오기 위하여 연구원들이 무진 애를 썼다. 쉴 새 없이 빠르게 돌아가는 엔진의 열을 식히기 위해 더운 여름날 모든 연구원이 지리산을 종주하기도 하고 버스를 전세 내 박물관을 돌기도 하였다.

그러나 가장 힘든 일은 역시 이 모든 실험이 지속가능한 궤도를 돌 수 있도록 하는 재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일이었다. 특히 회원구조에 취약했던 희망제작소가 작년 말에서 올해 초부터 집중적으로 회원모집에 나섰다. 경제위기가 불어 닥쳐 가뜩이나 쉽지 않았던 기업후원은 대폭 줄어들고 큰 후원을 하던 개인마저 지갑을 닫았다.

이제 거짓 희망과 진짜 희망을 구별해내야 한다. 거짓 희망 쪽과 진짜 희망 쪽을 갈라내야 한다. 그래서 진짜 희망 쪽을 강화해서 대안을 찾고 현실화해야 한다. 우리가 올해 해야 할 일의 핵심은 사실 이것이다. 진짜 희망을 찾아내서 그것을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것, 그래서 우리가 꿈꾸는 아름다운 미래를 오늘의 현실로 이루어 내는 것, 바로 이것이다.

이제 기댈 곳은 다수 개미 회원들의 후원이다. 2009년 한 해는 바로 이 재정적 안정을 위한 도전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형편이다. 1만 명 시민회원을 확보한다면 재정안 정화와 지속가능성, 시민참여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 이게 꿈만은 아닐 것이다. 이미 희망제작소를 아름드리나무로 키우기 위한 캠페인에 수천 명의 시민들이참여하고 있다. 더 많은 시민들의 후원으로 이어져서 마침내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시민의 연구소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

3년간의 놀라운 성취

스스로를 돌아보면 늘 이쉬움과 모자람에 몸을 떨기 마련이다. 그동안 희망제작소 3년은 많은 반성과 성찰을 요구하고 있다. 좀 더 줄일 수 있었던 시행착오도 많았고, 더 잘 할 수 있었던 여지도 많았다.

그러나 그런 후회와 반성만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지난 3년간 아마도 다른 조직이나 기관은 절대로 하지 못할 엄청난 일을 해냈다. 희망제작소라는 한 조직 안에 수많은 연구소와 팀들이 생겨났고 이들이 온전하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굴러가는 자율성을 갖추었다. 마치 새롭게 축조된 호수 안에서 플랑크톤이 생겨나고 수초가 자라고마침내 다양한 물고기와 개구리, 자라가 자라는 곳이 되는 것과 같았다.

이 조직과 팀이 만들어낸 성과는 놀랄 정도이다. 100여 권에 이르는 각종 책자와 보고서, 자료집 등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 희망모울에서는 쉴 새 없이 세미나가 열리고 소셜디자이너스쿨, 좋은시장학교, 공공디자인학교, 간판학교 등이 끊이지 않는다. 수많은 지자체에 나름대로 알차고 창의적인 콘텐츠를 공급하였다.

여전히 달려가야 할 앞으로 3년

문제는 우리 자신의 욕심과 기대이다. 남들이 평가하는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는 없는 노릇이다. 사업의 양식과 팀워크, 지속가능성이라는 과제에 좀 더 천착해야 한다. 방만한 구조를 좀 더 유연하고도 정교하게 만들어야 한다. 사업과 과제해결의 완성도를 높이고 품질을 업그레이드해야 한다.

이를 위해 올해 3대 방향 10대 과제를 설정하였다. 재정과 인적자원에서 지속가능한 기반 구축, 콘텐츠의 질향상과 정확한 전달, 국내외 네트워크 강화를 큰 방향으로 정하였다. 시민에 기반한 연구소, 내외부 소통이 원활한 조직, 내부 시스템의 안정화, 미디어 기능의 강화와 대외 영향력 제고 등은 그에 따른 세부 과제들이다.

세계 금융위기의 여파로 경기는 꽁꽁 얼어붙었고, 경제형편은 점점 나빠지고 있다. 문제는 이 어려운 시기가 얼마나 지속될지 알 수 없다는 점이다. 좋지 않은 전망들이 이어지고 있다. 사람들은 좌절과 위기를 피부로 체감하고 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알 수 없어 두려움마저 갖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와 정치권이 해법을 내놓을 수 있을지 썩 믿음이 가지 않는다. 해법은커녕 어렵게 진전시켜온 민주주의와 인권은 후퇴하고, 경제적 불평등은 심화되고 있는 듯하다. 오죽 상황이 절망적이면 올해 넘쳐나는 말이 '희망' 이겠는가. 희망이라면 희망제작소가 늘 외쳐오던 말인데, 희망이 넘쳐나는 데도 왜 신이 나지 않는 것일까.

이제 거짓 희망과 진짜 희망을 구별해내야 한다. 거짓 희망 쪽과 진짜 희망 쪽을 갈라내야 한다. 그래서 진짜 희망 쪽을 강화해서 대안을 찾고 현실화해야 한다. 우리가 올해 해야 할 일의 핵심은 사실 이것이다. 진짜 희망을 찾아내서 그것을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것, 그래서 우리가 꿈꾸는 아름다운 미래를 오늘의 현실로 이루어 내는 것, 바로 이것이다. 우리는 더욱 비상한 각오를 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희망제작소 구성원들은 여전히 그 이름값을 하고 있는지 자문해야 한다. 우리는 진정으로 대한민국의 희망을 제작하고 있는가. 앞으로 3년 동안 우리는 이 질문에 답변하기 위하여 또다시 달려가야 한다.

희망의 나무는 절대 저절로 자라나지 않는다. *



봄이 오는 강가에서 희망을 생각한다

글 _ **김 용 택** 세인

강에 또봄이온다.

세월은 흐르는 강물만큼이나 바삐 흘러가지만 우리 곁에 오는 봄은 아름답다. 얼음이 풀린 강가에 버들개지가 눈을 트면 사람들은 들로 나가 일을 한다. 보리밭에 거름을 주고 나물을 캐러 가고 보리밭을 매고, 산으로 거름들을 쳐 날랐다. 봄이 오는 산중마을 사람들은 강물만큼이나 부산했던 것이다. 앞산 산밭에 보리들이 점점 자라 푸르게 물결이 지고 강물에 어른거리면 사람들의 마음은 얼마나 벅차올랐던가. 그러나 이제 앞산 밭에 보리는 없고 강물을 따라 버들피리를 불며 나물을 캐러 가는 처녀들은 보이지 않는다. 지금 강변은 적막하고 쓸쓸하다. 적막하고 쓸쓸한 강변에 지금 봄이 오고 있는 것이다. 강변 풀밭에는 쑥들이 파릇파릇 돋아나고 새 풀잎들이 마른 풀잎 사이로 얼굴들을 내민다. 강 언덕에 나이 드신 농부 한 분이 소와 쟁기로 밭을 갈아간다. 이랴 자라 너무도 천천히 소가 가고 농부가 그 뒤를 따른다.

내 기슴도 저렇게 갈아엎어 맑은 햇살 속에 드러내고 싶다.

나는 전문적으로 문학공부를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문학에 대해 관심이 없었다. 우연한 기회에 책들을 가까이 하다 보니 나는 나도 모르게 문학에 길에 들어섰고 오늘에 이르러 사람들이 나를 섬진강 시인이라고 한다. 문학을 공부하면서 나는 언젠가부터 우리 마을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우리 동네에 있는 지명들이나 앞산 뒷산의 나무들이며 강가에 바위들이며 논밭다랑이들이며 산등선이며 거기 뜨는 달이나 별들, 바람이나 눈이나 비나 서리나 이슬들 거기에 있는 수많은 풀잎들과 산에 사는 짐승들과 산새들, 물고 기들과 나비와 벌레들과 계절마다 피어나는 꽃들이며, 자라는 곡식들과 농사짓고 사는 사람들의 이런 저런 농사일들, 산에 나무 가고 짐승들을 기르고 들에 가서 곡식들을 가꾸며 같이 먹고 같이 놀고 같이 일하는 농민들 그 특유의 느림과 한가함과! 기다림들을 나는 몸에 마음에 익히며 살았다. 작은 마을에 태어난 사람들의 아름답고 슬픈 인생들을 나는 보아왔다. 그들이 어울려 살던 마을의 구석구석들을 나는 환하게 알아갔다. 그러나 그 많던 사람들이 어느 때부터인가 하나둘씩 어딘가로 떠나 돌아오지 않았고 마을은 텅텅 비어갔다.

어느 시절은 설이나 추석이면 사람들이 다 돌아와 놀다 갔지만 언제부턴가는 설이 되어도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았다. 마을은 더욱 더 쓸쓸하고 적막해져 갔으며 아이들이 한 명도 살지 않는 마을이 되어갔다. 아이들이 책가방을 메고 다니던 강 길은 비어갔으며 길이 사라졌다. 학교 가는 강 길의 사라짐은 내게 견딜 수 없는 슬픔과 아픔과 괴로움과 고통과 더 없는 절망을 안겨 주었다. 농촌 붕괴 현장에 나는 있었던 것이다.

나는 우리 마을의 생성과 번영과 소멸에 관해 글을 써왔다. 때로 분노와 슬픔을 때로 아름다움과 인간과 자연이 만들어낸 화려한 마을 공동체를, 인간의 마을을, 그들이 가진 작고 소박한 희망을 나는 시로 써왔다. 거기에는 참으로 아름다운 인간의 얼굴들이 있었다. 거기에는 보기만 해도 행복한 인간과 자연의 순환이 있었다. 가난을 가난하지 않게 하는 문화가 있었고 인간의 얼굴을 한 사람들이 해와 달과 별과 바람과 비와 함께 있었다. 내 시는 모두 그 속에서 쓰였다. 해가 떠서 지고 다시 뜨고 지는 그 사이에서 사람과 사람들 사이, 자연과 사람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나는 글로 옮겼다. 나는 그게 시인지도 몰랐다. 나는 어머님과 아버님의 말을 시로가져갔으며 큰집 할머니의 죽음을 그대로 옮겨갔다. 그게 시가 되었다. 이웃집 형이 이사 가는 모습을 시로 옮겼으며, 아버지의 일생을 시로 간단하게 ! 옮겼다. 나는 사람들이 농사짓고 고기 잡으며 시는 모습들도 그대로 옮기려 애썼다. 내겐 어려운 시어도 필요 없었다. 농사짓고 시는 사람들의 말이 시가 되어 주었다.





나는 일속에서 나오는 그런 쉬운 말들을 사랑했다. 글자를 읽지 못하는 시골 할아버지들이 내 글을 읽어주면 좋아했다는 말을 나는 들었다. 우리 어머님도 글자를 모르시지만 내 아내가 읽어주는 내 시를 듣고 "하이고 우리 용택이가 어쩌면 내 이야기를 그렇게나 세세하게 했다냐?" 하셨다. 글이 없어서 그들이 그들의 말을 버리고 살 때 나는 그들의 말을 글로 옮기기를 즐겨했다. 마을의 모든 것들이 다 말이 되고 글이 되어 내 시에서 춤추고 놀기를 나는 원했다. 그렇게 내 맘 먹은 대로 다 되었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나는 내 있는 힘을 다해 그렇게 하려고 노력했다.

나는 우리 동네의 모든 것들을 다 쓰고 싶다. 내가 이 작은 마을에 태어나 거기서 자라 이렇게 살고 있으니, 나는 그렇게 큰 복을 다 누리고 살았으니, 우리 마을의 모든 것들을 이야기로 이 세상에 남기는 것이 그 복 갚음이라 믿는다. 나는 글 쓰는 사람으로 많은 복을 타고 태어났고 그렇게 그 복을 가꾸며 살고 있다. 그 복을 내 복으로 만들기보다 우리 마을의 복으로 만들 의무와 책임이 내겐 있는 것이다.

푸른 생명의 봄이, 내 살던 그 강에 오고 있다. 봄은 희망이다. 봄비처럼 촉촉하고 소박하고 정겨운 희망이다. 하늘 아래 봄이 오고 있는데 사람들이 도대체 더 무엇을 바라고 이리 몸부림들인가. 봄이 저렇게 오고 있는데 봄은 보지 않고 무엇을 보며 저렇게 부산들을 떠는가. 봄 빛 속에 피어나는 한 떨기 풀꽃이면 되었지 더 무엇을 바라는가. 길가에 피어나는 풀꽃 앞에 쭈그려 앉아 보라. 바람 속에 흔들리는 풀꽃을 보라. 한번 그래보라. *

끊임없는도전과모색, 그리고 성장통속에서 걸어온희망제작소 3년

윤 석 인 희망제작소 부소장

"인력은 변동 없이 전문위원 5명 포함해 전체 83명이며, (중략) 재정 현황은 지난주 수입 6100만 원에 지출 1900만 원으로 현재 잔액은 마이너스 2억3100만 원입니다." 지난 2월23일 주간부서장회의에서 사무국장의 업무보고. 이어 재정특별 TFT 팀장의 보고. "지난주 신규 후원회원은 185명에 월정액 293만5천 원이며, 누계로는 지난주 말 현재 1821명에 2010만2천 원입니다. 3월 말까지 목표 6000명을 달성하려면 연구위원들부터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합니다."

희망제작소가 창립 3돌에 즈음하여 위기를 맞이했다. 지난해(2008년) 말 몰아 닥친 글로벌 경제위기의 한파는 희망제작소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고 있다. 시민 사회단체들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언프렌들리' (unfriendly) 정책도 부정적 요인 의 하나로 작용하는 느낌이다. 그래서 올해(2009년) 사업계획의 최우선 목표를 '생존과 지속가능성 확보' 로 설정했다. 후원회원 확대 사업도 그 일환이다.

혹자는 희망제작소가 그동안 너무 방만하게 운영해온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2006년 20명에서 출발해 3년 만에 무려 83명이 일하는 큰 조직으로 성장했으니, 보기에 따라선 타당한 지적일 수 있다. 하지만 희망제작소가 독립적인민간 싱크탱크로서, 지난 3년 동안 우리 사회의 주요 현안과 과제에 대한 정책대안과 해법을 제시하고 이를 현장에서 실천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온 점에 비추어, 83명의 인력이 지나치게 많다고 하긴 어렵다. 또 석박사급 연구원들이 월평균 190만 원의 저임금을 받으면서 밤낮과 주말 가리지 않고 열심히 노력해온 점도 감안해줘야 한다. 실제로 이런 헌신적인 노력을 기반으로, 희망제작소는 창립 3년만에 지역과 국가적 의제들에 대한 정책대안 연구사업과 컨설팅 등에서 상당한 성과를 쌓아가고 있다.

2006년, 중요하지만 쉽지 않다고 생각한 도전

희망제작소는 2006년 3월 사회창안 뿌리 공공문화 대안 등 4개 연구센터와 지혜창고 사무국 기획실 등 3 개 지원조직 체제로 공식 출범했다. 2005년 여름부터 박원순 변호사와 김광식 이지훈 유창주 문병원 문종석 등 시민사회 중견 활동가들이 모여 준비한 사업계획안을 토대로 짠 체제였지만, 사업계획안의 방대함 등으로 인해 결코 쉽지 않은 '실험'이 될 것이라는 안팎의 우려와 긴장감이 있었다고 기억한다. 그럼에도 창립대회는 국내외의 시선을 끌면서 성공리에 진행되었다. 미국과 영국,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 싱크탱크 운동을 주제로 한 국제 심포지엄에 대한 반응도 좋았고, 사회창안센터의 '초기 임산부 보호 퍼포먼스' 도 언론의 주목을 끌었다.

창립대회를 전후해 대안센터는 '우리시대 희망찾 기' 프로젝트와 함께 사업을 시작하였고, 뿌리센터는 4월부터 '박원순의 지역 희망찾기' 전국 투어, 일본 지역만들기 현장 연수부터 사업을 본격화했다. 6월 12~13일에는 4기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기초단체장 34 명이 참여한 시장학교(Mayor's Academy)를 진행하였 는데, 시장학교 성공의 자산은 이후 뿌리센터 연구사 업의 든든한 토대가 되었다. 공공문화센터는 공공공 간을 주제로 사업모델을 연구하다 8월부터 부설 세계 공원연구소, 간판문화연구소 등의 창립으로 방향을 바꿔 사업을 시작하였다. 이후 각 센터 부설 연구소가 10개나 창립되는데, 외부 전문가들을 연구소장과 운 영위원 등으로 위촉해 연구역량을 향상시키는 긍정적 인 효과와 함께 '이중적 의사결정구조' 라는 조직 운영 상 문제점도 드러내게 된다. 지혜창고는 세계도시라 이브러리(WCL)와 글로벌 브레인 투데이(GBT) 등 2개 의 프로젝트 중심으로 사업모델 개발에 착수하였다. 기획실은 중앙일보와 함께 한 '박원순의 내 고장 희망 찾기'캠페인을 기획하는 한편, 현대자동차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만들어 제출하는 등 컨설팅 업무를 시작 하였다.

2007년, 공격적인 사업 진출의 시기

2006년이 각 센터별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사업을 발진하는 시기였다면, 2007년은 이들 사업이 나름대로 성과들을 내면서 여러 신규 사업을 공격적으로 벌인 시기였다고 할 수 있다. 먼저 사회창안센터는 한국일보, 한국방송(KBS) 등과 함께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실질적인 제도개선으로 이어가기 위한 연중 캠페인을 활발하게 벌임으로써 희망제작소의 대표 사업모델로 자리를 잡게 된다.

뿌리센터는 자치재정 조례 주민참여 농촌희망 등부설 연구소 체제를 정비하는 한편, 일본희망제작소설립(6월)을 시작으로 미국 영국 독일 등으로 국제 네트워크를 정비해 나간다. 그리고 기획실과 함께 충청남도와 '포괄적인 협력 및 컨설팅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주민참여를 통한 충남지역 발전 방안 연구프로젝트에 착수하는 등 여러 자치단체들과 함께 하는 컨설팅 사업을 본격화한다. 또 행정자치부에 제안한 지역활성화센터 프로젝트가 받아들여짐에 따라 11월 태평로 프레스센터 1층에 '전국 방방곡곡 지역홍보센터'를 설립하고 그 운영을 위탁받는다.

공공문화센터는 2007년 1월 공식 창립한 간판문화 연구소가 행정자치부와 포괄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 면서 서울방송(SBS)과 공동으로 '이름다운 간판 만들 기'캠페인을 벌이는 한편 충남 수덕사 입구 상가들의 예컨대 정체성 논란은, 희망제작소가 처음부터 현장과 실천, 실사구시의 가치를 중시하는 '싱크 앤 두 탱크'(Think and Do Tank)의 성격을 표방한 데 따른 필연적 결과물이었다고 할 수 있다. 상임 연구원들에 대해서도 연구자 (researcher)의 역할보다 연구프로젝트 매니저나 외부 전문가들을 조직하고 관리·지원하는 코디네이터의 역할을 더 강조해온 것이다.

간판정비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등 다양한 사업모델을 실행한다. 대안센터는 '우리시대 희망찾기' 프로젝트가 첫 성과물로 〈우리는 더 많은 민주주의를 원한다〉(유시주 이희영)를 출간하는 한편, 2006년 11월 발진한 해피시니어 프로젝트가연구 및 실행(행복설계아카데미) 양면에서 성과를 내기 시작한다. 부설 재난관리연구소도 20명에 이르는 중견학자 중심의 운영위원들이 6개 팀으로 나뉘어주제별 연구 프로젝트에 착수하는 등 사업을 본격화한다. 기획실은 2006년 현대자동차사회공헌 컨설팅 보고서가 호평을 받은 여세를 몰아 삼성고른기회장학재단, 봉은사 등 다양한 기관과 단체에 대해 사업모델이나 사회공헌 전략, 조직개혁 방안 등다양한 콘텐츠의 컨설팅 보고서들을 양산한다.

2007년에는 또 희망아카데미가 준(準)독립부서로 발전해 자치단체장과 공무 원, 지방의원들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단체별 교육, 공공디자인 등 주제별 교육, 해외연수 사업 등을 활발하게 진행하는 한편, 소기업발전소가 7월 하나금융그룹 과 포괄적인 협력관계를 맺으며 공식 출범한다.

2008년, 일찍 찾아온 성장통과 거듭되는 정체성 논란

2007년이 조직 전체가 공격적으로 연구 사업을 벌인 시기였다면, 2008년은 이들 사업이 뿌리를 내리는 시기여야 했다. 실제로 박원순 상임이사는 2007년 말 뿌리내리기를 위한 방대한 전략 구상을 발표하기도 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2008년은 숨고르기를 하며 연구 및 사업구조를 조정하는 시기였다고 할 수 있다. 2년동안 앞만 보고 과속 질주한 데 따른 '성장통'을 다스려야 하는 문제가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성장통은 2008년 초부터 뚜렷이 나타났다. 먼저 충 남도는 2007년 시행한 연구 프로젝트의 결과 보고서 에 대해 크고 작은 불만을 나타내며 사실상 협력관계 를 단절하는 조처를 취했다. 프로젝트 보고서가 결과 적으로 일부 부실했다면 그 원인의 상당 부분은 희망 제작소 나름의 새로운 프로젝트 수행 방법론에 대한 충남도 공무원들의 이해 부족과 비협조에 기인하는 바가 적지 않았다. 그럼에도 충남도는 차분하게 경위 를 조사하고 원인을 찾아 대안을 마련하려는 자세는 보여주지 않았다. 아무튼 이로 인해 희망제작소가 형 식과 내용 양면에서 완전히 새롭게 선보이려고 한 각 종 보고서에 대한 퀄리티(Quality) 관리문제가 주요 과 제로 떠오르게 된다. 공공문화센터는 부설 연구소장 들이 지속적으로 제기한, 부설 연구소와 희망제작소 의 관계 설정 방식 등에 대한 문제들을 제대로 풀지 못 하였다. 그로 인해 상임연구원 1인 중심의 부설 연구 소가 희망제작소에 유효한 조직적 실험인가에 대한 논란이 희망제작소 내부에서 대두한다.

성장통의 문제는 희망제작소를 이끌어가는 박원순 상임이사와 연구위원, 연구원들 사이의 현격한 역량 차이와 사업 추진과정의 속도감 차이, 소통의 한계 등으로 인해 창립 초기부터 내재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국내 최고의 풍부한 콘텐츠를 구비한 박 상임이사가 밤낮 없이 시속 100km 이상으로 질주하는 반면, 연구위원과 연구원들은 기껏해야 10~20km의 저속으로 어렵게 학습하며 뒤따라가는 불균형의 파행이 성장통의 본질이라는 것이다.

희망제작소는 성장통이 당면 과제로 떠오르고, 창립 이후 계속 제기해온 '연구원 정체성' 과 소통 문제에 관한 논란까지 증폭되면서 급기야 7월 '성장통 TFT' 를 구성해 종합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게 된다. 성

장통TFT는 이후 2달 동안 희망제작소 창립 이래 가장 정돈된 체계로 논의를 진행해 △희망제작소의 정체성 △연구사업의 방향과 방식을 둘러싼 문제들 △조직운 영 및 관리체계 문제 등에 관한 진단 결과를 내놓음으 로써 희망제작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도움이 되는 새로운 조직 운영방안을 제시했다는 내부 평가를 받 았다.

예컨대 정체성 논란은, 희망제작소가 처음부터 현장과 실천, 실시구시의 가치를 중시하는 '싱크 앤 두탱크' (Think and Do Tank)의 성격을 표방한 데 따른 필연적 결과물이었다고 할 수 있다. 상임 연구원들에 대해서도 연구자(researcher)의 역할보다 연구프로젝트 매니저나 외부 전문가들을 조직하고 관리ㆍ지원하는 코디네이터의 역할을 더 강조해온 것이다. 충남도 건에 대해서도 이런 흐름의 연장선에서, 외부 전문가들이 책임연구원을 맡는 프로젝트 수행 방식의 한계가 드러난 결과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성장통 TFT는 이런 점들을 토대로 '희망제작소는 그동안 싱크탱크가 아니었다'고 진단하고, 앞으로는 상임연구원들이 연구자의 역할을 상당한 정도 수행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시행착오 속에서도 꾸준히 성장

2008년이 크게 보면 속도조절 시기였지만, 부서별로는 지난 2년의 성과를 토대로 나름대로 착실하게 뿌리를 내린 한 해이기도 했다. 먼저 해피시니어 프로젝트는 40~60대 전문인 퇴직자들을 대상으로 시행한'행복설계아카데미'를 7기까지 진행해 197명의 수료자를 배출하고, 3기에 걸쳐 모집한 대학생과 일반시민 100여명의 '해피리포터' 들이 전국 방방곡곡의 시민사

회단체를 취재해 240여 개 꼭지에 이르는 탐방기(영상물 포함)를 내놓으면서 한 단계 도약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글로벌 경제위기로 조금 늦춰지고 있긴 하 지만, 해피시니어는 후원사이자 사업 파트너인 대한생명과 함께 늦어도 2011년에 는 독립된 '해피시니어 센터' 로 발전해나갈 계획이다.

희망아카데미도 김광웅 (서울대 행정학과 명예교수) 고문을 교장으로 모시고 사실상 독립부서로 성장하면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2010년 지방 선거를 겨냥해 기획한 4개월 코스의 제1기 '좋은시장학교'를 언론과 정치권의 호평 속에 순조롭게 진행하여, 머잖아 일본의 '마쓰시다(松下)정경숙'을 능가하는 훌륭한 교육과정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낳았다. 개별 자치단체들과 함께 하는 맞춤형 공무원교육은 의뢰가 너무 많아서 다 수용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으며, 공공디자인 및 커뮤니티비즈니스(마을기업) 등 주제별 아카데미, 단체장 또는 공무원들과 함께 하는 주제별 해외연수 등도 성과를 쌓아가고 있다. 2009년에는 '기후환경' 분야에서 기본 및 전문교육과정을 새롭게 개발해 선보일 예정이다.

사회창안센터는 2008년에도 〈메트로〉등과 함께 언론 캠페인을 지속하는 한 편, 9월에는 포털 다음 등과 함께 사회창안주간을 설정하여 사회창안대회와 국제 학술회의, 불만합창단 공연행사를 차례대로 무리 없이 진행함으로써 사회창안운 동 3년의 성과를 정리하고 2단계 도약을 위한 기틀을 세웠다는 평가를 받았다. 2009년에는 사회창안운동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해 기본 플랫폼을 바꾸고, 전 문적인 시민창안활동가를 양성하며, 사회창안운동에 함께 하는 국회의원 모임 '호민관클럽'을 활성화하는 일 등을 주요 과제로 삼고 있다.

뿌리센터도 2008년 여름부터 전북 완주군과 함께 '커뮤니티비즈니스' 활성화

를 목표로 한 준비사업으로, 군 안의 모든 읍면과 마을 의 각종 유 · 무형 자산을 전수 조사하는 방대한 '신택 리지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커뮤니티비즈니스는 희망제작소가 지역과 농촌 활성화를 위해 제안하고 추진하려는 대표적인 대안 사업모델로서, 2009년에는 연구와 사업 양 분야에서 더 많은 성과를 선보일 수 있 을 것으로 기대된다. 뿌리센터는 특히 부설 주민참여 클리닉이 서울 마포구의 의뢰로 '주민참여형 마을만 들기'에 관한 연구보고서 (살고싶은 우리 동네를 만 드는 32가지 방법)(곽현지)을 내놓았는데, 많은 자치 단체 관계자들로부터 연구용역 보고서의 새로운 모델 을 만들었다는 호평을 받았다. 이밖에도 전국 각지의 시민활동가들이 자신들의 활동 경험을 정리한 지역연 구총서 12권, 조례총서 7권, 일본의 마을만들기 관련 연구서적을 번역한 뿌리총서 7권 등 연구출판 분야에 서도 많은 성과를 쌓아가고 있다.

공공문화센터도 2009년 3월 부설 도시공간연구소를 창립하면서 도시의 공공공간을 새롭게 디자인하는 연구와 사업들을 전개하는 등 체제를 쇄신할 예정이다. 특히 핵심과제로 '트레일 연구'를 선정해 4월 중순부터는 중앙일보와 공동으로 '함께 가는 길 '캠페인을 벌이는 한편 순천시 등과 함께 다양한 실행 프로젝트들을 추진할 계획이다. 희망제작소에선 가장 늦게 발진한 기후환경팀도 2008년 한 해 동안 안산, 화성시 등과 함께 기후변화 대응방안, 제2동탄 신도시 탄소중립화 방안 등 굵직한 연구 프로젝트들을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4권의 연구보고서를 선보일 예정이다.

국가적(National) 의제에 대해서도 관심 늘려나가

희망제작소는 지난 3년 동안 국가적 의제, 특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당면 현안들에 대해 연구하고 발언하는 데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창립 이후 지역(Local) 의제에 주로 관심을 기울여온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당면 현안들에 대해 책임있는 발언을 하기에는 신생조직이 안아야 할 부담이너무 크다는 판단 아래, 주로 중장기적 관점에서 차분하게 연구 의제를 개발해온 데 대한 홍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탓도 적지 않다고 생각한다.

우선 창립 초기 발진한 '우리시대 희망찾기' 프로 젝트가 그 대표적인 보기이다. 이 프로젝트는 '더 많은 민주주의' (일상의 민주주의)를 비롯해 지역, 시민 사회(제3섹터), 교육, 환경, 주택, 노동, 통일문제 등 주요한 국가적 의제 14가지에 대해 일반 시민과 관련 전문가들을 심층 인터뷰하고 그 결과를 분석, 정리하여 새로운 연구 의제를 발굴한다는 취지로 진행되었다.



2월 현재 7권의 연구서적을 출간하는 성과를 거두었고, 올 상반기에도 잇따라 연구서들을 선보일 예정이다. 희망제작소는 애초 이들 연구 성과를 토대로 각 주제 별 부설 연구소를 설립한다는 방침도 있었으나, 경제위기 등 내외 여건을 감안할 때 앞으로 1~2년 안에는 이를 현실화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한편 이프로젝트 가운데 박원순 상임이사가 만 3년간의 전국 투어를 통해 직접 담당한 '지역'연구는 이미 여러 언론 캠페인을 통해 그 성과들을 상당수 발표하였으며, 핵심적인 내용들을 추려 단행본으로 묶어내는 작업도 마무리에 들어갔다.

싱크탱크 연구도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다. 미국과 일본, 유럽 각국의 싱크탱크들에 대한 연구 결과는 이미 출간한 〈세계를 바꾸는 생각〉(홍일표) 외에도 단행본 3권을 더 출판할 계획이며, '글로벌 브레인 투데이' (GBT)를 통한 온라인 연구보고도 더욱 충실하게 이어질 예정이다. 대안센터 부설 '재난관리연구소'도 지난 2년간의 활발한 연구 활동을 통해 나라 안팎에서 주목받는 성과들을 쌓아가고 있다. 특히 2007년 여름부터 수십 차례의 학술 세미나와 현장탐방 조사 활동을 벌인성과를 5권의 연구서적으로 묶어 출간하였다.

대안센터는 또 미흡하나마 창립부터 주요 현안들을 주제로 한 '희망모울' 세미나와 토론회 등을 꾸준히 진행하였다. 2008년 초에는 대통령직 인수과정의 중요성을 제기하는 대규모 심포지엄을 주최하기도 하였으며, 2009년 들어서는 정치권과 자치단체의 주요 현안으로 떠오른 '지방행정체제 개편'문제를 주제로 전국지방신문협회와 함께 10차례의 지역순회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 또 캐슬린 스티븐스 주한 미국대사를 초청해 한-미관계와 남북문제 현안에 대한 공개강좌를 여는 등 '월례 대화마당'을 통해 주요 현안들에 대한 내로라하는 전문가들의 공개강좌와 토론회, 세미나 등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

콘텐츠 발신체계 정비와 HOPE-TV

희망제작소 홈페이지를 찾는 분들 중에는 '콘텐츠는 많은데 이것들이 가지런하게 잘 편집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하는 이들이 많다. 또 각종 세미나와 토론회에 참석하는 분들 가운데 자료집의 엉성한 편집과교열상태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체계적이지 못한 홍보와 출판, 발신체계에 대한 따끔한 지적들이다. 솔직히 이런 지적은 창립 초기부터계속되었다. 아직도 만족할 만한 해결책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굳이 한 마디 변명한다면, 희망제작소가 너무 많은 콘텐츠를 동시에 끊임없이 양산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2008년부터 웹미디어센터 이름으로 기존의 지혜창고와 웹팀을 통합하고 출판과 뉴스 담당 연구원들을 보강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면서 점점 나아지고 있다.

웹미디어센터는 앞으로 홈페이지를 동영상 콘텐츠 중심으로 개편해 올해 안에 'HOPE TV'로 발전시키는 한편, 뿌리센터를 비롯한 각 센터의 연구와 컨설팅 결 과, 사회 각 분야의 주요 이슈에 대한 진단 등을 담은 대표저널을 제작할 계획이다. 대표저널은 당분간 부 정기로 제작한다는 방침인데, 이번호 2008년도 애뉴 얼(Annual) 리포트가 그 첫 작품인 셈이다.

안국동 로터리 시대를 마감하고

희망제작소 3년은 결코 순항만 한 게 아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서도 역량의 한계를 절감하는 순간이 적지 않았다. 재정문제 해결을 위해 연구든 사업이든 대부분 프로젝트 중심으로 진행하다 보니 크고 작은 프로젝트의 가짓수만 잔뜩 늘어나 연구원들을 물

리적으로, 심리적으로 옥죄는 현상이 자주 발생하였다. 지난해 말에는 우리가 2007년 행정자치부에 제안해 만든 지역홍보센터의 위탁 운영과 관련해 이를 중단한다는 어처구니없는 통고를, 행정안전부 산하 재단으로부터 받는 수모도 겪어야 했다.

해피시니어처럼 사업의 성과가 제법 분명한 프로젝트도 이를 이론화하여 학술적인 성과로 축적하는 일은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 사회창안센터의 첫 대중 캠페인이었던 '초기 임산부 보호 캠페인' 처럼 사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해 성과가 사실상 실종된 경우도 있었다.

사업과 수익모델이 자치단체나 기업 등이 함께 하는 연구 프로젝트 중심으로 짜이면서 정작 시민사회 단체와는 충분히 교감하지 못한 점도 아쉬운 대목이다. 희망제작소가 민간 싱크탱크로서 시민사회운동의 발전을 위한 연구 성과를 꾸준히 생산해주길 기대하는 분들에게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셈이다.

희망제작소는 오는 4월 말 사무실을 이전한다. 임대료를 대폭 절감하기 위해, 연구원들의 피와 땀방울이 고스란히 스며있는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5번지동일빌딩 시대를 마감하는 것이다. 아픈 만큼 성숙한다고 했던가! 희망제작소는 앞으로 더욱 체계적인 조직 운영과 연구원 모두의 간단없는 학습, 훈련을 통해 안팎의 한계와 거센 도전을 극복해 나갈 것이다. 특히 희망제작소다운 연구방법론 개발, 시민사회 진영 및 학계와의 연구 성과 공유 등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고자 한다. 서로 같은 것과 다른 것이 있음을 인정하고 정책대안을 통해 경쟁하며 소통하는, 그리하여 우리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함께 변화하고 발전하기 위한 공감대가 구축되고 확산되길 바라는 마음 절실하다. **

희망제작소의 '체급조정' 보다 '종목 변경' 이 필요하다

: '독립적 민간 싱크탱크' 라는 정체성에 대한 도발적 문제 제기

홍일표

희망제작소 대안센터장

여전히 요원한 '제대로 된' 한국 싱크탱크

"싱크탱크가 아니라 마우스탱크입니다."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금산분리 완화정책'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견지해 오던 한국금융연구원 이동걸 원장의 이임사에 담긴 문구이다. 그가 떠나고 2주 후, 금융연구원에서는 '금산분리 완화'를 찬성하는 보고서가 발표되었다. 작년 5월, "4대강 정비계획의 실체는 한반도대운하 공사"라는 사실을 폭로했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이태 연구원은 결국 3개월 정직처분을 받았다. 지난 10월에는 한국노동연구원장의 '비정규직 보호법의 효과와 개선 방향' 보고서 논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방송 분야 연속 워크숍' 논란, 한반도선진화재단이 발표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개편방안' 보고서의 졸속 및 편향 논란 등이 이어졌다. 이러한 논란은 2008년 12월의 '정부출연 연구기관 개편방안에 대한 공청회'까지 계속 되었다. 관련 법안이 국회에 상정된다면 커다란 파행이 빚어질 것임은 명약관화하다.

국내 연구기관의 독립성 문제는 비단 국책연구소에 한한 것은 아니다. 이명박정부는 7% 성장' 공약에 집착하며, '하면 된다' 식의 경제정책을 고집하였다. 그러나 2월 10일 윤중현 신임 기획재정부 장관은 취임 첫 기자회견을 통해 '마이너스 2%' 성장률 전망을 제시하였다. 그러자 그동안 3% 이상의 경제성장률 전망을 내놓던 삼성경제연구소와 현대경제연구원은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다음날 2009년도 전망치를 마이너스 2%대로 수정ㆍ발표하였다. 참으로 낮이 화끈거리는, 말그대로 '화끈' 한 변신이었다.

2009년 2월에는 국회예산처와 국회 입법조사처가 쟁점사안들(방송규제완화의 경제적 효과, 국회의장 직권상정제도 해외사례)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그 런데 이 내용이 정부 · 여당의 입장과 다르다는 이유로, 국무총리실, 국회의장실, 국회사무처가 해당 연구원들에게 외압을 가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입법지원기구의 독립성을 훼손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한나라당의 여의도연구소, 민주당의 민주정책연구원, 민주노동당의 새세상연구소(구 진보정치연구소) 등은 정치자금법과 정당법 등에 근거하여 정당 국고보조금의 30%를 지원받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이들은 상대적으로 안정된 재정기반을 확보하고 있으며, 자신들이 생산한 정책이 실제 반영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할 수 있다. 그러나 정당 부설 연구소들은 소속 정당의정과적 입장이나 당내 역학구도에 예속되어 적극적역량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제대로된' 한국 싱크탱크의 등장은 여전히 요원해 보인다.

'독립적 민간 싱크탱크'세계의 헤비급: 희망제작소의 급속한 성장

기존 한국 싱크탱크들의 문제점들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등장한 민간 싱크탱크들 또한 적지 않다. 민주화이후 한국 사회운동의 한 축을 담당해 왔던 시민운동 진영의 주요 시민단체들은 부설 연구소—경제정의연구소, 참여사회연구소, 시민환경연구소—들을 두고있다. 그러나 사실은 경실련이나 참여연대, 환경연등 개별 시민단체들 스스로가 '준정당' 적 역할과 더불어 '준싱크탱크' 적 기능을 담당했다고 보는 것이 보다 정확할 것이다. 그러나 한국 시민운동진영 역시, 지난 몇년 전부터 '정책역량의 한계'라는 문제를 지적받고 있고, 또 토로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노무현 정부의 '무능'과 '혼선'에 대한 진보진영 내부의 반성은 '독립적인 민간 싱크탱크'의 설립—새로운 코리아 구상을 위

한 연구원(2004년),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2005년), 세교연구소(2006년), 생태지평(2006년), 희망제작소 (2006년)—으로 이어졌다.

이들은 기존 시민단체 부설 연구소들이나 노동조합이 출연한 연구소들—예를 들어 금융경제연구소, 사회 공공연구소—과 달리, 말 그대로 '독립적'인 민간 싱크탱크라는 형식을 취하였다. 새롭게 등장한 '독립적 민간 싱크탱크'들은 '진보적 싱크탱크 공동주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그들만의 '새로운 리그와 역할'을 형성하기 위한 노력을 시도하였다. 희망제작소 역시 이러한 흐름 속에서 등장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2006년 3월 27일 열렸던 희망제작소 창립 기념 국제 세미나 「싱크탱크와 우리시대 희망찾기」에는 미국의 대표적인 진보 싱크탱크인 정책연구소(IPS), 영국의 대표적 진보 싱크탱크 데모스(Demos), 그리고 일본 자민당 계열의 싱크탱크(The Think Tank 2005, Japan) 소속 연구자들이 참여하여 세계 각국 싱크탱크들의 경험과 고민을 소개하였고, 국내 연구자들 또한 한국 싱크탱크와 희망제작소에 관한 분석과 제안의 글들을 발표하였다. 예컨대「싱크탱크를 통한 대안사회 만들기: 희망제작소를 중심으로」라는 글에서 동국대 박순성 교수는 '진보'와 '보수'의 틀을 넘어 이 시대가 요구하는 정책적 대안들을 만들어 내기 위해 희망제작

1_예를 들어 2006년 11월부터 약 4개월간 10개 진보 성향 싱크탱크들이 '위기에서 대안으로' 라는 타이틀을 내걸고 매월 공동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여기에 참여한 싱크탱크들은 성공회대 민주주의와 사회운동연구소,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대안연대, 세교연구소, 좋은정책포럼, 진보정치연구소, 참여사회연구소, 민주사회정책연구원, 코리아연구원, 희망제작소 등이다

소와 같은 '시민운동형 싱크탱크'의 역할이 지극히 중요함을 강조하였다(「싱크 탱크와 우리시대 희망찾기」, pp.120~129).

희망제작소는 창립선언문에서 '21세기 실학운동'을 주창하며 자기 활동의 핵심 정체성이 '연구' 와 그에 기초한 '실천'에 있음을 분명히 밝혔고, 2008년 창립 2주년을 맞아 작성한 2007년 애뉴얼 리포트에서는 희망제작소가 '21세기 신(新) 실학 운동의 산실' 임을 다시 강조하였다.

"희망제작소는 실사구시의 정신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희망을 찾는 시민참여형 민간 싱크탱크이다. 우리 사회의 온갖 의제들(agenda)에 대해 정책적 대안을 연구하고 실천하려는 독립적인 민간연구소이며, 연구와 실천을 함께 추진하는 21세기 신(新)실학운동의 산실이다. 희망제작소는 우리가 꿈꾸고 상상하는 대로 세상을 바꿀 수 있고, 또 바꿔야 한다고 믿고 있다. 꿈은 현실로, 미래는 현재로, 문제는 대안으로 바꾸는 한국형 싱크탱크를 꿈꾸고 있다."(「2007 희망이야기: 희망제작소 2007년 애뉴얼리포트」, p.8)

희망제작소의 이러한 포부와 열정은 실로 놀라운 속도로 빠르게 현실화되었다. 많은 이들이 '서울' 과 '도시' 로 모여들 때, 희망제작소는 '지역' 과 '농촌' 으로 달려갔다. 많은 이들이 '전문가' 중심의 정책생산물을 기다릴 때, 희망제작소는 시민들의 바다 속으로 뛰어 들었고, 그들의 기발한 상상을 이끌어 냈다. 많은 이들이 크고 무거운 주제들에 관심을 기울일 때, 희망제작소는 작지만 큰 의미를 갖는이슈들을 끈기 있게 다루었다. 농촌의 문제를 풀기 위해 '비농업인'의 목소리를들었고, 지역정치를 바꾸기 위해 '예비정치인' 과 지역공무원들을 직접 교육시켰다. 지역재생의 아이디어와 정책제언은 사무실 책상이 아니라 지역 곳곳을 누빔

으로써 비로소 만들어 낼 수 있다는 '당연한 진리' 를 몸소 실천하였다.

창립 당시 20명도 채 안 되던 상근 연구원의 숫자는 3년 만에 80명을 훌쩍 넘어섰고, 사무실은 어느새 건물 5개 층을 사용해야 되는 정도로 커졌다. 독일과 일본에 해외사무소를 운영하고 있고, 전 세계 곳곳에서희망제작소 홈페이지에 글을 싣는 이들이 줄을 서 있다. 한 해 예산 규모 수십억 원은 한국은 물론 미국의웬만한 싱크탱크들과 겨누어도 결코 뒤지지 않는 규모이다. 비슷한 시기에 창립한 다른 민간 싱크탱크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의 빠른 외형적 성장이며,참여연대나 경실련과 같은 대표적 시민단체들보다도이미 두 배 이상 큰 덩치이다. '독립적 민간 싱크탱크 리그'웰터급으로 첫 출전했다가, 3년 만에 헤비급으로체급이 올라간 상황이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것은 '헤비급 챔피언 결정전' 인가?

문제는 '체급' 이 아니라 '종목' 이었다? : 희망제작소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고민

새롭고 발칙한 상상력, 현장에 뿌리내리고 실천으로 이어지는 연구 작업은 희망제작소의 최고 자랑거리이다. 국내의 다른 어떤 싱크탱크들도 쉽게 따라올수 없는 강점이다. 나아가 희망제작소는 스스로를 기존의 '싱크탱크' 로는 설명이 불가능하며, '생각하고실천하는 연구소' 다시 말해 'think and do tank' 라고부르는 것이 적절하다고 얘기한다. 다양한 언론캠페인이나 시민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들, 국회의원들과의 직접 만남을 지속하는 호민관 클럽, 수많은 대중강연과 교육프로그램, 각종 컨설팅 사업 등은 희망제작소의 역동성과 복합성을 잘 보여 준다. 그런데 이러한



특징들의 '총합' 으로서의 희망제작소를 '한국형 싱크 탱크' 로 설명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라는 의문이 제 기된다. 같은 헤비급에서는 물론이고 다른 체급에서 도 희망제작소와 비슷한 유형의 싱크탱크들은 해외는 물론 한국에서도 잘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 2월 18일 낮, 서울 반포동 메리어트호텔 소재 식당에서는 윤중현 신임 기획재정부 장관과 9개 경제연구기관장들의 만남이 있었다. "정부와 민간 전문가들이지혜를 모아 전대미문의 경제위기를 이겨낼 '묘안'을 찾아 보겠다"는 취지였다. 여기에는 한국개발연구원, 노동연구원, 금융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경제연구원, 조세연구원, 삼성경제연구소, IG경제연구원, SK경영경제연구소의 원장, 소장들이 참석하였다.

같은 날 동국대학교에서는 진보진영의 7개 싱크탱크(민주주의연구소,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세교연구소, 진보와 개혁을 위한 의

만약 희망제작소가 싱크탱크가 아니라고 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희망제작소의 현재와 미래를 '한국형 싱크탱크'로 설명하는 것은 여전히 부담스럽다. '싱크 앤 두 탱크'라는 개념이 '한국형'이라는 특징, 그리고 희망제작소의 독특한 성격을 충분히 담아낸다고 말하기에도 뭔가 부족하다.

제27, 참여사회연구소, 코리아연구원)와 한겨레신문사가 공동으로 〈이명박 정부와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를 주제로 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그런데 희망제작소는 어느 쪽에도 없었다.

전자의 모임은 당연하겠지만, 후자에서는 왜 빠졌을까? 희망제작소가 주로 다루는 주제, 예를 들어 '지역'이나 '창안', '문화' 등이 다른 싱크탱크들과 함께 할수 없는 독특한 것들이기 때문일까? 창립 당시 희망제작소는 '시민운동형 싱크탱크'로 기대되었고, 2007년 초까지만 해도 '진보 성향 싱크탱크'들의 공동토론회의 일원이었다. 그렇다면 급속한 성장 과정 동안 희망제작소의 '시민운동적' 또는 '진보적'성격이 약화된 것인가? 하지만 희망제작소의 활동은 여전히 '운동적' ³이며, '진보적'이다. 그런데 왜 빠졌을까?

희망제작소는 창립 이후 지난 3년간 이미 여러 차례 내부 구성원들에 대한 의견조사와 집중토론의 시간을 가진 바 있다. 시기와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른 쟁점들이 다뤄졌지만, 일관된 이슈 가운데 하나는 "희망제작소는 과연 싱크탱크이며, 나는 정말 '연구원' 인가?"라는 물음이었다. 일반적 싱크탱크의 핵심적 기능은 '연구수행' 과 '정책제언' 이라 할 수 있다. 이미 각종 지방자치단체들에 대한 다양한 컨설팅, 중앙부처나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정책의견의 제출, 그리고 수십 권에 달하는 단행본의 출판과 다양한 정책보고서의 작성이 계속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개인과 조직의 연구자적 정체성을 고민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는 것은 숨길 수 없는 현실이다.

그래서 필자는 여기서 조금은 발칙하고 도발적인 '상상'을 해본다, 아니 '제 안'을 해본다. 문제해결의 열쇠는 '형용사' —시민운동적, 진보적—가 아니라, '명사' —싱크탱크—에 숨어 있다는 것이다. 혹시 희망제작소는 더 이상 '싱크탱

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모임들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은 것은 아닐까? '체급'이 아니라 '종목'자체가 다른 것이 아닌가?

정책지식산업계를 선도하는 복합 사회적 기업 : 희망제작소 정체성의 전략적 재구성

만약 희망제작소가 싱크탱크가 아니라고 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희망제작소의 현재와 미래를 '한 국형 싱크탱크'로 설명하는 것은 여전히 부담스럽다. '싱크 앤 두 탱크'라는 개념이 '한국형' 이라는 특징, 그리고 희망제작소의 독특한 성격을 충분히 담아낸다 고 말하기에도 뭔가 부족하다. 그렇다면 희망제작소를 '싱크탱크' 보다 연구와 컨설팅, 캠페인, 비즈니스 기 능을 골고루 갖춘, 복합적 성격의 '사회적 기업' 으로 설명하는 것이 오히려 더 적절하고 유효하지 않을까?

희망제작소는 현재 소기업발전소와 CB연구소를 두고 있고, 소시지팩토리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이들은 넒은 의미의 '사회적 기업'과 관련된 것들이다. 그러나 희망제작소는 '사회적 기업' 이라는 용어또한 잘 사용하지 않는다. 현재 제도화되고 주류화된 '사회적 기업' 논의가 본래의 역동성과 확장성을 오히려 제약하고 있기에, '소기업'이나 'CB(커뮤니티 비즈니스)'라는 별도의 개념을 더욱 선호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제작소는 사회적 기업과 관련된 다양한 외부 활동에 주요 행위자로 참여하고 있다. 각종 행사의 주최자이자 조직자로 참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⁴, 언론을 통해 '사회적 기업'의 가능성과 중요성을 대중들에게 전파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⁵. 그렇다면 아예 희망제작소 자체를 하나의

'사회적 기업' 으로 설명해보면 어떨까?

'사회적 기업'이 창의력과 도전 정신을 갖고 이윤을 창출함과 동시에 '사회적 기여' '공익적 활동'을 수행해 내고자 하는 조직이라고 한다면 희망제작소의 지난 3 년과 앞으로의 미래는 그러한 정의에 무척 부합해 보 인다. 희망제작소를 '정책 지식산업계의 복합 사회적 기업'의 선도주자라는 식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규정 하고, 방향성을 잡아 나가는 것도 충분히 가능해 보이 기도 했다.

실제로 희망제작소의 박원순 상임이사는 앞서 언급한 〈시사IN〉 강좌에서 '아름다운재단이야말로 대표적 사회적 기업' 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아름다운가게 만이 아니라 아름다운재단 역시 '사회적 기업' 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희망제작소 역시 '사회적 기업' 리

- 2_현재 희망제작소는 민생민주국민회의(준)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각종 정책논의 테이블에도 참여하고 있지 않다.
- 3_실제로 희망제작소 내부의 분위기는 조용한 연구실보다 시끌벅 적한 시민단체 사무실에 더 가깝다. 수많은 방문객들이 사무실 을 왕래하고 있고, 전화벨 소리는 한시도 멈추지 않는다. '데모' 만 조직적으로 하지 않을 뿐이지, 연구원들의 일상 또한 시민단 체의 '간사'(또는 활동가)들과 그리 다르지 않다. 실제로 희망 제작소 연구원들은 스스로 '뛰어난 연구자' 이기보다 '슈퍼 코 디네이터(간사)' 가 될 것을 요구받는다.
- 4_희망제작소는 2008년 8월과 2009년 3월의 〈한일 사회적 기업 심포지움〉공동주최자이며, 2008년 10월 〈아시아 사회적 기업 가 활동가대회〉공동주관단체였다. 희망제작소 박원순 상임이 사는 2009년 3월에 열린 〈사회적 기업 국제 컨퍼런스 2009〉(KDI, Columbia Business School 공동 주최)의 준비위원이 자 발표자이다.
- 5_희망제작소 박원순 상임이사는 '사회적 기업'의 무한한 가능성을 대중들에게 설파하는 전도사 역할을 뛰어나게 수행하고 있다. 예컨대, 박원순 이사는 시사주간지 〈시사IN〉이 주최한 2009년 신년연속강좌 '위기에서 길을 묻다' 첫 번째 강사로 나서, 대 안경제의 핵심행위자로 '사회적 기업', 특히 '농촌 밀착의 소기업'을 강조한 바 있다(http://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tdxno=3617).

그의 선수로 충분히 발탁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희망제작소는 '싱크탱크 임에도 연구 역량이 불충분한 곳'이 아니라 '사회적 기업 가운데 가장 뛰어난 연구 역량'을 갖춘 조직이 될 수도 있다. 이는 연구의 수준과 비중을 낮춰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성격'의 연구과정과 결과를 필요로 하는가에 따라 척도 자체가 크게 달라짐을 의미한다⁶.

예를 들어, 해외 싱크탱크들과 해외의 사회적 기업들 가운데 희망제작소의 실험과 성과를 접하게 되었을 때, 어느 쪽이 더 쉽게 희망제작소를 이해하고 더 큰관심을 가질까? 그리고 과연 어떤 기관들과 실질적인 협업의 가능성을 발견할 수있을까? 예컨대 브루킹스연구소나 헤리티지재단의 연구원은 희망제작소를 '싱크탱크' 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지 못한다7. 하지만 희망제작소가 '사회적 기업' 들의네트워크에 자신의 사례를 설명한다면, 이는 놀라운 '성공과 도전' 사례로 각광을 받을 것이다. 한국 내에서도 '싱크탱크로서의 희망제작소'의 위상은 여전히그다지 높은 편은 아니며⁸, 희망제작소에 대한 사회적 기대가 무엇인지에 대해 다시 냉정하게 되짚어 볼필요가 있다.

기업사회공헌의 새로운 영역과 시장을 창출해 내고 있고,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의 광대한 컨설팅 수요를 충족시키며, 지역특산물의 생산과 유통, 소비, 인터넷쇼핑몰의 운영, 각종 교육 및 연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이미 희망제작소의 활동전반은 싱크탱크라는 이름으로 담아내기 어려운 범위와 방향으로 계속 확장하고있다. 이것을 굳이 '한국형 싱크탱크'로 규정하는 것이 어떤 효과와 장점을 갖는 것일까? 일반적 의미의 '싱크탱크'라면, 더욱이 '진보적 싱크탱크'라면 당연히할 것으로 기대되는 일들 대신 희망제작소는 오히려일반적 의미의 '싱크탱크'라면 단쉽게 상상하지도 못할 실험들을 계속하고 있다. 따라서 국책 및 경제연구소들



모임에도 진보 성향 싱크탱크들의 모임에도 참가하지 않은 이유는 희망제작소의 규모나 지향 때문이 아니라, 그들과는 아예 '다른 종목'에서 활약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정책지식산업계를 선도하는 사회적 기업' 으로서 말이다.

이로 인해 '한국형 싱크탱크 세계' 는 무려 80명의 상근인력을 갖춘 초대형 선수를 잃게 될 지도 모른다. 하지만 종목 전환 후 비로소 자신의 재능을 100% 발 휘하여 최고의 기량을 발휘하는 운동선수들이 적지 않다. 희망제작소가 싱크탱크라는 정체성에 집착하면 서 혼란스러워하기보다, 새로운 국내시장을 개척하 고, 드넓은 해외시장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사회적 기업' -규모로 봐서는 이미 소기업이 아니다-으로 스스로를 설명한다면 오히려 더 큰 위업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닐까? 너무 발칙한 상상이고, 섣부른 제 안일까?⁹ 그러나 이런 제안은 '정체성' 이라고 하는 것이 선험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주체와 구조 의 상호작용 속에서 끊임없이 구성되는 것이라는 사 회학적 관점을 희망제작소에도 적용시켜 본 결과이 다. 희망제작소는 '싱크탱크' 일 수도 있고 '사회적 기 업'일수도 있다. 그 둘일수도 있고, 그둘다가 아닐 수도 있다. 하지만 희망제작소와 이를 둘러싼 조건에 대한 냉정하고 객관적 분석을 통해, 그것의 정체성과 방향성에 대한 '전략적 재구성'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시점에 도달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 "희망제작소 여!!! 너는 누구이며, 무엇이 되고자 하는가?" *

- 6_희망제작소는 연구 및 용역 결과물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품질관리위원회'를 두고 있다. 이는 일반적인 싱크탱크들이 연구과정과 결과를 통제하는 방식과 매우 다르다. 그렇기 때문 에 '잘못된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논리'가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 7_이는 필자가 2년 동안 미국의 싱크탱크들을 직접 조사·연구하며 실제로 확인한 사실이다.
- 8_조사의 정확도를 완전히 신뢰할 수는 없지만, '싱크탱크로서의 희망제작소'의 위상을 보여 주는 자료가 있다. 『한경비즈니스』 (2008년 12월 15일 제680호)에 실린 '정치·사회 분야 100대 싱크탱크'가운데 희망제작소는 14위를 기록하였다(http://www.kbizweek.com/cp/view.asp?vol_no=680&art_no=12&sec cd=1001).
- 9_참고로 필자는, 아마 다른 어떤 누구보다도 회망제작소가 일반적 의미의 '싱크탱크'적 성격이 더 강화되기를 바라는 인물일 것이다. 그리고 다른 '독립적 민간 싱크탱크' 들과의 더 많은 교류와 협력을 가장 많이 주창하는 연구원이기도 할 것이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이런 '제안'을 하는 것은, 현재 희망제작소에 대한 '내부적 관찰'과 '객관적 평가'에 기초한 것으로, 희망제작소의 지난 3년과 앞으로의 향방을 "다른 시각"으로 살펴보고자한, 조금은 의도적인 '도발'을 감행해본 것이다.

희망제작소 3년, '사회 디자이너' 의 도전과 과제

박 순 성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시민과 함께 우리 사회의 희망을 만들다

싱크탱크 운동을 통한 우리 시대의 희망 찾기, 희망제작소 3 년은 놀라움과 즐거움이 있다. 무엇보다도 시민들의 아이디어로부터 우리 사회의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내겠다는 노력이 이룬 성과이기에 더욱 그렇다. 시민들이 일상생활속에서 문제들을 끄집어내고 그것들을 풀어나갈 방안을 직접 제시할 수 있다는 사실, 그러한 사실에 착안하여 싱크탱크 운동을 벌이고 있는 희망제작소의 성과, 이 모두는 놀라움이면서도 동시에 즐거움이다. 희망제작소 3 년의 성과는 우리가함께 궁핍한 시대를 넘어설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준다. 결코 쉽지 않았을 지난 3년의 활동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온 희망제작소의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린다.

사회창안센터와 뿌리센터의 활동은 희망제작소의 특징을 가장 잘 보여준다. 우리 사회를 아름답고 사람이 살 만한 공동체 사회로 만들기 위해 사회창안센터는 삶의 현장에서 우러나오는 시민들의 아이디어와 공익적 제안을 모아서 현실에서 실현시키려는 노력을 가울였다. 스스로 절망을 치유할 수 있는 힘을 가진 보통사람들의 생각을 모아서 꽃이 피어나도록 하는 사회창안센터의 기본 정신은 뿌리센터에서 더 분명하게 드러난다. 지역의 생생한 목소리들이 세상에 널리 퍼져나가도록 한 '박원순의 지역순례', 지역 사회에서 가꾼 새로운 희망들이 널리 알려지도록 한 '지역희망찾기 연구공모'는 희망제작소가 우리 사회의 여기저기를 연결시켜 주는 소통과 희망의 매개자임을 잘 보여준다.

잘 엮어진 생각이 희망을 가져다준다. 생각을 나누고 모을 때 희망이 만들어진 다. 끊임없이 생겨나는 사회문제를 놓고 시민들과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토론하 고 정책대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대안센터의 '희망모울'은 단순히 대안 발견을 위한 토론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연구단위를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세계도시라이브러리'는 우리의 일상생활 공간을 되돌아보게 하고 다채로운 삶을 꿈꾸게 만들어준다. 희망아카데미는 지역자치단체의 장과 의원, 지역의 공공리더가 지식과 덕목을 서로 배울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교육의 장을 열었다.

더 직접적으로 공공문화센터는 개인들이 만나고 살아가는 우리 삶의 터전을 상상력과 창조적 에너지가 넘쳐나는 문화의 공간으로 바꾸려고 노력한다.

사회 디자이너와 싱크탱크 운동

사회의 변화를 위해 희망제작소는 시민들과 함께 하면서도 시민들의 생각을 넘어서려고 한다. 자연히 새로운 사회를 구상하는 사회 디자이너라는 개념은 처음부터 주목을 받았다. 그런데 희망제작소에서 일하는 사회 디자이너들은 현장과 지역에서 시민들과함께 새로운 사회를 위한 정책대안들을 만들 뿐만 아니라 실천을 통해 대안의 실현을 추구한다. 그들은 기획자이자 연출자이다. 이런 의미에서 희망제작소는단순히 '대안정책 연구소'가 아니라 '행동하는 두뇌집단'을 지향한다. 희망제작소는 '싱크탱크 운동' 단체이다.

싱크탱크 운동을 통해 사회를 변화시키려고 할 때, 희망제작소는 우리 사회의 문제들을 될 수 있는 한 하 나라도 놓치지 않고 다루어야 한다. 사회 변화가 존재 이유라고 할 수 있는 사회 디자이너는 작고 사소한 문 제에서 크고 중대한 문제까지, 경제 문제에서 민주주 의 문제까지, 지역의 문제에서 국가 차원의 문제까지, 사회의 모든 문제들을 끌어내고 다루려고 한다. 각각의 사회 디자이너들이 끌어낸 문제들을 효과적으로해결하기 위해 희망제작소는 문제를 다룰 사람들을조직하고, 그들이 해결 방안을 찾아내도록 도와주고, 그리고 마침내 만들어진 해결책을 들고 사회 속으로들어간다. 조례연구소, 농촌희망본부, 주민참여클리닉, 자치재정연구소, 간판문화연구소, 재난관리연구소, 소기업발전소, 기후·환경팀 등은 희망제작소의관심이 말그대로 우리사회 전분야에 걸쳐 있음을 보여준다.

희망제작소의 사회 디자이너들이 우리 사회의 전 분야에 눈을 돌릴 때, 두 개의 다른 철학이 그들의 싱 크탱크 운동을 뒷받침한다. 한편으로, 희망제작소는 거시 담론보다 작지만 실현가능한 아이디어를 내어놓 고 현실화하는 데에 주력한다. 실용의 철학, 실시구사 의 정신에 따라 사회 디자이너는 생활 속의 경험에 기 초한 지혜를 현실적인 정책으로 승화시킨다. 다른 한 편으로, 희망제작소는 종합연구를 지향한다. 사회문 제들은 상호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분석과 해결 방안이 필요하다. 실용과 종합, 이 두 원칙은 희 망제작소가 3 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에 많은 다양한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다루는 싱크탱크로 발전할 수밖 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해 준다.

희망제작소의 꿈과 현실

"사실 희망제작소가 가는 길은 전인미답의 길이다. 이론연구에 몰두하는 통상의 싱크탱크와 많이 다르고, 길거리에 나서서 시위하는 시민단체와도 많이 다르다. 조사와 연구는 하지만 실증적이고 실천적이라는 점에서 다른 연구소들과 차별성이 있고, 포지티브 사회 디자이너는 우리의 구상된 행동을 통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다. 다른 모든 디자인과 마찬가지로 사회 디자인은 현재의 상태를 보다 나은 상태로 변화시키려고 한다.

> 한 대안을 만들고 정부·기업들과 협력하여 거버넌스를 실천한다는 점에서 시민 단체와 차별성이 있다. 무엇보다도 희망제작소는 세상이 관심을 두지 않거나 소 홀한 영역을 찾아서, 아무도 시도해 보지 않은 방법으로 세상을 바꾸어보려는 야 심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런 일이 어디 쉬운가(2007 희망이야기: 희망제작소 2007 애뉴얼리포트, 7쪽)." 박원순 상임이사가 시민의 요구와 소망을 담아내는, 시민에 의한 자유롭고 독립적인 민간 싱크탱크인 희망제작소의 깃발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들고 나아가겠다는 꿈을 밝히는 선언이다.

> 지난 3년의 성과를 되돌아볼 때, 희망제작소의 꿈은 많은 부분 이미 현실에 내려와 있다. 시민과 지역에서 출발하여 실용적 연구와 현실적 대안을 내어놓는다는 원칙은 결코 흔들리지 않고 있으며, 정책대안의 실현을 통해 사회를 변화시킨 다는 목표도 작지만 의미 있는 결실들을 맺고 있다. 사회창안 캠페인의 꾸준한 추진, 아름다운 간판 및 거리 만들기 운동의 확산, 지역자치단체를 포함해서 여러 기관들에 대한 컨설팅, 지역홍보센터 운영, 사회적 기업 창업 아이디어 대회, 국내외 싱크탱크를 연구·소개하는 글로벌 브레인 투데이 프로젝트, 다양한 주제와 규모의 학술회의·정책토론회 개최, 활동과 연결된 다양한 출판 사업 등은 희망제작소의 활동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여러 종류의 아카데미 활동을 통해서 공공리더의 교육과 사회 디자이너의 육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인 것도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퇴직자들이 민간비영리단체에 참여해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제2의 인생을 설계하도록 도와주는 '해피시니어 프로젝트'는 희망제작소의 창의력과 원칙이 돋보이는 사업이다.

이러한 활동의 확대와 성과에도 불구하고 희망제작소가 부딪치고 있는 어려움 은 결코 간과할 수 없다. 재정의 어려움은 희망제작소가 시민에 의한 독립적인 싱 크탱크를 만드는 일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시민들이 아이디어뿐만 아니라 마음(마음과 돈은 함께 간다!)까지도 내어놓도록 하는 일은 참으로 어렵지만, 희망제작소의 싱크탱크 운동이 성공하려면 시민들의 가슴속까지 좀더 파고들어야만 한다. 물론 이러한 희망제작소의 재정적 한계는 우리 시민사회의 한계이기도 하고, 또한독립적인 민간 싱크탱크가 여전히 성장하지 못하는우리의 현실은 기업가 문화와 정치사회・국가의 후진성을 보여주기도 한다.

그렇지만 이런 반성은 필요할 것 같다. 참여와 지역, 실용과 종합의 원칙에 기초하여 아래로부터 만들어진 정책대안을 다양한 분야에서 제시하려고 하였지만, 희망제작소가 만들어내는 정책대안들이 우리의 현실 에서 충분한 주목을 받지 못하는 어떤 이유가 있지 않 았을까? 혹시 참여와 실용이라는 이름으로 이론이나 이념이 경시됨으로써 오히려 정책대안의 현실적 가치 나 영향력, 매력이 줄어들지는 않았는가?사회의 근본 적 변화를 추구하는 사회 디자이너들은 반드시 '세상 이 관심을 두지 않거나 소홀한 영역을 찾아서' 아래로 내려가야 하지만, 때로는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 는 국가 차원의 문제에 대해서도 분명한 대안을 내어 놓아야 하지 않을까? 경제와 민생의 위기, 민주주의의 위기를 맞아서 사회 디자이너들은 미시적 차원이나 중범위의 정책을 넘어서는 거시적 차원의 국가정책이 나 사회담론을 대안적 관점에서 내어놓아야 하는 과 제에 직면해 있지 않은가? 어쩌면 바로 이러한 노력을 통해 희망제작소는 우리 사회의 문제 전반에 대해 진 정한 종합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종합연구소로 발전해 나가면서, 또한 현재 분산되어 있는 다양한 활 동들을 점차 일관성 있는 하나의 체계로 묶어낼 수 있 을지도 모른다.

사회 디자이너라는 직업을 위하여

사회 디자이너는 우리의 구상된 행동을 통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다. 다른 모든 디자인과 마찬가지로 사회 디자인은 현재의 상태를 보다 나은 상태로 변화시키려고 한다. 당연히 사회 디자이너는 사회가 추구해야 할 가치와 발휘해야 할 기능을 현실에서 실현시켜 줄 새로운 질서나 제도를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사회 디자이너는 변화를추구한다는 점에서 현실에 대해 비판적이고 이상을추구하는 경향을 가질 수밖에 없지만, 새로운 질서나제도가 실제 세계에서 효과적으로 구축되어 작동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점에서 실용적이고 현실적이어야한다. 희망제작소의 사회 디자이너들도 당연히 이러한 양면적 성격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사회 디자인의 양면적 성격을 인정할 때, 희망제작소의 사회 디자이너들은 각자가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서로 소통함으로써 공유된 가치체계를 가질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자신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영역뿐만 아니라 다른 영역의 질서나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임으로써, 사회질서나 사회제도가 전체적으로 일관성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는 구상을 개별 질서나 제도의 차원에서 내어놓을 수 있어야 한다. 개별 사회 디자이너들의 이러한 노력은 희망제작소가 내어놓는 정책대안들 전체의 안정성과 현실성을 훨씬 더 높여줄 것이다. 희망제작소 내부의 소통이 매우 중요하다.

현재 희망제작소의 구성원들은 사회 디자이너로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가? 사회 변화를 꿈꾸는 싱크탱크 운동이 때로는 운동에, 때로는 싱크탱크에 치우칠 수 있다고 한다면 현재 희망제작소의 구성원들은 스스로 정책대안을 만들어내는 노력보다는 연구단위의 조직에, 아카데미에, 포럼과 세미나에 시간을 너무 쏟고 있지 않은가? 희망제작소가 장기적으로 사회 변화를 추구하는 사회 디자이너들의 공동체가 되기위해서는 균형을 잡을 필요가 있다. 이러한 균형은 희망제작소가 추구하는 싱크탱크 운동의 미래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미래를 짊어지고 갈 공공리더들인 사회 디자이너들의 발전과 양적 확대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디자인이 끝없이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라면, 사회 디자이너들에게도 사회 변화의 끝은 없다. 끝없는 길을 걸어가는 희망제작소의 사회 디자이너들 모두에게 몸과 마음의 평화가 함께 하기를!*****

박순성 교수는 프랑스 파리 10대학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 개발연구원 연구원,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을 거쳐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소장을 지냈으며, 현재는 동국대학교 북한학과에 재직 중이다.

희망제작소 3년을 바라보며 -싱크탱크로의 길

정 건 화

한신대 경제학과 교수

글을시작하며

'외부에서 바라본 희망제작소 3년' 이라는 글을 청탁받았다. 스스로 희망제작소의 외부에 있다고 생각한 적이 별로 없어 적절한 필자인가 고민하다 응했다. 외부자의 시각이란 우선 '내부사정을 잘 모른다'는 배려 뒤에 언제나 숨을 수 있기에 편한 면이 있다.

'외부에서 바라 본다'는 것은 관찰자가 된다는 것이며 관찰대상과의 '거리두기'가 필요하다. 필자는 현재의 희망제작소와 처음 '아이디어 차원에서 구상되던' 희망제작소를 비교함으로써, 공간적 거리두기와는 다른 '시간적 거리두기' 방식을 통해 희망제작소 3년 좌표 상의 궤적을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서 인용하는 아이디어 차원의 희망제작소 구상은 상임이사의 메모파일임을 밝혀둔다.

한국사회와 희망만들기 프로젝트: '21세기 한국희망 제작소'

한 사람의 머릿속에서 싹터서 메모를 통해 기록되며 다듬어진 어떤 생각이 세상 밖으로 나왔다. 그 메모파일의 제목은 'THINK-TANK 21세기 한국희망 제작소 - 희망만들기 PROJECT' 였다. 희망제작소라는 이름도 단지 약칭으로만 고려되던 즈음, 메모파일의 첫 장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2004/12/25 밤 혼자서 외롭게 오랜만의 고민2005/3/19 다시 PALO ALTO 집에서 온 종일2005/3/20 MICHIGAN UNIV, INN에서 밤늦게 다듬다

그로부터 1년의 시간이 지난 2006년 3월27일 마침내 희망제작소는 세상 속으로 나왔고 또 3년여의 시간이 흘렀다. 그것은 새로운 실험이었고 우여곡절을 겪으며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실험이다!

희망을 제작하겠다고?

희망제작소란 이름을 처음 들었을 무렵의 느낌이다. 서로 어울리지 않는 두 단어, '희망' 과 '제작'의 조합이 묘한 느낌을 주었다. 희망은 감성적이고 정신적인활동, 가슴에 품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정적인 자세와 태도를 연상시킨다. 반면 제작이란 말에서는 집단공정, 물질적이고 기계적인 정교함을 갖춘 행위, 동적이며물적 구체성이 떠오른다. 가슴에 품거나 먼 미래의 실현을 기다리지 않고, 희망을목적의식적이고 집단적으로, 머리만이 아니라 몸을 움직여 구체적으로 만들어 내겠다는 뜻인가?

그런 추측은 틀리지 않았다. 나중에 우연히 보게 된 메모파일 속에는 '총론만 있고 각론이 부족한 사회, 거대담론과 추상담론이 주도하고, 주장과 슬로건이 난 무하지만 실무적이고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정책이 없는' 현실에 대한 반성과 비판이 가득 들어있었다. 공허한 원칙론적 수준의 대안만으로는 안 되며 실행가능하고 작동되는 대안이 필요하다는 생각, 과대 성장한 국가와 과잉 발전한 시장 외에 제3섹터의 발전이 지체됨으로써 우리사회 전체의 발전이 발목 잡혀 있다는 생각 등이 개진되어 있었고 전적으로 공감했다.

주변의 반응도 나쁘지 않았다. 한때 풍미하던 '진보' 개혁' '대안' 등의 과학적인 용어 대신 왜 '희망' 인가 라며 '나이브' 하고 '감상적' 이라는 코멘트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그다지 힘이 실리지 못했다. 그만큼 변화된 세상을 반영하는 것으로 여겨졌다. 오히려 그 이름은 신선했고 어디로도 열려 있어 상상력을 발동시킬 수 있는 자유로움조차 느껴졌다. 그런 느낌은 문민정부-국민의 정부-참여

정부를 거치는 동안 이른바 우리사회의 민주-개혁-진보진영이 성취한 성과와 노정한 한계에 대한 자기 성찰에서 나오는 것이란 생각도 들었다.

IMF 경제위기 이후 우리 사회에는 소리 없는 절망이 깊어가고 있었고 대안에 대한 목마름은 절실했다. 희망은 단순히 가슴에 품는 것만으로는 안 되며 좀 더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만들어야 하겠다는 문제의식을 지난 희망제작소의 출범을 당시 내 주변의 사람들은 꼭필요하고 소중한 실험으로 받아들였다.

희망제작소구상

새로운 밀레니엄이 시작된 2000년대 초, 당시 싱크 탱크에 대한 논의는 마치 유행처럼 여기저기서 이루 어졌다. 유명한 해외 싱크탱크들에 대한 관심도 높아 졌고 우리 사회 민간 싱크탱크의 부재, 시민운동의 분 화 혹은 전문화를 통한 시민사회 싱크탱크의 형성가 능성을 모색하는 논의도 진행되었다. 그런 중에 '박원 순 변호사가 싱크탱크를 만들려 한다'는 얘기는 너무 도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되었고 기 대와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다.

희망제작소 구상에서 벤치마킹한 것은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 사회의 두뇌집단 혹은 싱크탱크였다. 이 글에서 인용하는 상임이사의 '메모파일'에는 미국, 영 국, 일본의 유수한 싱크탱크에 대한 자료와 기록들이 상당 분량으로 쌓여있었다. 그런 점에서 모두들 희망 제작소의 출현을 싱크탱크라는 프리즘과 잣대로 해석 했음은 자연스러웠다.

싱크탱크는 다학제적(multi-disciplinary) 이론가들이 나 지식인들이 정책분석이나 정책제언을 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두뇌집단의 집합체를 말한다. 특 히 싱크탱크는 전쟁수행을 위한 전문가그룹, 선거 입후보자나 공직자의 고문단 등에서 출발했으며 국가기구와 국민, 나아가 이익집단들 사이에서 공공정책의생산·홍보·집행 과정에 개입하는 전문가조직이다(황윤원, 2006, 박순성, 2006).

그동안 우리사회에서 제대로 된 싱크탱크는 정부와 기업에만 존재할 수 있었다. 우리 사회의 여건 상정부와 기업의 주도나 후원이 없이 시민사회 스스로 싱크탱크 설립과 운영을 위한 재원과 전문 인력을 확보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다. 시민사회가 해왔던 일상적이고 관성적 대안은 작은 규모로, 아마추어적 품앗이로 과제별, 사안별, 한시적 싱크탱크 풀을 가동하는 것이고 그것은 이미 우리사회 시민사회단체에서 지난 수십 년간 지속해온 방법이기도했다. 그 방법의 핵심은 대학이나 연구소에 몸담고 있는 연구자들의 헌신과 자원봉사였다.

1980년대 말에서 1990년대 중반까지 이러한 방식의 활동이 학술단체운동이란 이름으로 활발하게 전개되었지만 이후 사회의 전반적 보수화 흐름에서 이런 활동의 흐름은 빠르게 퇴조하였고, 지식인의 전문성에 기초한 사회참여는 '엔지오적 성격과 인스티튜트적성격의 미분화' 상황으로 묘사되며 지속되고 있다 (홍일표, 〈한겨레신문〉 2008년 12월 28일자)

단지 재원만이 문제는 아니다. 우리사회가 '희망'을 '제작' 해야 할만큼 새로운 대안에 목말라 하고 있다면 그것은 기존 전문가, 지식인 집단의 대안제시 능력이 한계에 부딪혔음을 의미한다. 박순성(2006)의 설명을 빌면, 민주화 이후 두 번에 걸쳐 창출된 개혁적 정권은 진보적 시민·사회운동에 뿌리를 두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를 진보적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데에서 기대한 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이러한 국

희망제작소 구상이 싱크탱크라는 용어로 표현되고 있지만 '학자나 지식인들로 구성된 두뇌집단의 집합체'를 의미하는 통상적 싱크탱크와는 애초부터 다른 구상일 수 있음을 말해준다.

가경영 역량의 부족은 진보·개혁세력 전체에게 중대한 한계로 등장하였으며 특히 현재 한국 사회가 다양한 현안과 과제에 직면해 있으면서도 사회발전에 대한 설득력 있는 전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그 한계는 더욱 분명해 보였다.

희망제작소 3년의 현실

희망제작소 3년을 돌아보니 너무나 많은 일을 했다! 지방자치단체, 대학, 시민 단체, 정부부처와 정부산하기관, 심지어 많은 언론사나 기업들조차 희망제작소 와 이런저런 방식으로 공동사업이나 협력 프로그램을 제안하고 실행했다. 나는 연간 40여억 원의 경상비를 지출하며 80여 명의 연구 인력이 움직이는 조직이 3년간 유지되고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 즉 '희망제작소 실험이 3년간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실험은 성공적이며 긍정적 평가를 위한 일차조건은 충족되었다고 보는 편이다.

그러나 희망제작소 실험에 대한 진정한 평가는 오늘날 한국의 시민사회가 부딪힌 한계와 과제를 전혀 새로운 방법으로 넘어서는 혁신과 창의성을 보여주었는가 여부에 대한 판단으로부터 주어져야 할 것이다.

오늘날 진보진영이나 시민사회도 관성과 기득권 구조에 갇혀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그 어떤 집단도 자기개혁과 변화에 소극적이면 고여서 정체되어 마침내 거대한 기득권 구조를 구성하는 이익집단으로 변질될 수 있음을 주변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진정한 시장의 효율성은 경쟁을 통해 담보되고 경쟁의 장점은 혁신을 가능케한다는 데 있다. 진입장벽이나 특권과 담합에 기초한 지대(rent)는 사회 내 생산된부가가치를 재분배할 뿐인데 비해 혁신은 초과이윤의 원천이 되는 새로운 가치를 만들고 새로운 부를 창조해낸다. 그런 점에서 혁신(innovation)은 시장에서만이 아니라 국가나 시민사회에서도 중요하다. 시민사회의 혁신능력이 제고되지 않은 이

상 우리사회 발전의 진정한 대안은 기대하기 어렵다.

희망제작소 실험은 시민사회의 능력을 혁신하고 활동 영역을 넓혀서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를 업그레이 드하려는 목표를 지녔다.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이 문제이며 희망제작소 실험은 여기에서 최소한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한다. 희망제작소 실험은 혁신과 창의성이란 측면에서 시민사회에 큰 자극을 주었다고 보기 때문이다.

나는 희망제작소 출범 때 제시한 '희망 한국 만들기'의 오픈소스(open source)에서 그 해답을 보았다. 시민사회 내 싱크탱크 구상이 직면한 '절대적 자원부족' 이라는 제약조건을 넘어서는 길이 창의적으로 제시되어 있었다. 그것은 철저히 리눅스 방식이었고 그기본 플랫폼은 사회창안(social invention)이었다. 이를 편의적으로 영국의 사회창안연구소(Institute for Social Invention) 모델이라 부르기로 한다. 이를 통해 문제의식과 대안에서 상상력이 고갈되고 능력의 한계를 드러낸 기존 진보진영의 시민사회운동단체, 지식인 대신 대중들의 일상적 삶과 생각에서 변화의 길과 힘을 발견하고자 한 것이다.

메모는 이렇게 적고 있다.

시민들의 삶 속에 지혜가 있다 - OHMYNEWS식 THINK-TANK

누구나 연구자가 된다 -누구나 자신의 전문영역과 고유한 경험·지식을 갖고 있으며, 연구자·지식인에 경계와학력의 차별이 없고, 어려운 논문을 위해 격식과 형식을 갖추지 않아도 되며 자신의 아이디어와 생각을 자유스럽게 정리하는 지혜의 대중화와 대중적 이용의 시대를 연다.

희망제작소 구상이 싱크탱크라는 용어로 표현되고 있지만 '학자나 지식인들로 구성된 두뇌집단의 집합체'를 의미하는 통상적 싱크탱크와는 애초부터 다른 구상일 수 있음을 말해준다. 메모파일의 표현을 빌면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시민의 THINK-TANK'라 할수 있다. 소셜디자이너(Social Designer), 지혜창고, 사회창안, 소기업발전소, 해피시니어, 글로벌 브레인 투데이, 호민관클럽, 시장학교 그 외 여러 연구소, 지역홍보센터 등 지금까지 희망제작소의 활동방식, 조직체계나 사업 등에서는 혁신적이고 획기적인 오픈소스 방식의 기획들이 대부분이다.

물론 희망제작소 재정의 상당 부분이 기업후원이고 또 그 상당 부분이 박원순 상임이사의 헌신적 노력과 그가 지닌 사회적 명성에 힘입은 바 크지만 그것이 일 회적이 아니고 지속되게 한 것은 창의적 플랫폼에 기 초한 희망제작소의 집단적 땀과 노력의 성과였다고 해야할 것이다.

현재 희망제작소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 중 대학에 몸담고 있는 전문 연구자는 그다지 많지 않다. 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그들은 결코 현재 희망제작소 활동의 주역이 아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고 기존의학문, 담론이 지닌 한계를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지만가장 주된 이유는 희망제작소의 활동방식과 내용 자체가 지닌 특성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연령과 근속연수만으로 보자면 믿기지 않을 정도로 약관의 연구원들이 수행하고 있는 새로운 활동방식과 성과는 그자체로 연구대상이 아닐 수 없다.

3중의 플랫폼과 싱크탱크로의 전망

그렇다면 희망제작소는 어떻게 작동하고 있나? 희

망을 '제작' 하겠다는 초기 구상은 어떤 제작공정으로 구체화되어 실현되고 있나? 애초 희망제작소 구상은 온라인의 속성과 장점을 활용하는 사회창안 플랫폼, 국 가경영과 공공정책 결정에 영향력을 미치는 오프라인 부르킹스 플랫폼, 그리고 여기에 부차적으로 수익성이 고려된 컨설팅 플랫폼 등 3중의 플랫폼으로 구성된 기획이라 할 수 있다. 이들 세 플랫폼은 상호보완적 작용을 하면서 희망제작소 3년을 끌어왔다. 3중의 플랫폼은 궁극적으로 '주요연구부서의 책임자 또는 간사로서 풀타임 연구원이 채용되고 주요 연구세미나 및 성과물이 출판' 되는 Off-Line Hardware 싱크탱크를 지향하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다 (그림 1 참조). 〈그림 1〉에 따르면 희망제작소 구상은 궁극적으로 '총합적 싱크탱크로서의 위상을 가지며 집중 포커스 영역을 갖는' 부르킹스 모델을 지향하고 있다.

사회창안 플랫폼은 현재 희망제작소의 전체 모습과 성격을 관통하는 플랫폼이라 할 수 있다. 컨설팅 플랫폼 또한 공공디자인과 희망아카데미 등을 포함한 지역컨설팅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전문성의 기반을 닦으며 영역을 확장해왔다고 할수 있다. 반면 풀타임 연구자를 중심으로 한 싱크탱크 모델, 부르킹스 모델이라명명된 플랫폼은 시민사회 내 전문연구 및 교육기관으로의 발전을 상정한다. 대안센터, 우리시대 희망찾기, 희망모울 등의 조직과 프로그램이 여기에 속한다고할수 있는데, 가장 취약한 플랫폼이고 또 앞으로 발전 경로도 불확실하다는 것이솔직한 느낌이다. 그러므로 희망제작소 3년을 맞아 장기적 목표와 단계별 일정에대한 분명한 점검과 새로운 전략의 모색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애초에 컨설팅 플랫폼이 중요한 활동방식으로 고려되었던 이유도 부르킹스 모델이 만들어지는 데 필요한 제도상황적 기반이 없는 한국의 정치, 경제, 시민사회적 상황에서 민간 싱크탱크가 직면할 재정문제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컨설팅 플랫폼만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며 비단 재정문제만이 아닌 다른 많은 문제와도 연관된 문제이다. 한 마디로 희망제작소의 목표와 지향, 조직체계와 활동방식 전반에 걸친 문제라 할 수 있다.

실제로 희망제작소 사람들은 수없이 다음과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했을 것이다. '희망제작소는 싱크 탱크인가?' 희망제작소의 문을 두드리고 들어온 사람들, 희망제작소를 떠난 사람들, 아침마다 희망제작소문을 열고 들어오는 사람들 모두가 계속 물음을 던져왔고 누구도 명쾌한 답을 내리는 데 주저하는 물음이다. 그 주저함의 근저에는 지난 3년간 전문적 연구, 교육역량을 축적하기 위한 조직적, 체계적, 개인적 노력들을 얼마나 했으며 이런 역량의 축적을 준비하고 강화할 제도적, 환경적, 재정적 기반은 얼마나 갖추어 왔는가에 대한 확신의 부족이 있다.

지난한 일이다! 그러나 희망제작소의 초기목표에 비추어본다면 결정적인 중요성을 갖는 문제이다. 희망제작소 내부의 전문적 연구역량은 매우 중요하다. 아이디어 수준에서 끊임없이 제안되는 사회창안이란 것도단지 팬시용품점이나 잡화점처럼 많은 아이템들을 늘어놓을 것이 아니라면 어떤 것은 가볍게 사회 이슈로제시하고 또 어떤 것은 법안에 이르기까지 구체화할것인지를 판단하고 선택해야 한다. 그러한 선택은 우리사회 전체의 상황 및 구조와 조응하는 것에 대한 이해와 판단을 요구하고 이를 위해서는 훨씬 넓은 정보와 깊은 지식을 필요로 한다. 공공 컨설팅 역시 장기적으로는 기획의 참신성과 인력의 희소성, 명망성에 기대지 않고 희망제작소 고유의 묵중하고 체계적이며 철학과 비전을 갖춘 전문가를 키워내야 할 것이다.

싱크탱크란 궁극적으로 국가운영의 정책 전반에 대해 발언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조직과 활동의 집합체이다. 사회 창안이라는 보석 같은 아이디어 구슬 서말이 꿰어져 나라 전체를 재설계하기 위한 미시적 기초(micro foundation for macro theory)가 되게 하려면 국가경영, 공공정책에 대한 거시이론적 관점을 필요

| **그림 1** | 21세기 한국희망제작소 구상

4장. 활동 DESIGN-BROOKINGS MODEL

1 개관

(1) 조직개관

지혜창고본부(시민지혜)-ON-LINE 사업 - 영국사회창안연구소 업무

연구본부 - HARD-WARE-미국 BROOKINGS업무

컨설팅본부 - 수익사업 - 일반 컨설팅회사 업무

연구지원본부 – 도서관/MAN-POWER MAP

(2) 조직목표

- 조직체계 SFTTING 2005년
 - 2005년 하반기 안에 독립적 사단법인체로 등록
 - 최소한의 상간사 확보 5~10명
 - 최소한의 공간 확보- 50~100여평

사무국 - 총무/재정/홍보

- 최소한의 기금 확보 2~3년간의 안정적인 운영기금 확보
- 단계별 목표 3단계로 설정 2006년

1단계 - CYBER시민의 THINK-TANK로서의 희망제작소

1.WEB-SITE설계 및 실행, 운영

2.지혜모음 및 시상

2단계 - NETWORKING THINK-TANK로서의 희망제작소

- 1. 전국의 주요 연구인력,전문가그룹/지혜담지자 정보수집
- 2.ON-LINE & OFF-LINE CARDIFICATION
- 3단계 OFF-LINE HARD-WARE THINK-TANK로서의 희망제작소
 - 1. 주요연구부서의 책임자 또는 간사로서의 연구원 채용
 - 2. 주요 연구세미나 및 성과물 출판

(3) 연구조직

- BROOKING 사례
- 총합적 THINK-TANK로서의 위상 갖되 집중 FOCUS 영역을 갖는다.

출처 : 박원순(2005)

로 한다. 원래 희망제작소는 그것을 하기 위해 구상되었던 것 아닌가? 희망제작소의 full name도 '21세기 한국희망 제작소' 이며 그 취지문 역시 한국사회에 대해절절한 애정을 담고 있다.

미래에 대한 통찰력을 가진 소수의 도덕적 리더들이 대중의 지혜와 열망에 불을 지펴 그 대중과 함께 후진된 이나라의 구석구석의 먼지를 털어내고 보살피면서 그 사회운영의 모든 시스템을 혁신하고 좋은 제도를 도입.정착하고 사람들의 마음과 의식을 바꾸고 그 지식과 지혜를 넓혀간다면 우리는 불과 20-30년 안에 나라의 통일은 물론이고세계 최고의 정치와 경제, 사회와 문화의 수준을 가지게 될

중요한 것은 분명한 좌표의 설정과 조직운영의 전문화라는 생각이 든다. 먼저, 시민사회의 역량과 혁신능력을 제고하는 목표를 견지하되 희망제작소의 궁극적 도달점이 부르킹스 모델이라는 공공정책과 거시담론 위주의 싱크 탱크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것이다. 열정과 신바람을 가진 우리 민족구성원이 얼마든지 해 낼 수 있는 바램이고 소망이다. 21세기 한국희망 제작소는 바로 그런 바램과 소망을 달성시켜가는 희망의 엔진이기를 자입한다. 박원순 상임이사 메모파일에서

앞으로 3년, 무엇을 할 것인가?

원래 실험이란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으며 검증된 매뉴얼도 없고 때로 우왕좌왕하며 시행착오를 겪는 과정이다. 지난 희망제작소 3년의 실험도 그러했을 것이다. 실험을 통해 분명 희망을 확인했고 어쩌다 간혹 수공업적으로 만들어내기도 했지만, 희망의 제작은 여전히 요원한 과제이다.

앞으로는 어떨까? 우리 사회를 보면 정치, 경제, 사회문화, 남북관계 모든 면에서 적나라한 '퇴행적 양상'이 나타나고 있고 세계로 눈을 돌려도 '1930년대 대공황의 공포'가 전세계에 드리워져 있다. 올해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폴 크루거만의 최근 저작의 제목이 '불황의 경제학(Economics of Depressions)'이듯 앞으로세계경제는 한동안 깊고 긴 불황의 터널속에 갇혀있을 전망이다.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심각할 정도로 높은 한국경제에 그 여파는 직접적으로 올 것이다. 결국 우리사회는 앞으로 상당기간 퇴행과 불황의 늪에서 신음할 가능성이 높다.

긍정적 측면도 있다. 시장의 전능함에 대한 환상이 깨지고 시장의 악마적 전횡에 대한 규제가 생겨난다면 말이다. 좀 더 길게 보면 국가의 새로운 역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만들어질 수도 있다. 그런 가운데 21세기 국가-사회적 과제에 대응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시민사회의 협력(거버넌스) 모델이 주목받을 것이며 희망제작소의 실험과 성과는 중요한 레퍼런스가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몇 년간은 '생존' 자체가 절박한 과제일 수도 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의 시민사회에서 어떤 형태로든 싱크탱크를 만들어 뿌리내리 는 일은 정말로 지난한 과제가 될 것이다. 과거 많은 단체들이 만들어지고 문을 단은 경험에서 볼 때 '만들기는 쉬워도 유지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돈과 사람이라는 두 자원을 유기적으로 엮어서 조직을 유지하고 확대하는 것, 두 바퀴의 자전 거가 멈추지 않고 계속 길을 가게 하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과제이다.

그렇다면 희망제작소의 앞으로 3년은 어떤 전략을 필요로 하는가? 솔직히 말하면 개인적 차원의 고민은 여기서 멈춰서 있다. 길게 보면 희망제작소는 시민사회 내 부르킹스 모델로 발전해야 하고 나아가 영국의 데모스와 같은 싱크탱크가 되었으면 하는 소망을 갖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몇 년의 상황을 고려할 때 단기적으로 그런 전망을 당장 실현할 길은 없으며 그 준비 또한 녹녹한 일이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어느 경우든 중요한 것은 분명한 좌표의 설정과 조직운영의 전문화라는 생각이 든다. 먼저, 시민사회의역량과 혁신능력을 제고하는 목표를 견지하되 희망제작소의 궁극적 도달점이 부르킹스 모델이라는 공공정책과 거시담론 위주의 싱크탱크가 아닐 수도 있다는생각이 든다. 'Think&Do Tank',' 지역개발을 위한 공공컨설팅과 교육 '으로 특화된 사회적 기업(social enterprise)도 대안이 될 수 있다. 많은 논의와 고민이필요한 무제다.

다음으로 전문가 조직에 걸맞은 조직운영과 제도상의 효율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조직운영의 전문화, 효율화는 어떤 목표를 설정하더라도 필요한 과제일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기업에 대해서 불필요한 오해가 없다면, '자본주의 사회의 기본 세포'이자 가장 경쟁력 있는 조직형태인 기업의 조직과 운영원리를 접목시킬 것을 제안한다.

경제학에서 기업은 '자원을 집중시키고 의사결정을 위계화해서 장기적 관계 하에서 목표를 추구하는

조직'으로 정의된다. 대부분의 기업에서 목표란 이윤 창출이지만 '사회적' 기업의 목표는 공동체적 가치, 예를 들면 복지와 고용의 연계 등이 될 수 있으며 희망 제작소 소기업발전소나 해피시니어 프로젝트는 이미 그런 전망을 갖고 이행을 모색하고 있지 않은가!

지금까지 그 실험실 바깥에서 두리번거리던 한 사람의 시선으로 떠오르는 생각들을 두서없이 얘기했다. 글을 마치는 순간에 떠오르는 글이 있다. 희망제작소 사람들이 좋아하는 글이기도 하거니와, 스스로의 좌표를 점검할 때마다 희망제작소 사람들 모두가 서로에게 읽어주고 음미할 내용이란 생각에 다시 인용해본다.*

희망이란 본래 있다고도 없다고도 할 수 있다.

그것은 마치 땅 위의 길과 같은 것이다.

본래 땅 위에는 길이 없었다.

걸어가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 곳이 곧 길이 되는 것이다.

- 노 신

참고자료

- 박순성, 2006. 싱크탱크를 통한 대안사회 만들기 희망제작 소를 중심으로, 희망제작소 창립기념 심포지엄 발표문.
- 박원순, 2005. THINK-TANK 21세기한국희망제작소 희망 만들기 PROJECT (메모자료)
- 황윤원, 2006. 한국의 싱크탱크 현황과 과제, 희망제작소 창립기념 심포지엄 발표문.

정건화 교수는 서울대 경제학과에서 노동경제학을 전공했다. 현재 한신대학교 사화과학대학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MB 1년, 한국정치와 민주주의

정부 구성과 국정운영의 실패 이외에도, 이명박 정부는 집권 1년의 기간 동안 국민과의 소통 에도 실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선 과정에서 압승을 거두었다 할지라도 집권 이후 국민 과의 지속적인 소통은 대통령 국정운영에 있어 없어서는 안 될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정 해 구 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

2007년 12월 19일 제17대 대통령선거에서 한나라 당의 이명박 대통령 후보는 48.67%의 지지율로 대통 령에 당선되었다. 과거 집권세력이었던 대통합민주 신당의 정동영 후보가 26.14%의 지지를 얻었던 점에 비추어본다면 이 같은 지지율은 한나라당 이명박 후 보의 압승이 아닐 수 없었다. 뿐만 아니라 같은 대선 에서 한나라당과 선진자유당 등의 보수 정당들은 투 표자의 약 2/3의 지지를 획득하였던 반면, 대통합민 주신당과 창조한국당 그리고 민주노동당 등의 개 혁 · 진보진영의 정당들은 그 1/3만의 지지를 얻었다. 그런 점에서 제17대 대선 결과는 보수진영의 압승과 개혁 · 진보진영의 완패를 보여주고 있었다.

이 같은 압승을 바탕으로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 이 제 막 1년의 시간을 보냈다. 1년이 갓 지난 지금의 시 점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지지도는 30% 초반에 걸쳐있다. 집권 초반기의 지지도로서는 초라하기 그지없는 성적이 아닐 수 없다. 그래도 이 같은 지지도는 지난 해 촛불시위 때의 10~20%대의 그것에 비한다면 다소 상승한 결과라 할 수 있었다. 집권 말기에나 있을 법한 이 같은 지지도 추락이 이 처럼 빨리 집권 초기에 야기된 이유는 무엇인가? 특 히 정치적인 측면에서 이 같은 사태가 야기된 원인은 무엇인가?

정부 구성과 국정운영의 실패

무엇보다도 이명박 정부의 첫 정치 실패는 새 정부 구성의 인사정책에서부터 비롯되었다. 즉 이명박 정 부는 내각과 청와대 진용 구성의 첫 인사에서 '강부 자(강남 부동산 부자)' 내각, '고소영(고려대 · 소망 교회 · 영남인사)' 내각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했다. 특권층 편향적이고 사적인 특정 인맥 중심의 이 같은 내각 구성은 처음부터 이명박 정부의 성격을 숨김없 이 드러내주었던 것이다. 사실 정부 인사, 그것도 새 정부의 첫 인사는 매우 중요하다. 그것은 국정운영에 대한 그들의 능력 이전에 그 인사 자체가 새 정부의 전반적인 성격과 이미지를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이 다. 이명박 정부의 첫 인시는 새 정부 출범부터 국민



이명박 정부의 첫 정치 실패는 새 정부 구성의 인사정책에서부터 비롯되었다.

들을 실망시켰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실패는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이명박 대통령이 보여주었던 리더십은 또 다른 정치 실패를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그 동안 이명박 대통령이 보여주었던 리더십은 한 마디로 '밀어붙이기' 형 리더십이라 할수 있었다. 과거 건설회사 사장의 경험과 서울시장시절의 청계천 복구사업 등에서 형성되었던 그의 리더십스타일이 새 정부의 국정운영에서도 그대로 반영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리더십스타일은 국정운영에 있어 성공보다는 실패의 원인으로 더 작용했다

우선 위로부터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밀어붙이기' 형의 국정운영은 그 추진 과정에서 항상 '사고' 의 가 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리고 그 '사고' 가 발생할 시 그것은 이에 따른 여러 문제들을 야기시켰던 것이 다. 또한 '밀어붙이기' 형 국정운영은 그 추진 과정에 서 관련 당사자들의 이해관계와 요구를 충분히 고려 하지 않기 때문에 아래로부터 광범위한 비판과 저항 에 직면하기 쉽다. 이명박 대통령의 이 같은 '밀어붙이기' 형 국정운영 사례의 대표적인 경우가 광우병 발생 우려가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결정이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대한 면밀한 고려 없이 경솔하게 이루어졌던 이 결정이 이에 대한 광범위한 시민저항, 즉 촛불시위를 발생시켰기 때문이다.

한편, 이명박 정부는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그 국정 운영에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경제 살리기'를 내세워 집권한 이명박 정부는 집권 초부터 성장 중심의 정책을 추진했다. 그러나 이 같은 정책 추진은 두 가지 점에서 문제를 야기시켰다. 첫째는 미국발 금융위기의 여파 속에서 전 세계로 확산되었던 경제위기에 대해 이명박 정부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점이다. 위기의 도래에도 불구하고 고환율 정책을 비롯한 성장 중심의 정책기조는 우리 경제의 혼선을 야기시켰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성장 중심의 사고는 이명박 정부로 하여금 그 정도가 급속히 심화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양극화에 대해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게끔 만들었다. 그 결과 이명박 정



이명박 정부는 국민과 소통하기보다는 통제하고 억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부의 집권 기간 동안, 특히 경제위기의 도래 속에서 우리 사회의 양극화는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소통의 실패와 신뢰 상실

정부 구성과 국정운영의 실패 이외에도, 이명박 정부는 집권 1년의 기간 동안 국민과의 소통에도 실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선 과정에서 압승을 거두었다 할지라도 집권 이후 국민과의 지속적인 소통은 대통령 국정운영에 있어 없어서는 안 될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이를 통해 구축되는 국민의 신뢰 없이는 그 국정운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집권 1년 동안 이명박 정부가 보여주었던 국민소통의 실상은 다음과 같이 대 국회관계에 있어 서나 대 시민사회관계에 있어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우선 이명박 대통령은 대 국회 및 야당관계에 있어 많은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 대통령제 정부에서 대통 령의 국정 주도권은 매우 강력하며 그것은 제도적으로도 보장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정책을 토론하고 이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행사하는 국회와야당의 역할 또한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그동안 이 같은 국회와야당의 역할을 일방적으로무시했고, 국회를 '통법부' 차원으로, 야당을 국정에대한 '방해꾼' 정도로 간주하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었다. 이를테면 'MB악법'을 포함하여 80여개의 법안을 일거에 통과시키고자 했던 과정에서 야기되었던지난 연말연초의 '입법전쟁'은 그구체적인 사례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국민소통의 실패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있다. 그것은 대 국회 및 야당관계를 넘어 대 시민사회관계에서도 심각한 사태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이명박 정부는 시민사회와 소통을 강화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소통을 차단하고 이로 인한 아래로부터의 비판과 저항을 제어하기 위해 과도하게 공권력에 의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촛

불시위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대처가 그 대표적인 사 례라 할 수 있다. 사실 촛불시위는 국민과의 소통 없 이 미국산 소고기 수입정책을 밀어붙인 이명박 정부 에 대해 국민과의 소통을 요구하는 시민사회의 항의 라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이명박 정부는 앞 에서는 사과를, 그러나 동시에 뒤에서는 이에 대한 물리적 탄압을 강화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국민과 소통을 거부하는 이명박 정부의 이 같은 태 도는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뉴타운사업의 추진과정 에서 편향적인 공권력의 개입과 그 공권력의 성급한 행사는 용산 참사의 비극으로 나타난 바 있다. 물론 '법과 질서' 의 이름으로 행해지고 있는 이 같은 공권 력의 자의적인 행시는 사회적 약자와의 소통을 무시 한 공권력 만능의 처사가 아닐 수 없었다. 뿐만 아니 라 이명박 정부는 자신에게 불리한 여론을 통제 제어 하고 그러한 여론 지형 자체를 변화시키기 위해 공론 장 장악을 위한 여러 조치들을 기도하고 있는데, 구 체적으로 그것은 방송에 대한 정부의 통제 강화와 보 수 매체의 여론 장악을 위한 방송 관련법 개정 파동 으로 이어지고 있다.

국민과 소통하기보다는 이를 통제하고 억압하고자 했던 이명박 정부의 이 같은 태도는 이명박 정부에 대 한 국민의 신뢰를 급속히 추락시키고 있다. 앞에서 언 급한 바와 같이 집권 1년 만에 30%대 초반으로 추락 한 국정운영 지지도는 그 점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 다. 국민 신뢰 상실의 이 같은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 는 보수진영의 전통적 지지층을 결집시키기 위해 우 리사회의 이념적 갈등을 더욱 부추키는 방향으로 나 아가고 있다. 시도 때도 없이 제기되고 있는 '좌파' 논 쟁이나 학문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뉴라이트식 역사 해석에 바탕하여 제기되었던 교과서 개정 파동이나 건국절 파동 등 일련의 이념 논쟁이 바로 그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권위주의화와 정치 환멸의 증대

지난 제17대 대선에서 한나라당의 이명박 후보에 게 압승을 가져다주었던 것은 과거 민주파 정부들이 제대로 이루어내지 못한 것으로 국민들이 판단했던 '경제 살리기'를 그가 전면에 내세웠고, 이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그 지지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명 박 후보가 지닌 부패적 이미지에도 불구하고 국민들 이 그를 대통령으로 선택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이었 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집권 1년이 지난 지금 점차 드러나고 있는 것은 이명박 정부가 '경제 살리기' 에 도 전혀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오히려 우 리 경제는 세계적 경제위기 속에서 심각한 침체의 상 황에 직면해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뿐만 아니라 이명박 정부는 그 동안 나름의 발전을 이루었던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수준조차 후퇴시키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특권층과 특정 인맥 중심의 국정운영과 그런 과정에서 불거졌던 국민소통의 실패가 그러한 결과로 이어졌던 것이다. 이명박 정부 집권 1년을 맞은 지금 이명박 정부의 '역주행' 논란이 자주 언급되고 있는 것은 바로 그 점을 반영하고 있다. 물론 이명박 정부는 이 같은 민주주의의 후퇴를 선진화를 위한 '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 강변하고 있다. 그러나 공권력을 앞세운 '법과 질서'의 강조는 선진화의 표시이기보다는 민주주의의 후퇴에 따른 권위주의화의 또 다른 모습이라할 수 있을 것이다.

민주주의 후퇴의 이 같은 상황과 관련하여 국민들이 이명박 정부에 대해 원했던 것은 민주주의 후퇴가아니라 그 동안 이룩되었던 민주주의의 기반 위에서경제상황을 개선해 달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경제상태의 개선은 고사하고 민주주의조차 후퇴시키고 있는 것이 집권 1년차를 맞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모습이다. 따라서 이러한 현실에서 이명박 정부에 대한 국민의 환멸은 더욱 커지고 있다. 그러나사태는 이에 그치지 않고 있다. 이명박 정부에 대한 환멸과 더불어 여야를 포함한 정치 전반에 대한 환멸도 증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지난 대선 완패에서도 드러난 바와 같이 개 혁·진보세력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매우 약화된 상 태이다. 개혁·진보진영의 정당들이 전체 의석의 1/3 도 획득하지 못했던 지난 제18대 총선의 결과도 개 혁·진보세력에 대한 국민의 낮은 신뢰를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에 대해 국민들의 환멸이 점차 커지고 있다 할지라도 개혁·진보진영의 정치세력들이 그 정치적 대안으로 간주되기는 아직 어려운 상태이다. 즉, 국민들은 점차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는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으면서도 그 어떤 정치세력에 대해서도 그들의 기대와 희망을 걸기 어려운 상태에 처해 있는 것이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한 지지도가 추락함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을 비롯한 개혁·진보진영 정당들에 대한 지지도가 거의 증가하지 않은 것은 바로 그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여론조사는 여야의 어떤 정당에 대해서도 그 지지를 표시하지 않는 무당파층의 증대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역시 기존의 정치 전반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결국 이명박 정부 집권 1년차의 기간 동안 경기 침체와 더불어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가운데, 정부 및정치 전반에 걸쳐 국민들의 실망이 증대하고 있는 것이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적나라한 현실이라 할수 있을 것이다. 물론 우리는 촛불집회 등을 통해 민주주의 추동의 새로운 잠재력이 등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지만 그것이 민주주의와 정치발전으로 곧장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런 점에서현재 한국 정치는 국민들로부터 그 신뢰를 잃어가는한편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내지는 못하는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정해구 교수는 성공회대 사회과학부에 재직 중이고 한국정치연구회 회장을 지냈다. 〈10월항쟁 연구〉 〈6월 항쟁과 한국 민주주의〉 등의 책을 썼다.

예산으로 읽는 한국사회

예산을 교육 또는 신재생에너지사업이나 정보통신사업, 토목사업 어디에 집중 투자하느냐에 따라 한국사회의 성격과 미래는 달라진다. 그렇지만 행정부는 거대한 예산을 국민 공청회 한 번하지 않고 편성한다.

정 광 모 여의도통신 선임기자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지난 2월 26일 부자 증세와 재정지출확대 등 정부 역할을 강화한 예산안을 발표하자 우리나라 한 신문은 1면에 '미, 30년 만에 정책 대전환' 이라는 기사를 올렸다. 이 신문뿐만 아니라 많은 언론이 미국의 예산안을 주목하고 분석 기사를 내놓았다.

미국의 예산편성은 이렇게 주목받지만 정작 우리 나라 예산은 언론이 관심을 거의 두지 않는다. 2009 년 예산은 추경예산까지 포함하면 총지출 300조 원 가까운 어마어마한 돈이다.

언론은 예산낭비 기사를 자주 싣지만 그때만 반짝 관심을 가질 뿐이다. 매년 비슷비슷한 예산낭비 기사 는 넘쳐나고 언론은 그렇게 정부 당국을 질타한 것으 로 소임을 다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예산을 교육 또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이나 정보통 신사업, 토목사업 어디에 집중 투자하느냐에 따라 한 국사회의 성격과 미래는 달라진다. 그렇지만 행정부 는 거대한 예산을 국민 공청회 한 번 하지 않고 편성 한다. 정부가 10월 초 국회에 예산을 제출하면 국정 감사에 바쁜 국회는 11월에 들어서야 몇 번의 공청회와 토론회를 할 뿐 사회 공론화에는 소홀하다. 이것이 예산을 둘러싼 우리 현실이다.

예산 심사보다 중요한 법안 심사

많은 사람들이 복지예산에 관심이 많다. 2008년도 복지예산은 68조 원으로 정부 총지출의 26%를 차지 한다. 이는 1998년도의 13조 원에 비교할 때 5.2배 증 가한 규모로 같은 기간에 정부 재정지출이 2.3배 증 가한 점을 감안하면 복지재정이 빠르게 확대되었음 을 알 수 있다.

복지재정은 법률에 근거를 두는 의무지출 비중이 타 분야에 비해 매우 높다. 박인화 국회 예산정책처 사회예산분석팀장 분석에 따르면 2007년 기준으로 주택부문을 제외한 복지재정의 약 85%가 의무지출 이다. 따라서 보건복지가족부가 재량사업을 하기는 무척 어렵다.

이 점은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예산심사보다 각종



예산은 사실상 한국 정치의 이면이자 핵심이다.

법안 심사에 더 집중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일 단 기초생활보장 등 관련법이 만들어지면 법에 따라 재정을 지출할 수밖에 없고, 한 번 나가기 시작한 자 격급여는 줄이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런 자격급여 는 이번 양천구청 복지예산 횡령에서 보듯 일선 현장 에서 잘못된 집행이나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서 복지재정은 계 속 늘어날 수밖에 없지만 효율적인 집행을 할 수 있 도록 관련 법률 심사를 더 엄중하게 해야 할 것이다.

미래경제형 사회간접자본(SOC)예산

우리나라 SOC 투자 중 도로 부분 투자는 이미 과 잉투자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1993년부터 SOC 투자를 늘리는데 큰 역할을 한 교통시설특별회 계에서 도로계정이 1천분의 510 내지 590으로 절반을 넘는 탓도 크다. 그에 반해 철도계정은 1천분의 140 내지 200에 불과하다. 2009년 예산도 도로부문은

9.5조, 철도는 4.7조로 철도는 도로의 절반에도 미치 지 못한다.

국내철도연장은 2007년 말 현재 3399km로 70년 전에 비해 겨우 200km가 늘어났을 뿐이고 신설된 간선철도는 KTX가 유일하다. 에너지 소비량은 철도가 승용차나 화물차에 비해 5분의 1 수준이다. 교통수단별연간 석유 소비량은 2006년 기준으로 철도 0.7%, 도로 78.4%, 해운 12.4%, 항공 8.5%이다.

선진국에서는 철도 투자가 대세로 1998~2005년 사이 유럽연합 국가들의 교통 투자 현황을 보면 철도가 69%로 도로(31%)의 두 배를 넘는다. 그리고 유럽기 간교통망계획에서도 2010년까지 철도 투자를 전체 교통 투자의 85%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이런 점을 볼 때 앞으로 SOC 투자는 철도에 더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

2009년 예산처럼 SOC 예산을 대폭 늘리는 것은 더욱 고도화될 한국의 경제구조란 측면에서도 타당성 여부가 검토되어야 한다. 앞으로 산업구조는 제조업 의 성장률이 감소하고 서비스 부문의 성장률이 증가 할 것이다.

이렇게 경제구조가 서비스화, 첨단화하는 것에 대비하기 위해 종전 기초 인프라 위주의 투자에서 정보교류활동을 지원하는 기반시설, 고급 인력의 유치를 지원하는 문화, 교육, 여가시설, 환경시설, 그리고 첨단·지능형 기반시설 등에 대한 투자를 더 늘려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와 같이 국민소득이 일정 정도 올라간 나라에서 SOC 투자도 방향 전환을 할 필요가 있다. 교통안전과 재해예방을 위해서도 SOC 투자가 필요하다. 즉 SOC 투자를 하더라도 종래의 토목, 건설중심에서 미래 경제형 투자로 바뀔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2009년 예산에서 토목, 도로, 건설 중심으로 짜인 SOC 투자가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렵다.

국민 중심의 예산으로

우리나라 정치의 3대 불가사의를 들어보라고 하면 첫째, 지방이 중앙의 이해를 대변하는 정당과 의원에 게 투표하는 것 둘째, 저소득층이 자신의 이해를 대 변하지 않는 정당에 투표하는 것 셋째, 예산에 대한 무관심이다.

이 3가지는 떨어진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 한 몸이



다. 예산이 국리민복을 위해 공평하게 쓰이기보다 중앙의 힘 있는 정치인들 중심으로 돌아가니 국민들도자기 지역을 대변하는 정치인을 청와대로 보내거나유력정치인으로 만들기에 여념 없다. 이 악순환은 매년 되풀이된다. 모든 언론은 '예산기획부'를 만들어나라예산을 집중해서 파고들어야 한다. 예산이 복잡하고 인기가 없다 보니 시민단체들도 소홀하기 쉽다. 그러나 예산은 사실상 한국정치의 이면이자 핵심이다. 예산을 둘러싼 온갖 문제와 커넥션을 뚫지 않으면 우리는 한국정치의 본령에 다가설 수 없다. *

정광모 기자는 부산에서 법률 사무소 사무장, 여의도에서 국회의원 보좌관, 안국동에서 희망제작소 연구위원 등 다채로운 이력을 지녔다. 보좌관 시절, 국록을 축내다 미안한 마음에 「또 파? 눈 먼 돈 대한민국 예산」이란 예산비평서를 냈다.

재난관리의 민주적 가치와 재난 정보의 공개

재난과 관련된 정보가 정부에 의해 독점되고 있다는 것은 효용성뿐만 아니라 민주주의라는 관점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사회 각 부분의 주체성과 그 연계를 강조하는 거버넌스적 시각에서 보더라도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부문과 민간부문은 각자 재난정보를 필요한 분명한 이유들이 있다.

최 희 천 희망제작소 재난관리연구소 연구원

재난관리에 시민참여가 필요

최근 재난관리와 관련한 연구들을 보면 지역사회의 중요성에 관한 글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이전에는 재난에 대응하는 것은 주로 정부의 역할이었고 주민들이나 시민들은 보조적 역할로 제한되었다. 이는 재난관리를 정부의 시각에서 바라보았기 때문에 나오는 당연한 반응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시민의 주체성이 강조되면 재난관리를 비롯한 공공서비스의 제공자는 비단 정부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 이외의 사회 각 부분으로 확장되게 되는데 이러한 시각으로부터 거버넌스의 개념이 도출되기도 한다.

1995년 일본에서는 한신-아와지 대지진이 발생하였다. 당시 대지진이 발생한 지역의 화재들은 도시의화재진압능력을 크게 초과하여 정부조직 자체만으로는 어떻게 손을 쓸 수 없는 지경이었다.(지진이 발

생하면 거의 필연적으로 화재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당시 104,906개 주택이 완파되었고 16만여명이 건물 밑에 매몰된 상황이었다. 지진 발생당일 약 3만5천명이 구조되었는데, 이 중 약 7,900명정도(약 23%)만이 소방대원들과 경찰 및 자위대원들에 의해 구조되었다. 나머지 약 80%는 가족이나 이웃에 의해 구조되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 사건을계기로 일본 정부는 지역사회의 중요성을 인식하였고 정책방향이 변화하게 된다.

재난관리에 있어 국가 이외에 지역사회, 커뮤니티, NGO, 자원봉사자 등의 독자적 영역과 주체성을 인정하게 되면, 협력과 조정의 중요성, 다시 말해 거버넌 스의 중요성이 부각되게 된다. 재난관리의 영역에서 지역사회의 신뢰와 같은 '사회자본(Social Capital)'의 개념이 도입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서로에 대한 인정과 협동 그리고 신뢰는 거버넌스의 성과를



높이는 핵심 요소가 되는데 이는 다른 한편으로는 민주주의적 가치와도 연결된다. 재난을 사전에 예방 하고, 재난 시 대응 및 재난 후 복구의 과정들에 있어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며 모든 결정들이 독단적으 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러하다고 볼 수 있다.

정부와 시민사회가 함께 하는 민주적 재난관리

재난관리에 있어 민주주의라는 개념은 비단 시민 사회 내부에 국한된 개념이 아니라 정부와 시민사회 가 서로의 파트너로 받아들여질 때 필요한 개념이다. 물론 재난 시에는 정부와 전문가의 지시에 따르는 것 이 일반 시민들의 생존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다. 하지만 이 글에서 살피고자 하는 것은 그러한 위 기 상황뿐 아니라 예방과 복구를 아우르는 폭넓은 재 난관리의 문제이다.

이미 정부는 자연재해를 비롯한 각종 재난에 대응하는 매뉴얼을 구비해 놓고 있다. 또한 재난이 발생할 경우 긴급대응과 응급복구에 있어서 정부의 대응은 비교적 괜찮은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국은 재해재난, 특히 지진, 태풍과 같은 자연재해의 발생이 그렇게 심각한 국가는 아니기 때문에 그 예방과 복구는 주로 사유재산의 보호라는 문제와 관련된다고할수있다.

문제는 재난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명확하게 정해 져 있는 반면, 정부와 구분되는 각 사회부문(개인과 시민단체를 포함한)은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 제 대로 알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이는 각 개인들과 집 단이 재난은 자신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데에도 원인이 있지만, 재난을 바라보는 정부의 시각 또한 시민사회 영역을 재난관리의 파트너로 아직은 충분 히 인식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참 고로 보통 개인들은 재난 시 자신은 정상적으로 행동 할 것이며 자신의 생존 가능성은 매우 높을 것이라는 낙관론을 견지한다. 이는 마치 사업을 하기 전 자신 만은 성공할 것이라는 근거 없는 믿음에 비견될 수 있다. 하지만 평상시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면 재난 상황에서 개인은 2003년 대구 지하철 사고 때 대부분의 사망자들이 빠져 나갈 기회가 있었음에 도 희생되었던 것처럼 정상적인 판단이 마비되어 매 우 무력해지는 양상을 보인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예방과 복구의 과정에 주민들이 배제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2007년에 희망제작소 재난관리연구소는 재난이 발생했던 전국의 마을들을 찾아다니며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강원도의어느 마을에서 태풍 후 하천복구가 매우 부실하게 진행된 곳을 발견할 수 있었고, 이어 연구팀은 그곳을

지나는 주민과 인터뷰를 했다. 그 주민은 "복구가 진행되는 도중 복구를 담당했던 '업자'에게 부실한 복구를 지적하고 그 시정을 요구했다."고 하였다. 그러자 그 업자는 "왜 그런 걸 당신이 걱정하느냐."고 반문하며, '무너지면 자치단체에서 알아서 또 복구해줄 것'이라고 답했다고 한다. 지역주민들이 배제된이와 유사한 사례들은 다른 곳에서도 발견되었다. 자치단체가 재난예방공사나 복구를 할 때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는 경우는 거의 찾아볼 수없었다. 특히 지방으로 갈수록 그러한 경향들이 강화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정부영역은 사회를 주도적으로 이끌 기도 하지만, 사회의 변화에 마지막까지 저항하기도 한다. 한국에서는 시민사회 영역이 미분화되고 미숙 했던 해방 후부터 6~70년대까지는 정부가 사회를 주 도하여 개발을 이끌기도 하였지만, 지금은 분야에 따라서는 시민사회의 역량이 정부를 능가하기도 한다. 하지만 여전히 재난관리에 있어 정부는 사회의 변화를 인정하고 그에 맞게 자신을 변화시키는 데 아직 서투른 것이 사실이다.

재난 정보, 정부 독점이 문제

특히 재난에 관한 정부의 인식이 전향적으로 바뀌어야 할 부분은 재난과 관련한 정보의 독점 문제라할 것이다. 오늘날 정보화 사회에서 정부와 시민사회간의 정보의 비대칭성은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 재난과 관련한 정보의 정부독점 현상은 시민사회의 안전을 저해할 수 있다.

현재 정부는 재난정보와 관련하여 NDMS(National Disaster Management System, 국가재난관리시스템) 를 운영하고 있다. NDMS는 재난복구를 위하여 21개

정부 부처에 흩어져 있는 응급 의료 정보, 재난예방 기상 정보, 해양 재난 정보 등을 한데 모은 재난과 관련한 통합정보시스템이다. 예를 들어 재해피해자와 관련한 NDMS의 하위 부분을 살펴보자. 재난 전(예방 및 대응단계) 단계에서는 대피장소나 이재민 수용소의 지정, 구호품들의 보관과 관리를 다룬다. 대응단계에서는 이재민의 수용 및 구호물품 및 장비의 배분에 관한 정보를 다룬다. 그리고 복구단계에서는 구호 및 의연금의 배분과 조정과 관련된 정보들을 다루게 된다.

현재의 NDMS를 시민사회의 시각에서 볼 경우 몇가지 문제들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그 시스템은 오직 정부 활동을 위한 목적으로만 쓰인다는 점이다. 정보의 생산과 유통 및 저장은 정부의 시각으로만 구축되어 있다. 둘째, NDMS 시스템의 정보는 주로 대응과 복구 단계, 즉 재난이 발생한 이후의 단계에 주로 그 초점이 되어 있으며, 재난의 예방과 대비를 위한 정보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뤄지고 있다. 셋째, NDMS 시스템의 가장 큰 문제점은 NDMS 정보의 상당 부분은 일반 시민들에게도 필요한 정보들이지만 그 접근은 일반 시민들에게는 제한되어 있다.

재난과 관련된 정보가 정부에 의해 독점되고 있다는 것은 효용성뿐만 아니라 민주주의라는 관점에서 도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사회 각 부분의 주체 성과 그 연계를 강조하는 거버넌스적 시각에서 보더라도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부문과 민간부문은 각자 재난정보를 필요한 분명한 이유들이 있다. 시민들은 자신들의 생명과 재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가무엇인지를 알고 그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 민주주의의 원리에 부합할 것이다. 재난 정보에 대해 시민들이 소외되고 있다는 사실은 정부가 시민사회와의 협력에 대해 아직 명확한 개념

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더욱이 재난관리는 정부부문이나 시민사회가 각 자 단독으로는 대처하기 힘들며 반드시 협력을 필요 로 하는 영역이다. 재난 정보를 생성하는 데 시민의 참여는 재난관리 거버넌스를 더욱 풍성하게 만드는 기초가 된다. 순환근무를 하는 공무원들과는 달리 지 역주민들은 자기 지역의 위험요소들을 명확히 알고 있다. 이는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것으로 정부가 올바 르게 판단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다.

민주적인 재난관리를 위하여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위험 정보를 정확히 아는 것은 실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생존 가능성을 높여 줄 수 있다. 그런 점에서 현재 정부가 가지고 있는 재난 정보의 공개와 공유는 절실하다. 또한 시민들은 자신들의 거주지역의 위험정보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재난 정보의 생성과 유통에 시민들의 참여를 평상시에도 유도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시민사회를 진정한 파트너로 인정하는 인식의 전환이 선행되어야 한다.

물론 정부가 가지고 있는 재난 및 위험에 관한 정보들 중에는 국익에 반하거나 국가안보에 영향을 줄수 있는 것들도 있을 것이다. 또한 정보를 개방할 경우 해킹 등의 위험성도 예상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문제들은 기술적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예를들어 정부가 가진 정보망과는 별도로 독립적인 서버를 지닌 정보망을 만들어 운영하고, 민감한 정보들은접근을 제한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된다.

아직까지 재난 정보는 시장경제 하에서 과소평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한 수준보다는 더 적게 제공될 확률이 높다. 이러한 이유로 정부는 재난 정보의 공





수해로 무너진 집

개 및 시민협력을 통해 시민사회가 스스로 재난과 관 련한 정보를 생성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 야 할 것이다. 예컨대 정부부문이 역할을 할 수 없는 재난 정보와 관련한 NPO를 지원하거나 시민들이 쉽 게 접근할 수 있도록 주요 지역에 재난정보센터를 설 립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세계 곳곳에서 민주주의적 인 가치들이 잊혀져가고 있다. 민주주의는 세상을 바라보는 준거들을 넘어 사회가 작동하는 원리로 기능한다. 따라서 일견 관련이 없어 보이는 재난관리의 영역에 있어서도 민주주의적 가치들은 그 효용을 지난다. *

불평등해소와 사회 안전망 강화를 외면한 녹색성장

이명박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녹색뉴딜사업은 토건국가식의 뉴딜사업에 대한 인식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녹색'역시 소위 '돈 되는 녹색'에만 집착하고 있어 진정한 의미의 녹 색뉴딜사업이라고 할 수 없다.

오성규 환경정의 사무처장

저탄소 녹색성장인가? 고탄소 회색성장인가?

MB정부는 경제성장 지상주의를 바탕에 깔고 있다. 국민들도 오로지 경제 살리기라는 기준만을 가지고 이명박 대통령을 뽑았다. 그런데 정작 MB정부는 '발전' '선진화' 747 수준을 벗어난 경제 청사진을 제시하지 못했다.

이정우 교수는 MB정부 출범 후 나온 얘기를 종합 하여 MB정부의 경제방향을 1) 대운하로 대표되는 개 발주의 2) 복지보다 성장 우선 3) 감세 및 작은 정부, 4) 금산분리 완화 등 규제완화 5) 민영화 6) 기업 친화 적(비즈니스 프렌들리)태도 7) 한미FTA 추진을 비롯한 적극적 개방주의로 정리하였다. 하나 같이 과거회 귀적인 발상이고, 철저히 대기업 중심, 수도권의 기 득권층 중심의 정책이다.

그런데 MB정부는 어느 날 갑자기 '새로운 국가발 전의 비전' 으로서의 '저탄소 녹색성장' 을 툭 던졌다. 자칭 패러다임의 변화로 제시한 것이다. 과연 MB식 저탄소 녹색성장이 우리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화시 킬 패러다임이 될 수 있는가?

토마스 쿤에 의해 제시된 '패러다임' 이라는 개념 은 '하 시대를 지배하는 과학적 인식·이론·관습·

표 1 .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 비교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	강의 정리. 2008)
---------	---------	---------	---------	---------------	--------------

	개혁	개방	사회통합	공간	시간
노무현	중도적	적극	적극	균형발전	장기주의
이명박	반개혁	적극	소극	서울중심	단기주의



회수한 장비에서 부품 일부를 재가공할 수 있다.

사고·관념·가치관 등이 결합된 총체적인 틀 또는 개념의 집합체로 정의'된다. 단순화시키면 시대를 대표하는 뼈대이자 표준꼴이라는 것이다.

과거의 패러다임이 요소투입위주이고, 나아가 토건사업에 지나치게 의존적일 뿐만 아니라 성장의 그늘에 복지가 지나치게 축소되어 있는 전근대적 시스템이었다면, 그것이 아닌 다른 시스템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구체적으로 제시하기는 어렵지만 최소한 과도하게 시장위주로 돌아가던 시스템에서 공공(국가의 역할이 핵심)의 개입을 강화하는 쪽으로 바꾸고, 개개인들의 경쟁보다는 공동체 속에서 협력과 상생의 기반을 강화하는 방향이 큰 틀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MB정부가 제시한 '저탄소 녹색성장' 에는 이러한 내용을 찾아 볼 수가 없다. 기존의 성장위주 의 경제틀을 어떻게 유지시킬 것인가가 오히려 주 된 흐름이다. 더군다나 이렇듯 정체가 불명확한 저 탄소 녹색성장을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 '녹색성 장기본법' 마저 입법발의를 해놓고, 어마어마한 예 산을 투입해 녹색뉴딜과 신성장 동력 사업을 추진 하겠다는 선언을 이미 해놓은 이러한 '속도전'의 상 황에서 합리적 토론과 사회적 합의는 아예 실종된 지가 오래다.

'녹색' 과 '성장' 의 충돌

90년대 말까지 높아지던 우리 국민들의 환경의식이 새천년 들어 급속하게 썰물처럼 빠져나갔다. 국회운영위원회의 국민여론조사에 의하면 10년 전에는 '경제성장보다 환경보호가 우선'이라는 국민들의답변이 89%에 달하던 것이 2005년 조사에서는 '환경보호보다 경제성장이 중요' 하다는 답변이 56%에 이

르렀다. 또 2003년 삼성경제연구소의 조사에서 각국의 탈물질주의자 비중을 보면 한국이 2.1%인 것에 비해 독일 35%, 미국 16%, 일본 14% 수준으로 우리국민들이 물질주의에 과도하게 매몰되어 있음을 볼수 있다.

그 결과 문명전환적 가치지향 운동에 대한 지지그 룹이 매우 미약해지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고, 그 자리가 개인주의에 기반한 건강 · 질병, 가정 · 가 족, 자녀 교육 등에 대한 관심으로 메워지고 있다.

과연 어떤 변화가 있었기에 이토록 가치관의 변화 가 크게 나타났을까? 크게 두 가지를 꼽아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IMF외환·금융위기' 이다. 국가부도의 상 황을 맞이하여 IMF로부터 지원을 이끌어내는 조건으 로 내준 것들이 어마어마했다. 소위 글로벌 스탠더드 (Global Standard)를 맞춰야 한다는 명분으로 자본시 장을 개방해 많은 우량기업들이 외국자본에 의해 잠 식당했고, 노동시장 유연화라는 이름으로 해고의 남 발과 비정규직 양산사태가 벌어졌다. 시민들의 입장 에서는 삶에서 노동이 철저하게 자본에 저당 잡히는 기가 막히는 상황을 접하게 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각 종 부동산 규제완화는 토지를 대량으로 보유한 극히 소수의 사람들에게 엄청난 불로소득(지대소득)을 안 겨줌으로써 빈익빈 부익부의 극한 상황으로 점철되었 다. 그런 상황을 맞이한 시민들의 눈에는 나와 내 가족 을 이 무한경쟁의 세계에서 안전하게 보위하는 것이 세상의 그무엇보다도 중요해보이게 되었다.

거기에 더해 '신자유주의 세계화' 라는 거대한 물결이 우리사회를 삼켜 버렸다. 물론 IMF외환·금융위기시대에 정부가 취한 조치 자체가 신자유주의 질서를 만드는 기본이 되었다. 하지만 전 세계적인 신자유주의 세계화 흐름은 거기에 만족하지 않았고, FTA라는 수단을 앞세워 모든 시스템을 장악해 들어

갔다. 그래서 우리사회는 자동차를 더 팔기위해서 농 업을 포기하고 쇠고기 수입을 허용해 농심과 민심을 크게 흔들어 놓았다.

오늘날 우리사회가 이런 지경까지 간 마당에 아무리 미사여구로 표현한다 하더라도 현실에서는 '녹색' 과 '성장' 이 충돌하는 경우가 훨씬 많을 수밖에 없다. 성장주의자들은 경제와 환경이 상생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그들이 환경을 더 경원시하기에 오히려 환경갈등의 주인공으로 등장하게 된다.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서는 '녹색과 성장의 현실적 충돌지점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라는 고민이 깊게 배어있어야 한다. 그런 고민과 현명한 해답이 담겨지 지 않은 상투적인 레토릭으로는 전환은 고사하고 후 퇴로 귀결될게 뻔하다.

아닌 게 아니라 MB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제 시하고 난 후, 그린벨트와 어마어마한 면적의 군사시 설보호구역을 해제했다. 또 수도권규제를 완화해서 팔당상수원 인근에 대규모 개발이 가능토록 활짝 문 을 열었다. 또 보금자리주택 보급을 위해서 환경영향 평가도 대폭 축소하고, 각종 환경규제를 거의 유명무 실화시키는 법안을 상정시켜 놨다.

그것도 모자라 하천정비사업으로 포장하여 사실 상 한반도 대운하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대통령과 한 나라당 대표 간의 대화에서 온 나라에 공사 소리가 울려 퍼지도록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말이 오갔 다니 아연실색할 일이다.

녹색뉴딜사업이 갖춰야 할 기본조건

정부는 추진 목적에서 '녹색과 뉴딜을 함께 추진 함으로써 잠재적 성장 동력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 등 구체적 성과를 얻을 수 있는 정책으로 승화・발전' 시킨다고 제시했다. 이미 전지구적 환경위협이 구체화되고 있고, 기후변화협약 등 국제적인 통상규제 수준으로 작동하고 있는 환경문제를 도외시한 채기존의 요소투입위주, 성장위주의 경제정책을 지속시킬 수 없다는 것은 더 이상 설명이 불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사회·경제적 불평등으로 인한 사회양극화의 심화, 상대적으로 열악한 복지 수준으로 인한 사회안전망 취약 등은 우리 사회의 통합적 발전을 저해하는 핵심적인 요소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할 때, 녹색뉴딜 정책은 만시지탄의 관점에서 봐야할 측면이 더 크다.

녹색뉴딜사업은 기존의 성장패러다임을 부정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는 구체적인 전략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그러면 녹색뉴딜사업은 어떤 가치를 담을지가 분명해야 하는데 1) 사회ㆍ경제적 불평등으로 인한 사회양극화 해소 2) 사회안전망 강화3) 요소투입위주의 경제성장을 지앙하고 자립적 기반 강화라는 기본조건을 갖추지 않으면 녹색뉴딜사업이라고 할 수 없다.

루즈벨트 대통령이 추진한 뉴딜사업은 미국사회에 만연해 있던 불평등을 해소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었고, 주요방법 중의 하나가 전후복구 상황 속에서 SOC사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었다. 실제로 1930년대까지 미국사회는 기나긴 '도금시대'를 유지해 오면서 빈부격차가 어마어마한 수준으로 벌어졌고, 사회안전망이 너무나 취약하여 사회

갈등이 심각한 수준이었는데 이러한 현상을 극복하고자하는 노력이 계속 시도되었다.

따라서 뉴딜사업의 결과 역시도 '부유층과 노동자 계급의 소득격차가 급격히 줄고, 노동자 사이의 임금 차도 줄어든 현상'을 가장 강조하고 있고, 1932년 위 스콘신주가 실업보험제도를 도입하면서부터 시작된 사회보장제도의 강화가 실질적인 성과라고 할 수 있 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러한 뉴딜사업의 핵심 적인 가치와 내용은 뒤로 제처놓고 '뉴딜사업은 일 자리 창출용 대규모 공공투자 사업'이라는 토건국가 식 인식의 한계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결론적으로 이명박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녹색뉴 딜사업은 토건국가식의 뉴딜사업에 대한 인식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녹색'역시 소위 '돈 되는 녹색'에만 집착하고 있어 진정한 의미의 녹색 뉴딜사업이라고 할 수 없다.

녹색뉴딜사업의 쟁점과 한계

1) 기존의 반환경적이거나 낙후된 제도 개선이 바탕에 깔려 있지 않음

새로운 정책이 탄력을 받고 추진되기 위해서는 기존의 제도적 걸림돌, 기존의 주도적 흐름을 제압할수 있는 조건이 갖춰져야 한다. 상이한 제도나 정책이 상존하는 상황, 혹은 제도적으로나 재정 · 인력적인 측면에서 기존의 힘이 더 크게 작동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새로운 정책은 실패를 전제할 수밖에 없다. 예컨대, 에너지 다소비 업체에 상당한 국가재정을 들여 요금보조를 하고 있는 상황을 그대로 둔 채,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통한 일자리 창출사업이 힘 있게 추진될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녹색뉴딜사

업 추진계획 어디에도 이러한 기존제도의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는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 특히 이전과는 다른 분야와 방식으로 일자리 창출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정책 목표와 의지를 확고하게 제시해야 민간과 가계의 투자를 이끌어내면서 성공할 수 있다.

2) 공간적으로 잘 계획되어 지역적 특성을 살려야 하는데 그렇지 못함

새로운 녹색일자리의 창출은 기존 회색일자리의 소멸을 전제로 하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유기농업으로 전환을 통해 녹색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지만 살충 제 제조와 화학비료 제조 관련 일자리는 상당히 줄어 들 수밖에 없고, 대중교통의 활성화는 자가용 승용차 의 소비를 감소시켜 기존방식의 자동차 생산 일자리는 줄어들게 될 것이다.

특히 우리 사회는 수도권의 과다한 집중이라는 고 질적인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국가의 균형적인 발 전을 위해서는 지역의 발전전략이 새로운 발전패러 다임에 녹아있어야 한다. 게다가 부분적으로는 기존 방식의 일자리가 상실될 가능성이 큰 지역이 발생할 수 있고, 그럴 경우에 대비한 지역특화 전략이 검토 되어야 한다.

이명박 정부의 녹색뉴딜사업은 총론적이고 전체적인 계획만 있고, 지역적인 계획이 면밀하게 검토되지 못한 한계가 분명하다.

3) 기업과 정부를 주요주체로 설정한 한계

1940년대의 뉴딜사업은 이후 유럽에서도 추진된 사례가 많은데, 영국의 경우 1990년대에 뉴딜 프로 젝트가 추진된 바가 있다. 유럽연합에서도 1990년대 에 '유럽연합 내 환경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식개선 캠페인'을 추진하면서 국가별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

여기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 중 하나는 NGO와 노동조합을 주요한 주체로 삼았다는 점인데, 새로운 전환을 위한 준비가 되어 있는 그룹이라는 점, 자신이처한 조건과 지향이 일치한다는 점등이 이유다.

미국에서는 '저소득층 주택에너지 효율화 사업 (Weatherization Assistance Program, WAP)'을 추진 하면서 공공기관보다는 지역의 상황을 더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 훨씬 생산적인 전달체계를 갖출 수 있는 지역기반조직을 주요 주체로 설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녹색뉴딜사업은 정부와 기업이 고용문제 해결을 주도한다는 인식에서 전혀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전달체계가경직되고, 시혜적으로 추진됨으로 인해 자립적 기반을 형성하여 지속성을 갖추는데 한계가 클 것으로 보인다.

4) 여러 정책수단과 결합되지 못한 한계가 뚜렷함 유럽연합이 10여 년 전부터 환경 일자리 창출을 추 진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점은 환경규제의 강화와 친

| 표 2 | 유기농 전환 전후의 고용(영국 내 환경 일자리 창출 국가보고서, 1998)

근로자 (FTE)	전환 전	전환 후	주석
가족/소유자 (무급)	49.5	78	가족노동 60% 증가
영구적 전임자	26	47	전임노동 80% 증가
영구적 시간제 근로자	7	14.5	시간제 노동 100% 증가
임시직	7	39	임시직 550% 증가*

환경 조세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생태계 보전을 통한 녹색관광 활성화, 유기농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기존의 일반농업정책(Common Agricultural Policy)에 의해 지급되는 보조금과 충돌되는 요소를 걷어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고, 친환경자동차 도입과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탄소세를 도입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의 녹색뉴딜사업에서는 기존 산업을 유지하는 전제조건과 기업위주의 사고방식 에 묶여 환경규제는 오히려 대폭 완화시키고, 환경세 제 도입은 꺼리고 있기 때문에 유일한 수단은 정부가 재정을 투입하거나 시장질서에 의존하는 길만을 열 어 놓은 꼴이므로 여전히 큰 장벽이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5) 농업, 농촌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음

유럽과 미국의 경험에 의하면 녹색 일자리 창출의 핵심은 농업과 농촌이다. 우리의 농업과 농촌은 거의 무방비 상태이며, 환경적 측면에서 볼 때 화학비료와 살충제의 과다한 사용이 먹거리 안전과 농촌의 환경 오염이라는 고질적인 문제를 양산하고 있는 구조다. 영국에서 기존 농장을 유기농장으로 전환하여 획기 적으로 고용을 증대시킨 사례가 있는 것을 감안한다 면 장기적인 국가발전전략에 농업과 농촌에 대한 구 상이 있어야 한다.

진정한 녹색뉴딜을 위한 제언

1) 수송 분야가 녹색일자리 창출의 핵심

수송 분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약 30%를 차지하면서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여서 선진국에서도



수송분야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약 30%를 차지하고 있다.

수송 분야의 대안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도로교통감소법안을 마련하여 도로 교통량을 10% 줄이는 대신 자전거, 버스, 철도여행의 증가를 통해 130,000개의 직접적인 고용을 창출하는 계획을 세운 바 있다. 영국에서는 이러한 수송 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유가의 지속적인 인상, 장거리 운행자에 대한 세금감면이라는 왜곡된 인센티브 제거, 도시 주차의 2/3에 이르고 자가용 통근을 조장하는 작업장 내 무료 주차혜택을 없애기 위한 세금도입'등이 제도적 장치로 제시되었다.

2) 수자원 확보 보다 수자원 수요 관리가 더 효과적임 유럽과 캐나다(댐건설보다 수요 관리가 30%이상 고용효과가 크다고 보고됨)의 사례로 보더라도 식수 전용댐을 건설하는 방식으로 수자원을 추가적으로 확보하는 것보다 누수율을 줄이는데 투자하는 것이 훨씬 더 고용효과가 크다는 것이 밝혀져 있다.

유럽에서는 누수율을 낮추기 위해 누수탐지반을 고

표 3 | 해외연구의 재생가능에너지분야 일자리 창출계수 적용한 한국의 일자리 잠재력: 고정 일자리 창출계수 적용 (환경 분야 사회적 일자리 창출방안 연구 보고서, 환경정의, 2006)

적용사례	재생가능에너지	제조	건설	유지 및 보수	총 일자리수
ı	풍력	6,779	1,445	213	8,437
	태양광	40,013	8,346		48,359
	소계	46,792	10,004		56,796
	풍력	-	5,461	616	6,077
II	태양광	_	9,139	154	9,293
11	바이오매스	-	140	160	300
	소계	-	14,740	930	15,670
	풍력(육지)	6,460	1,870	213	8,543
	풍력(해양)	(6,460)	(2,508)	(213)	(9181)
III	태양광	40,013	9,088	128	49,229
	바이오매스	140		67	207
	소계	57,571(58,209)		402	57,979(58,617)

주: ()안의 수치는 풍력을 해양에 설치할 경우임.

용하고, 관로개선사업을 적극적으로 벌여 고용을 늘리고 있으며, 하수처리 역시 같은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나아가 하수슬러지와 농촌유기폐기물을 섞어유기비료를 생산하는 고용도 늘리고 있는 상황이다.

3) 에너지 기기 도입보다 에너지 효율 향상이 더 효과 적임

녹색뉴딜사업의 기본조건이 불평등을 줄이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이기에 새로운 신규사업을 추진하기 이전에 에너지 빈곤계층에 대한 에너지복지를 강화하는 것을 우선해야 한다.

미국의 WAP사업, 영국의 Warm Front 사업 및 CHP사업 등은 저소득층의 에너지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환경 일자리를 창출하는 오래되고 모범적인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나아가 이러한 방식의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화사업이 고용효과가 훨씬 크다는 것은 이미 밝혀져 있다.

미국의 사례와 현재 진행 중인 집수리사업을 검토

한 결과 1억 원당 5.2~5.6개의 사회적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재생가능에너지 분야에서 창출 가능한 총 일자리 수는 풍력의 경우약 6,000~9,400 여개 정도(해양풍력의 경우 9,100여개), 태양광은 약 50,000개 남짓한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이런 계산에는 제조가 모두한국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가정하고 있으므로 100%수입에 의존한다면 건설과 유지 및 보수와 관련된 일자리만 생길 것이므로 실제로 창출될 일자리 수는 상당히 적어진다. 바이오매스의 경우에는 현재 발생하는 축분을 음식물 폐기물과 혼합하여 바이오가스를생산, 전기와 열을 생산하는 접근만으로도 3만 여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4) 단순 재활용이 아니라 재제조 산업의 활성화

영국의 'Rank Xerox' 사례가 대표적인데, 기존 시 스템을 활용하여 잉여장비를 수집하고, 이를 해체하 기 위하여 네덜란드 벤리(Venray), 프랑스 리이유 (Lille), 영국 미첼딘(Mitcheldean)의 자산관리 센터를 설치하였고, 회수된 장비로부터 재가공된 부품 일부를 장착한 최신제품과 대부분 재생 부품으로 구성된 구형 장비로 만들어진 재생 제품을 가격탄력성이 심한 시장에 내놓았다.

처음에는 30%가 회사의 서비스 조직을 통하여 회수되었는데, 1995년에는 3분의 2로 증가하여 120,000대 중 80,000대로 증가하였다. 이 중 60,000대는 재생 및 재판매되었고, 20,000대는 부품 공급에 사용되었다. Rank Xerox는 회수된 재료를 재활용함으로써 미사용 원자재 구매에서 5000파운드를 절감하였고, 400명 이상의 추가고용을 발생시켰다.

국내에서도 시도되었다가 대기업 반발에 주춤했는데, 문제가 되었던 지점을 해결하면서 재추진할 필요가 있다.

사람중심, 생명중심일 때 녹색성장이 가능하다

어찌 보면 지금의 경제위기는 신자유주의 시장의 실패와 권위적인 정부의 실패가 동반되었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고, 또한 '강부자' 라 불리는 최고 기득권 중심으로 모든 사회경제질서를 재편하고 사회안전 망을 바닥에서부터 흔드는 정책을 마다하지 않는 악 습으로 인한 것이다.

그렇다면 90% 이상의 절대다수 약자들을 고무시 켜 선순환하는 경제주체로 만들고, 요소투입 중심의 낡은 경제시스템에 의존하는 구습을 완전히 벗어던 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 패러다임의 변화 일 것이다. 또 그것은 토목건축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는 망국적 토건국가 질서를 해체하는 것으로부터 가능하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패러다임 구상의 주체내부에는 사회적 약자인 사람, 생물학적 약자인 자연이 확실하게 자리 잡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그들은 오히려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복지지출은 감소시키고, 낡은 삽질사업 예산은 무려 26%나 높여 놓는 구습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여전히 요소투입 경제시스템 속에서 안주하고 있는 기업들의 타성을 비즈니스 프랜들리'운운하며 오히려 추켜세우면서 녹색성장의 깃발을 드는 것은 가당찮은 일이다. 결국 '돈되는 녹색'만 뒤쫓는 부문 전략에 그칠 수밖에 없고, 결과는 더 많은 환경파괴와 저소득층, 사회적 약자들의 고통 심화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한번 더 강조하건데 진정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쪽으로 패러다임 전환을 이루고 그것이 국가의 미래비전이 되기 위해서는 '시장(기업)중심'이 아니라'사람중심'으로 생각을 바꾸고, 생태적 상상력을 풍부하게 가져야 한다. 이것이 과연 여전히 '고탄소 회색성장'에 발이 묶여 있는 MB정부에 기대할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말이다. *

*이 글은 환경과 생명 59호에 게재된 '경제위기와 환경위기, 환경운동의 현주소' (오성규, 2009)라는 글의 일부를 재정리한 내용입니다.

오성규님이 활동하는 환경정의는 환경을 공평하게 이용하고 편중되지 않은 책임을 다함으로써 환경적으로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하는 시민단체다. '정의의 눈으로 환경을 바라보면 또 다른 세상이 열린다'고 말하는 그는 현재 사무처장으로 일하고 있다.

용산, 정부, 그리고 공동체

개별 구성원의 일반적 이익추구가 각각의 조직 및 집단의 목적과 가치로 포장되고, 집약될 경우 '익명의 베일'효과에 따라 더욱 극단적 현상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번 용산학살도 이런 현상의 하나이다.

위 평량 희망제작소 대안센터 연구위원

1. 참사

2009년 1월, 대한민국 수도 서울 한복판 '용산의일'은 용산참사(慘事:참혹한 사건)이지만 용산참사(慘死:무자비한 죽음)이기도 하며 학살(虐殺)이기도 하다. 또 이것은 개발독재의 잔재이자 미민주(未民主)에 따른 구조적 살인이기도 하다. 현재의 제도는 개발시대 참사(慘史: 참혹하고 무자비하고 애처로운역사) 속에 변화되고 있으나 또 다시 학살을 만들어냈다. 제도는 사회적 합의 속에 정착된다는 점에서현행의 제도를 용인한 사람들의 문제이다. 특히 이제도를 고수하고자 하는 대리인(정치·관료)과 이러한 대리인을 부추기는 사회인식수준이 끊이지 않는 악순환의 중심 고리이다. 그래서 용산학살은 한국의 참사(慙死: 부끄러운 죽음)이다.

이것이 구조적 학살인 이유는 공동체 안의 극단적 구성원들이 공익을 명분으로 다른 구성원에 대하여 철저한 희생을 강요하고, 이렇게 발생한 약탈적 이익 을 다른 구성원들과 수준을 달리하여 재분배하고 있 기 때문이다. 재개발사업으로 토지 및 건물소유자와 시행 및 건설 회사들은 막대한 개발이익을 향유한다. 다음으로 국가 및 지방정부는 높아진 자산가치의 영 향으로 국가 또는 지방세 수입의 증가를 통해 또한 이익을 얻는다. 물론 이에 따라 공동체 구성원도 공 공재 생산의 편익을 누린다. 또 개발지 주변도 미실 현 혹은 실질적 개발이익을 맛보게 되지만, 그곳에 실제 거주하고 있던 철거민과 세입자들은 오직 빼앗 기고 소외되는 구조이다.

2. 전환

문명사회에서 생활주거환경의 변화는 그 자체로 개인과 공동체의 후생(평등과 자유, 평화와 복지, 이익 등)을 위해 불가피하다. 지금까지 발생하고 있는 한국 철거민들의 극단적인 행위는 공동체와 개인을 동시에 파괴시키고 있다. 그러나 극단의 이기주의로 매도당하는 철거민들의 행동은 그들로부터 연유된 것이 아니다. 제도를 그렇게 작동시킨 정부와 이를 용인한 공동체로부터 연유한다. 약탈적 자본주의 시대에 있어서 공동체를 위해 포기하고, 희생한 개인후



용산 참시는 '참사' 이기도 하고 '학살' 이기도 하다.

생보다 더 높은 가치를 지닌 것은 없을 것이다. 따라서 공익을 이유로 희생된 사람들에 대한 충분한 보상은 공식적으로는 국가가, 그리고 비공식적으로는 공동체가 제공해야 한다.

철거민의 모든 행동은 생존권을 지켜내기 위해 이루어지는 최후의 자기 방어적 수단이다. 동시에 그것은 공동체의 역할을 강조하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공동체 구성원인 우리를 향해 있다. 우리시대 약자인 철거민은 타의에 의해서 수 십 년 생활터전에서 강제적으로 떠밀려나왔다. 그러나 그들의 희생에 대한 공동체의 의무적 보상 수준은 매우 빈약하기 이를 데없고, 정부가 외면해온 결과 참사(慘史)가 반복되고 있다. 이런 구조라면 어느 누구도 공동체를 위해 개인을 희생하려 하지 않을 것이고, 공동체는 아귀다툼의 장이 된다. 이로써 '관계로서의 인간'은 사라지고 탐욕적 집단만이 남게 된다.

인간의 존엄, 자유. 그리고 평등이 결국 민주주의라는, 혹은 시민참여라는 말과 제도로 발전되어 오고있다. 장구한 역사와 함께 진보되어온 민주주의를 뛰어 넘어 새로운 가치체계를 추구하는 21세기 한국에

서 반인본, 반인권, 반존엄과 반민주, 반평등, 반기회적 요소가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 대리인을 선출하는데 따른 단순한 투표권의 행사만을 민주주의라 할수없다. 그간 우리는 미미한 진보(進步)를 큰 진보로 착각하고 있었다. 우리사회에는 절차와 과정에서 시민들이 철저하게 배제되는 허울뿐인 민주주의가 참된 민주주의를 대신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3. 절차

용산학살에 대한 시민사회의 요구를 요약하면 첫째, 재개발사업의 왜곡된 목적수정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부정책 변화 둘째, 소형저가주택 및 임대주택 건설비율의 확대 및 실질적 이주대책 마련 셋째, 분양원가에 기초한 분양가격 결정 및 임대로 차등부과 넷째, 순환개발방식의 도입 다섯째, 민간분양가 상한 제 유지 여섯째, 각 이해주체 간에 발생하는 분쟁해결에 적극개입 일곱째, 정치권의 개발공약 남발 금지여덟째, 인권기준의 강화 및 이를 위한 국회의 감시기능 강화 등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시민사회의 요구는 현재로서 매우 필요 한 것들이다. 그러나 이들 또한 현행 시스템을 수용 한 미시적이고 단기적인 대안으로 보인다. 물론 제도 의 변경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없다는 현실을 감 안한 것이라고 이해한다. 그럼에도, 공동체구성원은 구각(舊殼)을 벗기려는 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 해야 한다. 이 경우에 단기적으로는 정부개입이 필요 하다. 물론 정부개입 또한 그 과정과 절차에서는 주 민의 참여와 감시 및 공화적(共和的) 동의가 있어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지역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할 '고도의 공동체 자치기구' 가 만들어져야 한다.

다음으로는 현재 주어진 절차 속에 참여와 통제기

제를 정착시켜야 한다. 재개발과정은 다음과 같다. 재개발구역지정입안(①주민의견수렴과 자치단체의회 의견청취) → 재개발구역지정 및 고시(②도시계획위원회심의) → 재개발조합설립인가 → 사업시행인가(③공람공고 및 주민의견수렴) → 국유재산매수신청 → 건축물착공신고 → 재개발관리처분인가(④주민공람) → 사용승인 및 사용검사로 이어진다. 즉기본계획입안에서부터 사용검사까지 모든 절차를지방자치단체혹은 중앙에서 행정적으로 권한을 위임하고관리감독한다.

위와 같은 공식적 절차 속에 나타난 주민의견수렴이 중요하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개발지구 지정 이전 단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재개발구역지정입안 단계 이전에 지역숙원사업과 지역발전 사업이 지역여론으로 우선 형성된다. 이는 두말할 것 없이 지역토호들과 정치인들의 커넥션을 통한 자본이익과 권력의 창출구조에서 시작된 것이다. 이들은 토지로부터 비롯되는 정치ㆍ경제ㆍ사회적 역학관계를 체득하고 있다. 나쁜 정치인은 이러한 토호들과 주민들의 관계 속에서 지속적인 지대추구(rent seeking) 구조를 만들어 낸다.

관련된 사람들은 때마다 진행되는 크고 작은 선거를 이용하고 있다. 지역 숙원사업의 대부분이 지역발전 사업으로 포장되지만 기실 나쁜 토호, 나쁜 브로커, 나쁜 정치인, 나쁜 공무원의 잇속을 채우는 사업이다. 따라서 이 초기구조를 근본적으로 깨야 한다.

그리고 ①단계의 주민의견수렴은 이미 지역발전 사업으로 포장되었기에 형식적이며, 기초자치단체 의회의 의견수렴도 암묵적 이해가 일치된 상황이기 에 일사천리로 진행된다. 그러므로 이 단계에서는 합 당한 기준을 만들어 주민참여의 실질화를 도모해야 한다. 가령, 지역 내 주민들을 거주기간에 따라 분류 하고 의견수렴은 물론 이들의 향후 생활계획까지 모 두 반영해야 한다. 그리고 합의수준을 높이는 장치가 필요하며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여기서 통과 되지 못하면 사업구상을 백지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 다. 지방의회는 대부분 지역토호들 혹은 그들과 정서 적 밀착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또 다른 통제장치를 두어야 한다.

②단계 구역지정 및 고시단계에서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만 심의위원들이 다수의거주자(주거 및 상가세입자)를 대표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는 심의위원회 자격요건을 보면 알 수 있다. 즉,1)당해 시·군 또는 구 지방의회의 의원 2)당해 시·군 또는 구의 공무원 3)토지이용·건축·주택·교통·환경·방재·문화·농림·정보통신 등 도시계획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정해두고 있다. 지구내의 생업과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들을 대변할 전문가는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위원회에 해당지구의 거주민 대표를 충분히 포함(전체위원은 통상 20~25명 규모이다)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이 단계까지 사업을 백지화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 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후 단계부터 는 사업을 백지화하려 할 때 너무 큰 무리가 따르기 때문이다. 이 단계가 종료되면 사업이 확정되고 재개 발조합이 설립(법인)되어 활동하므로 조합에 결정적 인 하자가 없는 한 사업은 진행된다. 그리고 여기서 수행하는 주민공람 및 의견수렴은 사업 확정 이후 진 행되는 것이고, 조합원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민의 참여는 사실상 제한된다. 즉, 조합은 최대한 의 이익을 획득하고자 하기 때문에 재개발로부터 비 롯되는 각종의 문제가 근원적으로 사라지지 않게 된 다. 따라서 조합 설립인가 요건을 강화하는 것을 기 본으로 하고 이후 정부(지자체)의 관리감독을 주민중 심으로 진행시켜야 한다. 참고로 미국의 용도지구제(Zoning)하에서는 도시 계획위원회와 조닝 조정위원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유명하다. 그 도시계획위원회는 일반주민들로 구성 되어 자치정부의 담당부서가 작성한 조닝(즉, 도시계 발계획)의 시안을 검토·승인하여 의회로 보내는 기 능을 한다. 우리나라의 도시계획심의원회와는 구성 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다. 또 조정위원회는 자치정부 의 계획운영결정에 대한 주민들의 불복신청을 처리 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 두 기관은 행정관청과 독립적 인 위치에 있다. 물론 이러한 제도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배경은 토지에 관한 미국시민의 인식과 제도의 뒷받침이 있기 때문이다.

4. 책임

많은 전문가들은 "재개발사업은 1983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권한을 민간에서 위임받아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공익적 성격'을 띠고 있다"고 규정해 버린다. 재개발사업이 명백히 공익사업이라는 법률적 근거는 도정법 제3조1항, 제4조1항 및 5항, 제40조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이에 합당한 책임과 권한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한 사회 내에서 공익과 사익 사이의 부정합을 교정하는 역할은 첫째, 공동체 자치적으로 해소되는 것이가장 바람직하다. 둘째, 그렇지 못한 경우 위임받은 권력(정부)이 보정해야 한다. 공공재의 부족은 사회적 부정의를 심화시킨다. 특히 공익사업은 시장실패를 보완하고 공동체 후생증진을 위해 정부가 개입하는 논거가 된다. 정부는 공익사업에 대한 고삐를 쥐어야 한다. 그러므로 공익사업의 대부분을 민간에 위임해버림으로써 심각한 사회 문제가 발생했다면 가장 핵심적 책임은 정부에 있다.

정부는 다양한 사회구성체와 그 구성원들을 만족시킬 의무가 있다. 사회는 매우 복잡한 형태로 나타난다. 사회를 구성하는 각종 집단과 조직, 보다 핵심적으로는 매우 다양한 특성과 성격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의 본성을 반영하기 때문이다. 집단 간의 이익이 엇갈리고 다종다양한 견해를 가진 사회 구성원 모두를 만족시키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이 어려운 일을 누군가는 하여야 하고, 따라서 비록 완벽하지는 않지만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권능을 부여받은 정부가 해야 하는 것이다.

사회구성원(집단·조직·개인)들은 그들의 후생 극대를 위해 얼마든지 다양한 행위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문제는 구성원의 다양한 요구 를 누가, 어떤 방식으로 조화시킬 것인가이다. 특히 개별 구성원의 일반적 이익추구가 각각의 조직 및 집 단의 목적과 가치로 포장되고, 집약될 경우 '익명의 베일' 효과에 따라 더욱 극단적 현상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번 용산학살도 이런 현상의 하나이다.

따라서 정부가,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 구성원들의 이해를 조정해야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우리사회 기초단위 및 현장에서 나타나는 여러 현상을 면밀히 분석하고 각종의 법과 제도들이 특수한 계층, 특별한 사람만을 위해 작동하기 보다는 모든 계층을 위한 법과 제도로서 거듭나게 만들어야한다. 또 시민들이 자기 이익을 극대화할 때(정체된자기이익) 장기적으로는 사회공동체에 부담이 되며이는 자신의 피해로 귀착된다는 사실을 인식시키는역할 등을 해야한다.

이번 용산학살의 가장 큰 책임은 정부에게 있으며 이번 사건을 해결하는 수준에 따라 그 책임의 일부가 겨우 경감될 수 있을 것이다. *

인터넷과 표현의 자유

자율규제 논의를 중심으로

인터넷 행위 규범은 입법에 의해 규제 주체와 대상을 공식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규제행위의 제 도적 메커니즘을 발생시킨다. 그렇지만 인터넷을 특화한 과도한 입법은 공론 활동을 위축시킬 소지가 크며, 기존 법체계와 부딪쳐 모순점을 발생시킬 가능성도 많다.

류 석 진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최근에 왕국, 웨일스, 스코틀랜드에서 영업 중인 다수의 커피하우스에서는 게으르고 만족함을 모르는 무리들의 발길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심지어 그곳은 많은 사람들, 특히 소상인들이 모여서, 정당하게 직무에 바쳐야 할 많은 시간을 허비할 뿐만 아니라 이들 커피하우스에서는 온갖 거짓중상으로 가공한 수치스러운 정보가 만들어지고 널리 퍼져서는, 폐하의 정부를 업신여기고 왕국의 치안을 혼란케 하는 까닭으로… 오는 1월 10일을기해 모든 커피하우스를 금지하고… 커피, 코코아, 소다수, 홍차의 판매를 엄벌로 다스린다." 「커피가 돌고 세계사가 돌고: 역사를 돌아 흐르는 이슬람의 검은 비」 우스인 류이치로 지음. 김수경 옮김 (복북서, 2008). 77쪽

영국정부가 막 대중화되기 시작한 커피하우스에서 '온갖 거짓중상으로 가공한 수치스러운 정보가만들어지고 널리 퍼져'정부를 업신여기고 왕국의치안을 혼란케하기 때문에 커피하우스를 폐쇄하겠다고 1675년 12월 29일 검찰총장의 명의로 발표한 담화이다. 17세기 말 영국에서 커피하우스라는 새로운 공간의 출현과 21세기 초 인터넷과 웹으로 대표되는

온라인 공간의 출현은 어떠한 유사점과 차별점을 가지고 있을까? 새로운 의사소통 공간의 출현만이 아니라 신문, 방송, 인터넷 등 새로운 의사소통 매체의 등장은 어떤 논쟁을 유발시켰는가? 이 논쟁의 핵심에 표현의 자유와 책임성 간의 긴장관계가 있다.

"커피하우스는 모반과 데마고기의 온상이 되어가고 있다. 대중에게 끼치는 불쾌도는 그 어떤 정부도 태평스레 방관할 수는 없다고 생각 한다." '커피하우스에서 반역적이고 배신행위나 다름없는 방종한 대화'는 정부에게는 눈엣가시 같은 것이었다. 이러한 정치적 커피하우스의 대표적인 존재로는 휘그당 사람들이 떼지어 모여드는 세인트 제임스 커피하우스 와 스마르나 커피하우스, 토리당 사람들이 진을 치고 있는 오진다 커피하우스, 코코아 트리 커피하우스가 있다(76쪽). 21세기 한국 온라인에서 '네이버' 와 '다음' 등 포털의 게시판과 블로그가 휘그당과 토리당 사람들이 진을 치고 있는 커피하우스와 같은 모반과 데마고기의 온상이 되고 있는가?

최진실 사망, 광우병을 둘러싼 촛불시위, 미네르바 사건 등 인터넷에서 표현의 자유와 책임에 대한 논쟁





인터넷은 이용자 중심 미디어이기 때문에 국가 및 시장의 긴장이 상대적으로 크다.

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다. 2008년 7월 김경한 법무부 장관이 '사이버 모욕죄 신설 검토 등 인터넷 유해사범에 대한 처벌 강화'를 발표한 이후 국회에서 다양한 관련 입법안이 제출되어 있다. 또한 표현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인터넷실명제와 본인확인제등의 확대 도입이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다. 정치학을 전공한 필자가 다양한 입법안의 합헌성 혹은 규제의 방식을 검토한다는 것은 능력을 벗어난 일이기 때문에 구체적 입법근거나법 간의 상충성, 법적 효력에 대한 논쟁은 다루지 않고, 찬반의 핵심 논지를 정리한후 인터넷 상에서 균형 잡힌 표현의 자유와 책임성의관계설정을 위하여 고려해야할 요소를 자율규제의 개념을 중심으로 제시하면서 글을 정리하고자한다.

인터넷에서 개인에 대한 악성 루머와 비방의 유포 등으로 인한 폐해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과 인터넷에 필요한 질서와 규범을 마련하여 이러한 폐해를 최소 화하여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어느 정도 사회적 합 의가 이루어져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질 서와 규범을, 누가 주체가 되어 어떤 수준에서 그리 고 무엇을 대상으로 하여 만들어야 하는가에 대하여 는 상이한 입장이 제시되고 있다.

인터넷 상에서 표현 자유와 관련하여 가장 큰 쟁점 이 되고 있는 사이버모욕죄를 먼저 살펴보기로 한다. 도입을 주장하는 논거는 다음 네 가지로 정리된다. (2008 인터넷 이슈리포트, 50) 첫째, 인터넷의 퍼나르 기 기능 등 전파성이라는 인터넷의 특성상 모욕적 표 현에 따른 불법성이 강하기 때문에 형법상 모욕죄를 넘어서는 별도의 입법이 필요하다. 둘째, 형법전의 범 죄는 기존의 오프라인 현실을 전제로 한 것으로 인터 넷에 적용하기에는 많은 문제가 있다. 죄형법정주의 의 원칙을 위해서도 새로운 입법이 필요하다. 셋째, 친 고죄인 형법상 모욕죄에 대해 사이버 모욕죄를 반의 사불법죄로 정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비대면성을 특 징으로 하는 인터넷의 특성상 가해자의 신원을 알 수 없어 쉽게 고소를 할 수 없는 난점을 극복하기 위함이 다. 넷째, 사이버 모욕행위를 범죄로 규정하여 처벌함 으로써 동 정보는 불법정보가 되어 방송통신심의위원 회의 불법정보 심의대상으로 분명히 상정할 수 있다.

반대론의 논거는 다음 세 가지로 정리된다. (2008 인터넷 이슈리포트, 50) 첫째, 형법전에 모욕죄가 규 정되어 있고 인터넷상의 모욕행위도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별도의 입법이 필요하지 않다. 둘째, 사이버모욕죄를 반의사불법죄로 규정할경우에는 수사기관이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 것이므로, 수사기관에 의한 항시적인 인터넷 검열이 우려된다. 셋째, 인터넷이 퍼나르기 등 전파성이 다른 매체보다 높긴 하지만, 사실에 관한 표현이 아닌 단순한 모욕적 표현은 퍼나르기등을 하더라도 피해가 확대된다고 보기 어렵다.

도입론과 반대론의 어떠한 측면이 보다 설득력이 있고, 합헌적이며 효율적인지에 대한 판단은 법학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표현의 자유와 책임이라는 긴장관계에서 판단할 때 위의 두입장 모두 극단적인 시각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이다. 문제는 표현의 자유를 내용규제(content regulation)의 시각에서 판단할 때, 그것의 책임성을 어떠한 규제원리를 통하여 구현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이러한면에서 미국에서의 연방통신품위법(CDA: Communication Decency Act) 위한 판결 이후 정부규제의 대체재로서 자율규제(self-regulation)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고 선진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에서자율규제는 정책 기조로 정초되어 왔다.

그러나 2009년 현재 한국에서 자율규제 논의는 개념적 합의조차 없이 극단의 행태를 노출시키고 있다. 예컨대, 급진적 시민단체들은 방임에 가까운 '정부배제적 자율규제'를, 사업자들은 사회적 압력을 회피하려는 '사업자 자율규제'를, 정부는 외적으로 자율규제를 천명하면서도 사실상 '정부주도 또는 시장위임적인 타율규제'를 추구해오고 있다. 따라서 자율규제의 개념, 필요성 그리고 원칙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논의가 요구된다.

사실 '자율' 과 '규제' 는 개념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양립하기 어렵다. 따라서 자율규제를 정책 목표로 추 구한다고 했을 때 그에 따른 긴장이 표출될 수밖에 없 다. 전통적으로 자율규제 개념은 두 가지 시각에서 사 용되어 왔다. 우선 '규제 내생론' 이다. 이는 정부 개입 이 원천적으로 배제되고 규제장치들이 자생적으로 형 성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은 규 제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 다. 다음으로 '규제 실질론' 이다. 이는 정부와 업계 간 의 협력을 중심으로 규제 시스템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은 피규제자(예컨대, 인 터넷 이용자)의 규제 참여를 도외시하기 때문에 외부 통제로 변질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연방통신품위법 위 헌 판결 전후로 EU 등의 인터넷 규제 논의는 이러한 한 계들을 극복하기 위한 시도였고, 인터넷 자율규제 장 치들의 개발과 액션플랜의 시행을 통하여 보편적인 인 터넷 자율규제 개념이 확립될 수 있었다. 그것은 '이용 자, 사업자, 민간기구들이 일련의 장치들을 활용하여 주도적으로 규제에 참여하고 정부와 사법체계가 이들 의 활동을 협력 · 지원함으로써 합리성과 실효성을 동 시에 추구하는 규제방식'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인터넷 자율규제는 특정 규제 주체를 배격하기보다, 모든 주체들 사이의 권한과 역할을 적실하게 배분한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국가, 시장, 이용자는 인터넷 규제의 직접적인 이해 주체들이다. 우선 국가는 전통적으로 규범과 질서의 창출을 주도한 통제자였다. 내용규제의 측면에서 국가는 미디어 활동을 통제하고 표준화된 대중을 양산함으로써 사회 질서와 공공선을 추구해왔다. 그렇지만 인터넷은 중심과 경계를 약화시키고, 나아가 국가의 관할권 또는 자율성을 위협함으로써 국가의 적극적 대응을 유인하였다.

인터넷 시장이 고객과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안정된 이용 환경이 제공되어야 한다. 즉 미성년자와 같은 특정 이용 계층에 폐해를 양산하지 않는 안전한 인터넷 환경이 요구된다. 또한 시장이 인터넷을 이윤 창출의 도구로만 활용하는 무임승차자(free rider)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사회는 적절한 책임을 부과한다. 특히 표현의 자유 공간을 제공하는 인터넷의 기능은 그에 합당한 사회적 책임과 공익 활동을 시장에요구하고 있다.

이용자는 기본적으로 피규제자이면서도 규제자의 지위를 점유할 수 있는 집단이다. 다른 매체들과는 달리 인터넷은 이용자 중심 미디어이기 때문에 국가 및 시장과의 긴장이 상대적으로 크다. 그리고 인터넷 은 중심이 부재한 분산형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기본 적으로 노드(noxle)상의 개인에게 정보통제권이 일정하게 주어져 있다. 이러한 점들은 필연적으로 이용자에게 규제주체의 지위를 부여하도록 만들고 있다.

인터넷 규제 주체들이 동원하는 장치는 규범, 법, 기술로 요약할 수 있다. 규범은 사회 질서와 공익에 부합하는 사이버윤리를 뜻한다. 규범은 사이버 범죄나 비방과 인신모욕 등의 부정적 개념화를 통해 인터넷의 실태를 지속적으로 정의하고 만들어가는 정치적 긴장 상태를 부추긴다. 그것은 개인적 수준에서 '사이버 윤리'와 '네티켓' 그리고 사회적 수준에서 '클린 인터넷' 과 '안전한 인터넷' 같은 캠페인으로 동원되어 왔다. 특히 EU의 자율규제 목표를 통해 '인간 존엄성과 청소년 보호'는 명약관화한 인터넷 규범으로 제시되고 있다.

인터넷 행위 규범은 입법에 의해 규제 주체와 대상을 공식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규제행위의 제도적 메커니즘을 발생시킨다. 그렇지만 인터넷을 특화한 과도한 입법은 공론 활동을 위축시킬 소지가 크며, 기존법체계와 부딪쳐 모순점을 발생시킬 가능성도 많다.

마지막으로 기술 발전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는 낙후성 또한 법 · 규범이 직면한 한계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기술은 새로운 규제 장치로 활용 될가능성을 제공한다. 일반적으로 기술 규제의 등장 은 이용자의 정보통제능력을 강화시키는 기술의 발 전을 그 배경으로 한다. 그렇지만 기술의 성격은 사 회 구성적이기 때문에, 탈 중립적 규제기술이 출현하 거나 기술 자체는 중립적이더라도 정치경제적 맥락 에서 오용될 소지가 적지 않다. 따라서 기술과 그것 을 운용하는 제도에서 이용자 중심성이 명확하게 구 현되는 것이 기술규제의 조건이다.

인터넷에서 표현의 자유와 책임 사이의 긴장관계는 바로 인터넷 규제라는 큰 맥락에서 파악할 때, 그해답의 일단을 찾을 수 있다. 바를로(Barlow)의 사이 버 독립선언서(Cyberspace Independence Declaration)와 같은 극단적 입장에서 표현의 자유만을 옹호하여서도 안 될 것이고, 폐해가 크기 때문에 국가가 일방적으로 규제 혹은 규율하여야 한다는 것도 어불성설이다. 중요한 것은 국가와 시장의 기업, 그리고 직접적인 이용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폐해는 극소화시키면서 혜택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인터넷과 표현의 자유와 책임 간의 균형 잡힌모색을 위해, 다양한 행위주체들이 참여하는 진정한거버넌스(governance)의 형태를 찾아가는 것이야말로중요하다고할수있다.

민주주의의 모범으로 자리 잡은 영국이 1675년 커 피하우스에 대해 내린 '어처구니' 없는 결정이 인터 넷 강국인 21세기 한국에서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바 라다 *

류석진 교수는 예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현재 서강대 정치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1990년대 중반부터 IT 관련 글을 쓰기 시작했고, IT정치연 구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행복설계아카데미

몸은늙어도 꿈은늙지않는다

행복설계아카데미 수강 후 NGO에서 일하는 **최혜정**

글 유인경 경향신문사 선임기자



최혜정씨(45 · 세이브더칠드런 부장)는 '참 행복하다'고 한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그는 소위 잘나가는 커리어우먼이었다. 세계적인 광고회사인 레오버넷에서 제작이사로 활약하며 칸, 뉴욕 등의 해외광고제에서 상을 휩쓸어 실력도 인정받던 그는 이제 국제이동권리기관인 세이브더칠드런에서 일한다. 직급도 낮아지고 월급도 반 이상 줄어들었지만 행복만은 10배 커졌단다. 더 많이 벌고, 더 높게 출세하고, 더 잘난 척하고 싶어 하는이들이 가득한 요즘, 그것도 한창 나이에 새로운 삶을 찾은 이유가 뭘까.

O/젊은 여성들에겐 외국계 광고회시가 선망의 대상인데 왜 그만두고 고생스러운 비영리단체로 옮겼나요.----A/"광고회사에서 20년을 근무 하고 제 스스로 안식년을 주고 싶었어요. 평소 어 린이에 대한 관심이 많아 완전히 은퇴하면 각종 상처받은 아이들을 치유해주는 대안학교를 만들 생각은 했지요. 그러다 박원순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희망제작소에서 운영하는 '행복설계 아카 데미'의 1기생으로 수업을 받았습니다. 그곳에선 은퇴자들을 비영리단체와 연계해주는 일을 도와 줘요. 은행이나 공기업 등에서 은퇴한 분들이 이 곳에서 수업을 듣고 무료로 봉사활동을 하거나 비상근 고문 등으로 각 단체에 도움을 주고 있답 니다. 저도 희망제작소의 주선으로 세이브더칠드 런에서 일하게 되었어요. 미국의 사례를 보니 봉 급을 받는 정식 직장에서 비영리단체로 옮기는 평균연령이 48세더군요. 제 경우엔 은퇴 후인 55 세쯤 하려던 것을 은퇴가 아니라 '조퇴'를 하며 조금 당겼을 뿐이지요."

Q/행복설계아카데미 과정을 수료하면 모두 비 영리단체에서 일을 하나요.-----A/"아뇨. 그 곳은 은퇴한 이들에게 인생 후반전 설계를 어떻 게 할 것인가를 각종 강좌는 물론 전문가들과의 심리 · 인생 상담 등을 거치고, 120시간 동안 공부를 하게 해요. 관광지에서 여러 곳을 구경하듯 문화적 체험을 하며 각자 자신의 인생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는 기회를 주는 곳이죠. 수료 후 30%는 용기 내서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30%는 더 탐색 기간을 갖고, 나머지 30%는 실망해서 자신감을 잃기도 해요. 어떤 분은 그동안 너무 머리 쓰는 일만 했다며 봉투붙이는일을 하는 게 즐겁답니다. 은퇴자들에게 중요한 건 마음을 비우는 거죠."

②/앞으로 '재능기부 마을'을 만든다면서요.--------A/"각종 재능을 가진 사회의 유능한 인력들에게 그들의 재능을 적절히 발휘할 가장 알맞은 곳을 주선해주는 코디네이터가 되려고 합니다. 굳이 마을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은 '한 아이를 키우는 데는 한 마을이 필요하다'는 속담처럼 직급도, 타이틀도 없이 모두 착한 마음으로 도외주는 마을을 만들고 싶어서예요. 느슨한 연대의 힘이라고 할까요. 느슨하게 연결되어 있지만 그래서 더욱 제대로 힘을 발휘할 수 있거든요. 우리 삶에 재미, 의미, 흥미를 느끼는 것 역시 그런 힘이죠. 외국어를 잘하는 사람, 목수일이나 사진 찍기 등 종류도 가리지 않아요. 100명쯤 모이면 마을발대식을 할겁니다. 받는 것에 익숙하다 보면 늘 욕구불만에 시달리지만 주는 기쁨을 알면 정말 행복해지죠."

★ 이 글은 행복설계아카데미 최혜정씨를 유인경기자가 취재해서 경향신문에 게재한 --------

착한전문가

"사회에서 받은게 많은사람들은 더많이나누어야죠."

소기업 서포터즈 '착한전문가' 회장 **오현석** 오현석씨(회계사. 가람경영자문 대표)는 '착한 전문가' 라는 이름이 아직 부담스럽다. 그가 생각 하는 '착한'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최선을 다해서 다른 이들과 나누는 사람이다. 그는 그저 가지고 있는 것을 당연하게 나눌 뿐이라고 겸손하게 말한다.

"우리 사회 시스템에서 저는 많은 혜택을 받고 사는 전문직 종사자입니다. 40대에 들어서면서 내가 받은 혜택을 어떻게 하면 다시 사회에 환원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했어요. 가족들과 함께 몸으 로 하는 자원봉시는 많이 했지만, 내 전문지식과 시간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게 늘 좀 안타까 웠어요. 희망제작소를 만나면서 그런 기회를 갖 게 되어서 오히려 기뻤죠. 이런 자리를 깔아 준 것 만도 희망제작소가 큰일을 한 거예요."

2008년, 한 주간지를 읽다가 우연히 희망제작소 소기업 서포터즈를 모집한다는 광고를 본 것이 시작이었다. 평소에 박원순 변호사는 알고 있었지만 희망제작소는 생소했다. 소기업발전소가



하는 일들을 꼼꼼하게 살펴보았다.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부분이 많았다. 그러면서 평소에 일 때문에 접했던 작은 기업들의 어려움, 그 때마다 느꼈던 안타까움이 마음으로 되짚어졌다. 망설이지 않고 손을 내밀었다.

소기업발전소 서포터즈 '착한전문가'는 희망소기업을 발굴하고 경영지원을 하는 전문가 그룹이다. 작은 기업들이 자금 부족으로 혹은 어디서 조언을 구해야 할 지 잘 몰라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들을 서포터즈들이 해결해준다. '착한전문가'는 디자인, 특허, 세무, 재무등 다방면의 전문가들이 모여 있다. 희망제작소는 전문가들의 시간과 전문성을 기부 받아 작은 기업들을 돕고, 도움을 받은 기업들은 이익의 일부를 다시 사회에 환원할 수 있도록 하는 의미 있는 활동이다.

오현석씨는 현재 '착한전문가' 회장을 맡고 있다. '남들보다 시간 이 많아서'라고 겸연쩍게 웃지만 그의 수첩은 숨 쉴 틈 없이 짜인 일 정표로 빽빽하다. 다만, 도움이 필요하다 싶은 구석이 있으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사람 만나고 어울리기를 좋아하는 성격 탓에 기꺼이 떠안은 일이다.

"희망제작소가 일을 더 잘하려면 전문가들이 많이 모여야 하는데, 이 사람들을 꾸준히 모아내고 함께 가는 일은 또 다른 역할이 필요하 다고 봐요. 다행히 내가 그런 면에 재능이 있으니까 해야죠. 사람들하 고 어울리는 과정에서 큰 시너지를 얻기도 해요."

그가 생각하는 서포터즈의 기본자세는 철저하게 관중석의 응원단이 되는 것이다. 희망제작소라는 감독이 희망소기업이라는 선수들과 필드에서 잘 뛸 수 있도록 열심히 박수를 쳐주고, 물도 따라주고 목청 높여 응원해주는 '착한' 관중이 되는 것이라고 여긴다. 물론 그도 처음에는 희망소기업 선발 과정에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지만, '착한전문가'가 진정한 서포터즈가 되기 위해서는 희망제작소가 하는 일들을 굳게 믿고 따라야 한다고 생각을 바꿨다.

그는 기부가 경쟁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회를 꿈꾼다. 서로 얼마나 기부하고 봉사했는지가 술자리에서도 자랑거리가 되는 사회가 언젠 가는 오지 않을까 바람을 품어 본다.

"요즘 들어 부쩍 잘 늙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참, 저 사람은 바르게 잘 살았구나, 따뜻하구나 누구나 그렇게 봐 줄 수 있는 사람이요. 지금은 별로 그렇지 못하거든요…. 지금은 어떠냐구요? 아직 불같고 까칠하죠…. 하하. 착한 전문가를 오래오래 하면 정말 착해질 지도 모르겠네요." *

해피리포터

'시민기자단' 으로 시작한 두 번째 인생

해피리포터가 만난 해피리포터 정인숙

글 _ 송 은 하 희망제작소 해피리포터



"어? 이 녹음기 좋은데요, 카메라는 어떤 모델 이죠?"

취재하러 온 나보단 내가 들고 온 녹음기와 카메라에 더 관심을 보인다. 늘 인터뷰를 하는 입장이었는데 막상 '받는' 입장이 되니 낯설다며 자꾸 웃는다. 그러면서도 주어진 질문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이야기를 풀어내는 것이 참 일품(一品)이다. 이야기를 '듣는' 재주뿐 아니라 이야기 '하는' 재주도 남다르다.

정인숙(51)씨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중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던 평범한 교사였다. 27년간 천 직으로 여겼던 직업이었지만 남편이 교직생활을 힘들어하는 것을 보면서 함께 퇴직하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작년 3월부터 희망제작소에서 NPO단체를 취재하는 시민기자단 해피리포터로 활동을 시작했다. 물론 50을 넘겨 시작한 시민기자가 만만할 리 없었다. 그럼에도 직업 특성상 몸 깊숙이체득된 '들어주는' 기술은 취재에 많은 도움이되었다.

"이 일이 지속적으로 글을 쓰고 사람을 만난다는 점에서 참 매력적으로 다가왔어요. 활동하는 분들을 만나면서 배워야 할 것도 늘어나고요."

51살. 그이의 인생 이모작은 이제 막 첫 발을 내 디뎠다.

평소 책 읽는 습관은 정씨의 필력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그것이 힘이 되어, 기사작성도 어렵지 않게 하고 있다고. 그럼에도 정씨는 끊임없이 노력하다

"책 읽는 걸 좋아해요. 또 책 읽는 게 많이 도움을 줍니다. 시간이 되는 대로 기사를 위한 책이라면 시간을 내서라도 읽으려고 노력합니다."

좋아하는 일은 독서뿐만 아니다. 그림 그리기, 답사 가기, 여행하기, 농사짓기. 이 많은 활동들 을 하고 있는 정씨지만 마감 날짜 한 번 어긴 적 없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보다 더 일찍 더 많은 기



사를 쓴다.

그가 지금까지 취재한 NPO단체들을 보면 환경, 아동, 지역, 교육 등 분야가 굉장히 다양하다.

"처음이니까 모든 분야를 한 번씩 경험해보려고 해요. 하다 보면 아무래도 관심분야가 생길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전문적으로 한 분야를 해볼 생각이에요. 아직은 배우는 시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하루하루 바쁘지만 그이는 꼭 하루에 얼마만큼은 '나' 를 위한 시간을 보낸다. 혼자 생각할 시간이 있어야 나를 조절할 수 있고 지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다.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그의 인생목표는 '내 몫을 다하며 하루하루를 살자'는 것. 그 깊고 원숙한 꿈을 위해 오늘도 취재를 가고 글을 쓰고 또 고친다.

기자는 '발'로 뛴다고들 한다. 그래서 기자가 취재 가는 곳곳에는 기자만의 발바닥 기록이 남는다. 인생의 이모작을 시민기자로 다시 시작한 정인숙씨. 그가 가는 곳곳마다 소중한 발바닥의 기록이 또렷이 남기를 바란다. *

희망 고리

평화와소통의 고리를 꿈꾼다

글 _ 김 정 현 희망제작소 대안센터 인턴

"2008년 여름, 림혜영 전 연구원과 정기연 연구원은 희망제작소 통번역 자원 활동가들의 모임을 꾸리기 시작했다. 이름은 '고리'. 서로 다른 언어 사이에서 중간 연결 고리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의 이름이다. 통역과 번역은 언어적인 기술로만 해결 되지 않고, 내용에 대한 충분한 공감과 소통이 있을 때 가능하다. 언어를 잘하는 것과 통역과 번역을 잘하는 것은 분명 다름에 공감하며 시작했던 고리 1기는 눈부신 활동을 펼치며 마감했고, 이제 고리 2기가 순항을 시작했다.

고리 1기 김영수, 김영신, 김진우, 김태균, 김성지, 박순 녀, 박지영, 백혜원, 시노하라 미도리, 서청란, 서혜영, 이미진, 이선규, 이지영, 장지예, 전하얀, 정용재, 정승 환, 조성재, 최훈민, 키라안님 고맙습니다. 정말 수고하 셨습니다!"

#1 김진우(영어 고리)

국제대학원을 졸업하고, 연구소에서 국제협력 업무를 담당해온 진우씨는 희망 고리와의 만남을 '운명적' 이었다고 회상한다. "20대의 마지막 해 였던 작년에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정말 고민이 컸어요. 이런저런 상념에 빠져있다 건져 올린 키워드가 바로 '나눔' 이었습니다. 바로 그 무렵, 번역능력이라는 제 작은 자산을 기쁘게 나 눌수 있는 희망 고리가 때마침 제 앞에 짜짠~ 나 타나 주신 거죠." 사회 전반에 관심이 많다는 진 우씨는 공공디자인, 기후환경, 사회창안, 글로벌 브레인투데이 등 희망제작소 내 다양한 사업에 열의를 가지고 참여했다. 진우씨는 특히 제주 4.3 사건 동영상, 사회창안국제회의 자료집 등의 영 문번역 업무에서 큰 활약을 보여주었다.

"부족한 실력으로나마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이 참 행복하고 뿌듯합니다.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활동하는 사람들이 하나 둘이 아님에 또 한 번 흐뭇하고요."

#2 카라안(에스페란토 고리)

"Pacan Saluton~(파짠 살루톤)"

에스페란토어로 "나는 당신에게 평화의 인사를 기원 한다."는 말이다. 카라안 님(안중수)이 메일 첫머리에 항상 쓰는 말이다. 그는 인류의 보편성을 지난 공통어 에스페란토를 통해 반전과 평화를 추구하자는 취지를 가지고 에스페란토 평화연대를 만들어 활동하고 있으며, 평화웹진 발간,세계 대안학교대회, 아프리카와 공정무역 등 다방면에서 인류의 평화와 소통을 위해 늘 바쁘게움직이고 있다

"희망제작소 내에 희망 고리라는 역할은 말 그 대로 고리의 역할입니다.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고리의 역할이 되겠지요. Esperanto 역시 '희망하는 사람들' 이라는 뜻입니다. 희망 고리는





비록 크게 드러나지는 않더라도 언어적 고통을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단비와 같은 존재입니다. 부족한 부분의 채움은 단지 그것이 화려하지 않더라도 충분한 빛을 내리라 봅니다."

그의 말대로, 희망 고리가 제작소 내 연결 고리뿐만 아니라, '평화와 소통' 이라는 인류의 보편적 꿈을 향한 빛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

#3 김영수(일어&영어 고리)

Q/김영수님 소개 부탁드립니다.------A/법대 졸업 후, 은행원 생활을 30년 쯤 했습니다. 퇴직 후에는 연구 공간 '수유+너머'에서 일본근대사상의 주요 저작을 읽고 번역하는 번역학교(삼취인 경륜문답, 일본근대사상사 2권 출간)와현대일본 지성계의 조류를 읽는 잡지 읽기 세미나를 5년째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의 의뢰로 일본군 성노예 전범 국제민간법정판결문(영문)을 수유연구실 동료들과 공동번역해서 '히로히토 유죄'를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Q/앞으로 고리의 지향점은?------A/통역, 단편적 자료의 번역, 체계적 책자의 번역 크게 3가지로 나누어 각각 다른 방식으로 이끌어 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자원봉사자로서 고리 활동에 자칫 결핍될 수 있는 책임감이나 시간 약속 엄수도 명심해야겠죠.

인/희망제작소 연구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A/아마추어적 정열 은 전문가적인 엄밀함으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자칫 자기 위안으로 끝날 수 있 다고 생각합니다.★

희망 고리 1기가 말하는 그들의 <mark>통번역 노하우</mark>

전하얀

서울외국어대학교 통번역 대학원에서 한영통번역을 전공했다. 자료집 영문번역 감수, 사회창안 국제회의 동시통역, 외부강연 순차통역 등 희망제작소 내 다양한 통번역업무를 담당해왔다.



전하얀의 통역 노하우 5

- 1. 문장은 반드시 끝내야 하고, 주어와 동사 호응, 시제에 주의할 것!
- 2. 발음이 새지 않게 조심하며, '어, 음..' 등의 소리를 내지 않기 위해 말을 하지 않을 때는 입을 다물고 있도록!
- 3. Backtracking(했던 말을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을 하지 않도록 주의!
- 4. 되도록이면 말을 빨리 하고 대신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분명하게 전달!
- 5. 동시일 경우 열거시항이나 숫자 등은 써 주고 의미 단위로 하도록!

|전하얀의 번역 노하우 5|

- 1. 번역 후, 자연스러운 한국어 혹은 영어로 쓰여졌나 원문을 보지 않고 점검하고 나서 다시 원문과 대조.
- 2. 한글 맞춤법이나 영문법 등 기초적인 실수를 하지 않도록 주의.
- 3. 영어나 한국어 표현이 많이 쓰이는 표현인지 알아 보기 위해 인터넷 검색.
- 4. 통역, 번역 모두 마찬가지의 경우로 배경 지식 쌓는 것이 중요.
- 5. 한영 번역의 경우 한 문장이 너무 길지 않게, 필요하면 끊어줘야 함.

김태균

서울외국어대학교 통번역대학 원을 졸업하고, 현재는 일본방 송국 서울지국에서 기자로 활동 중이다. 희망제작소 내 커뮤니 티 비즈니스 자료집 번역 외에 도 사회창안국제회의 순차통역 을맡아서 눈부신 활동을 했다.



|김태균의 통번역 노하우|

1. 암기

나는 매일 하나씩 1~2분짜리 뉴스를 음성파일로 받아 메모리→순차연습→섀도 잉→암기 순으로 연습했다. 뉴스 주제는 되도록 여러 분야를 돌아가면서 하고, 되도록 아침에 시작해서 하루 동안 틈틈이 외우면서 저녁때쯤이면 처음부터 끝까지 막힘없이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연습했다.

- 2. 일한번역 출력해서 한 번 더 검토하기 쉽다면 쉽고 어렵다면 가장 어려운 게 일한번역이다. 일한번역은 무조건 2회 이 상 검토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은 출력해서 화면이 이닌 눈으로 직접 검토한 다 그렇게 하면 안 보였던 실수나 오역도 어느 정도는 눈에 보인다.
- 3. 한일번역 지칠 때까지 검색하기 해당 언어의 뉘앙스까지 완벽하게 알고 있는 게 아니라면 인터넷을 최대한 활용 해서 그 단어가 어디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철저하게 조시한 후 사용하기 비란다. 검색할 때는 검색수가 많은 게 우선 중요하지만 그 단어나 표현이 쓰인 곳이 일 반 블로그같은 곳인지, 뉴스나 공신력 있는 기관인지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

SDS (Social Designer's School)

그의꿈실천법1조, "하고싶어? 그냥하는거야!"

글 김귀자 희망제작소 희망모울 인턴



SDS 1기 이경희

한 사람의 꿈에서 시작됐다. 이경희씨는 6개월 전, SDS 1기 수업 종강식에서 신영복교수의 강연 을 듣고 싶다는 꿈을 발표했다. 이를 들은 박원순 상임이사가 직접 신영복 교수에게 강연을 부탁했 고, SDS 원우회 회원들이 나서서 그 꿈을 착착 실 행해갔다. 그리고 지난 1월8일 희망제작소 2층 희 망모울에서 신영복 교수의 신년특강이 열렸다. 120여 석의 자리는 2시간 동안 청중들이 내뿜는 뜨거운 열기로 꽉 들어찼다.

"처음에는 내 꿈이었지만 함께 기획하고 진행하면서 공동의 꿈이 된 게 아닐까 해요. 한 사람한 사람 감동을 받았다고 얘기하니까, 마치 내 꿈을 이뤘다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의 꿈을 한꺼번에이룬 것 같습니다."

그는 SDS는 좋은 게 많은데, 무엇보다 좋은 건 사람들이라고 꼽았다. 젊은 사람부터 나이든 사 람까지, 직업도 각양각색인 사람들이 오직 '꿈 을 꾸고 실천하기 위한 열망' 하나로 모였기 때 문이다. 그래서 다들 서있는 위치는 다르지만 금 방 친해지게 된다. 사람들끼리의 네트워크에서 많이 배운다. 그가 꿈꾸는 세상도 '더불어 사는 사회' 다

그는 지난학기를 끝으로 중앙대학교 교수 자리를 그만두었다. 20년을 넘게 해온 일이었고, 그것도 남들의 선망하는 교수직이었다. 평소 사회적기업에도 관심이 많아서 여러 단체에 기부도 하고 자원 활동도 했다. 6년 전 지리산 어느 골짜기에 있는 지인 집을 방문했다가 완전히 반해서 그곳에 집을 짓기도 했다. 남들은 그에게 하고 싶은일은 하며 살았다고 하지만, 정작 본인은 한계를느꼈다. 직업을 가진 이상 하고 싶은일에 완전히몰두할 수는 없었다. 고민하고 있을 때 SDS 강의에서 박원순 상임이사가 말한 직업 10계명 중마

지막 구절이 마음을 울렸다. '마지막이 꼭 필요한 자리가 아니면 떠나라'

"그때 어떤 책을 읽는데 '우리가 확실하게 가진 건 시간밖에 없다'이런 말이 맘에 와 닿았어요. 우린 굉장히 많이 가졌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가진 건시간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시간을 어떻게 쓸까 깊게 생각하게 됐어요. 내가 건강할 때 쓸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가? 결론은 늦기 전에 하고 싶은 걸하자였죠."

아직 무엇을 할지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 주위에서 이것저것 요청도 많이 들어오지만 우선 6개월은 아무것도 안하고 주변정리를 할 계획이다. 그렇게 정리를 하다보면 정말 하고 싶은 일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고민하고 있다지만, 가만히그의 말을 듣고 있으니 벌써 마음속에 길은 정해진 것처럼 보였다. 봉사, 발로 뛰는, 더불어 살기, 교육…. 몇 가지 키워드가 이미 그의 주위에 맴돌았다.

마지막으로 SDS를 다른 사람에게 한마디로 소 개해달라고 했더니 서슴없이 이렇게 말한다.

"아가면손해다" *

내삶의 거울이되어준사람들

SDS 1기 이진영

한 마다씩 할 때마다 안경 너머로 눈빛이 반짝 였다. 단발머리에 앳된 얼굴 , 수줍은 웃음까지 영 락없이 이제 막 스무 살 남짓한 새내기 대학생으 로 보인다. 하지만 이진영씨는 가톨릭대 사회학과 대학원생이다. 지금은 학교를 잠시 쉬면서 이런저 런 사회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이다. 사회학도답 게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 에 관심이 많다. 희망제작소를 알게 된 것도 그런 관 심 때문이다.



"휴학하고 뭘 할까 궁리하다가 한 시민단체 게시판에서 희망제작소 사회창안센터 인턴모집 공고를 봤어요. 운명적 인 것을 느꼈다고 할까요. 어떤 결정을 할 때 오래 생각하는 편인데 두 번도 생각하지 않고 바로 이력서를 보냈어요."

사회창안센터 인턴을 시작하고 얼마 뒤에 SDS가 1기 수 강생을 모집했다. 인턴들은 그냥 들어도 된다는 말에 '주경 야독' 하는 마음으로 덜컥 신청을 했다. 초반에는 열심히 들었지만,뒤로 갈수록 강의가 있는 날만 이상하게 다른 일정이 자꾸 생기는 바람에 그리 착실하게 수업을 듣지는 못했다. 종강이 다가오면서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 마지막워크숍만은 조원들과 함께 열심히 준비했다.

"뿌듯했죠. 정말 좋았어요. 만일 워크숍마저 대충 때우고 지나갔으면 지금처럼 원우회에서 열심히 활동하지 못했을 거예요. 워크숍 끝나고 연구원들도 다 보내고 우리끼리 모 여서 얘기를 나눴던 그 시간이 저를 여기까지 오게 했어요."

SDS 수강생들이 만든 원우회는 한 달에 한 번씩 월례회의를 연다. '초청 강연회 준비'같은 중요한 사안을 의논하기도 하지만 나이도, 직업도 다양한 사람들이 그냥 편하게 모여 앉아서 한 달 동안 서로 생활했던 얘기들을 시시콜콜 재미있게 나눈다.

"젊은 사람들끼리만 있으면 경험이나 사고의 폭이 다 비슷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여기는 나이층이 다양하니까그만큼 내가 알지 못했던 삶의 방식, 태도, 철학 등을 듣고 배울 수 있어요. 누구도 충고하지 않고 그냥 들려주고 들으면서 자연스럽게 나를 돌아보게 돼요."

올해 그의 가장 큰 희망은 논문을 쓰고 무사히 졸업하는 것이다. 그 뒤에는 시민단체에서 일하고 싶다는 그는 SDS를 이렇게 말하다

"꿈은 누구나 꿀 수 있지만, SDS는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곳이죠" *

★ SDS는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갈 공공부문의 차세대 소셜디자이너를 양 성, 발굴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세대와 직업을 넘어서 모인 소셜디자이너 등 등이 1,2기를 통해 배출되었고,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소시지팩토리 soci知 factory

"의미 있는 일을 재미있게 하고 싶어요."



참 단정한 청년이다. 의외였다. 희망제작소 소기업 발전소 사무실에서 인터뷰를 약속한 날, 김정헌(넥스터스 전 대표.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졸업)씨는 짙은 색 양복에 노란 넥타이를 매끈하게 갖춰 입은 모습으로 도넛 상자를 들고 살며시 들어왔다. 아이디어와 상상력, 열정으로 가득 찬 대학생 그룹 넥스터스 2대 대표라는 이력을 듣고 그만큼 자유분방한 차림새로 나타날 것을 예상하고 있던 터였다.

"아, 평소에는 이렇게 절대 안 입고 다니죠. 얼마 전에 취업을 했거든요. 오늘이 신입사원 연수마지막 날이예요. 근데 아마 다음 주부터는 정식출근하니까 내내 이런 차림으로 다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그냥 '훤칠한 청년' 이라고만 생각했다. 고등학생 때부터 자원봉사로 시민단체 와 인연을 맺기 시작했던 일, 사회적 기업과 대안 경제에 대한 관심, 활동으로 이야기를 풀어 나갈 수록 그는 참 진지하고 바른 생각을 가진 청년이 었다.

다른 친구들은 적당하게 시간을 때우고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자원봉사 자리를 찾을 때, 그는 뭔 가 의미 있는 봉사를 하고 싶었다. 고등학교 2학 년 때였다. 부모님의 권유로 참여연대에서 자원 봉사를 시작했다. 그때까지 학교와 공부밖에 몰 랐던 그에게 시민단체를 만난 첫 경험은 참 신선 한 충격으로 다가왔다.

"배울점이 많았고 또 재미있었어요. 주로 언론 보도를 모아서 스크랩하는 게 주 업무였는데, 통 신비 인하 1인 시위도 해봤어요. 우리 사회에서 시민단체의 역할에 대해서 알게 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죠."

대학에 들어가서 그의 자원봉사는 아름다운 재 단으로 이어졌다. 아름다운 재단 국제협력팀에서 일하던 대학 3학년 때, 미국 미시간주에 있는 존 슨센터라는 연구소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회가 생겼다. '아시아 미국인들의 기부 경향성에 대한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자료 조사를 하다 넥스터스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 대안경제와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막 관심을 가지기 시작할 무렵이어서 생각을 나누고 함께 실천할 수 있는 대학생 커뮤니티는 그의 갈망과 딱 맞아 떨어지는 것이었다. 한국에 돌아오자마자 바로 넥스터스에 가입해서 활동을 시작했다.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이끌고 함께 성장하는 기업을 꿈꾸는 대학생들의 모임인 넥스터스는 2008년 3월에 희망제작소 소기업발전소를 만나서함께 '소시지팩토리'를 열었다.

"열정은 넘쳤지만 모두 대학생들이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들이 한 계가 있어서 늘 안타까웠어요. 희망제작소를 만나면서 활짝 꽃을 피울수 있었죠. 소시지팩토리는 사회적기업을 꿈꾸는 모든 대학생들에게 단비와 같은 존재입니다. 희망제작소는 포럼을 기획하고 페스티벌을 함께 주최하면서 넥스터스의 자율성을 충분히 보장해주었던 최상의 파트너였어요."

그도 한 때는 대학생 사회적 벤처를 준비하기도 했다. 여러 이유로 좌절되면서 그가 선택한 것은 일반 기업에 취업하는 것이었다. 그가 바라는 진정한 의미의 사회적 기업이 아직 우리 사회에서는 제도적 뒷받침이나 사회적 인식, 역량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현실에 대한 자각도 있었다. 포기한 것은 아니다. 호흡을 길게 가다듬고 걸음을 늦추면서좀 더 배울 때라고 생각했다. 그는 '지금이 아니면 하지 못하는 일이 있다'고 믿는다. 지금까지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이런 기준에서 망설임 없이그렇게 했던 것처럼 이번 선택도 역시 마찬가지다.

"의미 있는 일들을 아주 재미있게 하면서 살고 싶어요. 시민 단체 사람들은 딱딱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고정 관념이 깨지도록 시민단체에 계신부들도 재미있게 일했으면 좋겠어요."

그에게 희망은 '마음속에 품고 있어서 언젠가는 이루어지길 바라는 설렘' 같은 것이란다.

인터뷰를 마치면서 희망제작소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를 물었다. 얼굴에 활짝 웃음꽃을 피우며 활기찬 대답이 곧바로 돌아왔다.

"대학생들과 가깝게 지내세요. 일하기 힘든 면도 있지만 그들의 아이디어와 창의성, 열정을 잘 활용하세요." *

★ 희망제작소와 넥스터스가 함께 설립한 '소시지팩토리' 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인식을 확산 ' (Society)시키는 지식(知)의 장이자, 착한 기업가를 양성하는 작업장(Factory) 역할을 하고 있다.

불만합창단

불만있어? 그럼노래해!

글 앨리스 서울 멋대로 불만합창단 단장



불만한창단은

일상의 작은 문제에서부터 세계적인 이슈까지 오늘날의 나와 연관된 모든 불만들을 노래로 부른다. 불만합창단은 2005년 영국 버밍햄에서 처음 시작해 핀란드 헬싱키, 독일 함부르크, 미국 시카고 등 세계 각 도시로 퍼져나가고 있다.

불만합창단이 노래하고 춤추며 사회를 바꾸는 훌륭한 주민참 여의 방법이자 유쾌한 사회운동 그리고 멋진 공공예술이라는 점에 착안해서 희망제작소 사회창안센터는 2008년 10월에 국내에서 최초로 전국에서 8개 팀이 참가한 불만합창 페스티 벌을 개최했다. 작년 여름, 불만합창단을 떠올렸다. 단조로운 일상에 활력을 주기 위해 호기심으로 시작했지만 예상치 못한 경험을 안겨주었던…. 불만을 노래 한다는 것은, 방치하기엔 번번이 거슬리고 나서 서 치우기엔 방법을 몰라 갑갑한 존재로만 느꼈 던 '불만' 에 대한 전혀 새로운 해석이었다.

더러는 생사가 달린 불만을 해결하기 위해 식음을 전폐하고 극한의 싸움에 돌입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우리들은 불만이 쌓여기는 것이야 말로 치열하게 산다는 것 아니냐는 식의 자조적 한탄을 안주삼아 소주를 들이킨다. 그렇게 그날의 기억을 일시적으로 지우는 방법을 선택하거나 불만을 제공한 상대와 주먹다짐으로 끝내 얼굴 붉히며 우중충한 결론을 짓지 않았던가.

이런 방식은 불만을 해결하기는커녕 나의 몸을 축내던지 아니면 주머니를 축낸다. 그런데 불만 들을 모아 큰 소리로 노래를 한다니, 이것은 내가 아는 한 불만들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가장 영리 한 방법이다.

구체적으로 불만합창의 장점을 꼽아보자. 첫째, 혼자하면 안 들릴 불만에 대한 소리가 커진다. 둘째, 소리를 지르니까 어쨌거나 속이 후련해진다. 셋째, 즐겁게 노래를 하니까 야단치기가 애매해진다.

자동차세에 대해 퉁명스럽게 응대하는 공무원, 치솟는 전세비, 우리 동네 전철역에만 없는 에스 컬레이터, 턱없이 짧은 신호등 점멸 시간과 이천 원이 되어버린 곰보빵의 가격까지. 나의 일상을 둘러싼 불만들에 대해 부질없이 시비를 걸거나 언제 해결될지 모르는 민원 접수와 같은 일로 내 인생을 소모하는 짓을 멈출 수 있었던 것은, 내가꼭 너에 대해 노래하겠다고 마음먹게 된 순간 덕분이다. 솔직히 불만은 많은데 시간은 없고, 그래도 참고 살기엔 속이 터지니까 소주로 내 위장을 괴롭히기보다는 너의 마음을 불편하게 해주겠다!







이제 나의 모든 불만과 골칫거리들은 노래가 되어 귀가 따갑도록 울려댈 것이고, 나처럼 불만을 가진 사람들은 같이 노래를 부르거나 최소한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이겠지. 이것이야말로 이기는 싸움 아니 겠어?

요새도 답답한 순간이 찾아올 때면 함께 불렀던 불만 노래나 세계 각국의 불만합창 공연 동영상을 보며 순간순간 씨익 하고 웃음을 짓 는다. 앞서 말했듯 불만합창은 마치 마법처럼 노래를 부르기로 마음 먹는 순간부터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불만을 이야기하기에 점점 힘들어지는 세상, 불만합창단에 대한 소회의 글을 청탁받아 놓고도 최근의 불만 사건부터 늘어놓기 바쁜 나 같은 인간은 점점 더 스트레스가 쌓이는 요즘이야말로 불만을 노래하기에 적절한 타이밍이다.

웃자고 말하면 죽자고 덤빈다는 시쳇말로, 그 어떤 패러디나 위트도 풍자도 사라지는 마당에,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신나게 몸을 흔들며목청껏 불만을 노래하는 일뿐이다. 닥터 피쉬와 개그코드가 맞았다면 그대도 나와 크게 다른 사람이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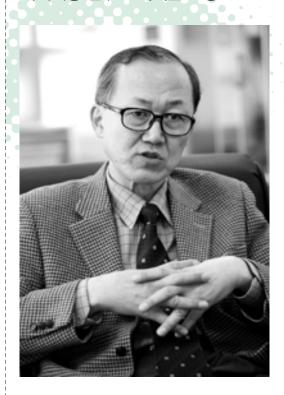
일단 한번 오늘의 불만을 적어보길. 그리고 아무렇게나 불러보길. 원래 내 것이었을 권력을 찾은 듯 묘한 느낌이 들 것이다. 이따금 불만 을 노래하는 것에 눈치를 보는 분들이 있는데 쑥스러움은 어떤 일이 든 처음에는 겪어야 한다.

모난 돌이 정 맞는다고?모난 돌에 발 디딘다! *

뿌리센터 자치재정연구소

절망이 깊을수록 희망이 더 의미 있지 않은가

자치재정 연구소 이재은 소장



이재은(경기대학교 대학원 학장)소장을 찾아 간 날, 학교 교정은 이제 막 신입생 모꼬지에서 돌아온 듯 저마다 과 깃발을 앞세운 학생들로 북 적였다. 햇살 사이로 간간이 부는 찬바람이 매서 운 날이었지만, 미리 봄날을 불러온 듯 떠들썩한 젊음은 눈부셨다. 대학원 건물 외벽을 타고 나있 는 철계단을 삐걱거리며 올라서 찾아간 그의 방 은 따뜻하고 조용했다.

아직 방학 중인데도 그동안 미뤄두었던 논문과 번역으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던 이재은 소장 이 반갑게 맞아주었다.

"대학원장이라는 보직을 맡으니까 학기 중에는 학교 일이 너무 바빠서 통 글 쓸 시간이 없어요. 방학 때 열심히 써야 되는데, 이제 개학이 얼마 안 남았으니 큰일이네."

이재은 소장은 지방자치가 시작되기 훨씬 전부 터 지방과 중앙의 재정 분리 문제, 재정분권의 중 요성을 꾸준하게 제기해 왔다. 논문뿐만 아니라 시민단체와 함께 행동하고 실천하면서, 90년대 말 부터는 지방재정분권운동을 벌여서 자치와 분 권의 중요성에 대한 대중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노력해왔다.

"자치와 분권은 서로 참 미묘한 위치에 있는 단어예요. 분권은 중앙과 지방의 관계에서 바라 보는 것이고, 자치는 철저하게 주민의 관점에서 지역재정 문제를 바라보는 겁니다. 분권운동에 서 자치재정으로 이어지면서 주민의 관점에서 지방재정을 연구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 되고 있어요."

그는 희망제작소 자치재정연구소가 문을 연 2007년 10월부터 지금까지 줄곧 소장을 맡고 있 다. 그동안 자치재정연구소는 매달 열리는 월례 포럼을 통해서 주민의 관점에서 지방재정을 바라 보는 '자치재정'을 다방면에서 분석하고 홍보하 는 일들을 해왔다. "처음에 연구소를 열면서 계획했던 일들을 다 하지는 못했어요. 당시에는 지방 공무원, 의원들, 주민들까지 교육시키는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했어요. 의원 교육은 꾸준히 했지만, 다른 프로그램들은 주민들 참여가 약해서 별 실효를 거두지는 못했지요. 그런 의미에서 아직 분권이 약하다고 봐요. 주민들이 자신들의 돈으로 지방재정이 움직인 다는 자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매섭게 감시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주민참여 의식이 더욱 높아져야 합니다."

이재은 소장은 환경운동에도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다. 환경운동 연합 초기부터 참여해서 시민환경정보센터 소장을 맡기도 했다. 재정 과 환경문제는 얼핏 생각하면 서로 전혀 연관이 없어보였지만, 설명 을 듣고 보니 환경에 대한 그의 관심이 이해가 되었다.

"자치재정을 연구하려면 그 지역 사람들의 삶을 속속들이 알아야해요. 지리적 조건, 환경, 재정을 함께 연구해야 올바른 해답을 찾을수 있어요. 재정이라는 게 숫자가 많이 나오니까 마냥 딱딱한 것 같지만 결국은 삶에 대한 이야기라고 난 늘 얘기하지."

요즘 이재은 소장은 고민이 많다. 학교일이 바빠지면서 그동안 해 왔던 대외활동이 어렵게 되었다. 자신의 역할을 대신 맡아 줄 젊은 학 자들을 찾고 있지만 쉽지가 않다

그에게 희망에 대해서 물었다.

"희망은 평화로울 때는 별 의미가 없어요. 요즘처럼 암울하고 절망이 깊을 때 희망이 더욱 소중하게 여겨지지. 고통의 시간은 아직 남았겠지만 언젠가는 끝이 보이겠죠. 지금 우리가 할 일은 정말 절망적인시대가 되어도 소외계층, 최약자계층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만들기 위해서 분투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희망제작소가 할 일이기도하고."

자치재정 연구소 창립 인사말에 그는 이런 구절을 적어 넣었다.

"한국 사회는 지금 변화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간 흔적이 있는 길을 가면 쉬울 수도 있지만 어느 시인의 시구처럼 가지 않은 그 길을 선택하기란 그리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우리가 지나온 길을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소수의 몇몇이 큰길을 버티고 서서 힘없는 다수를 수렁으로 내쫓는 그런 길을 가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서로 정담도 나누고 힘들면 서로 끌어도 주는 그런 길을 가야 희망을 찾을 수 있습니다." *



희망제작소 12기 희망 인턴

희망제작소에서 인턴으로살아가기

글 _ **박성미. 서연미. 구홍림** 희망제작소 웹미디어센터 인턴



"여기서 희망씨앗 하나 키우세요"

안은별 공공문화센터 인턴

"희망제작소는 하나의 마을과 같아요. 이카데 미는 학교, 소기업발전소는 기업, 웹미디어센터 는 언론 그리고 공공문화센터는 지역문화관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우리 사회에 필요한 구석구석을 담아내는 곳이 희망제작소가 아닐까요."

안은별씨(25 · 경희대 언론정보학부)는 공공문 화센터에서 지역박물관을 만들 때 지자체와 지역 수집가들이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의 기초 작업인 지역 수집가 조사를 맡았다. "끝까지 참 여하지 못한다는 점이 아쉽지만 제가 조사한 자료들이 앞으로의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 겠어요. 겨울 방학 인턴이 끝나고도 조사한 수집 가들을 취재하는 일은 계속 해보고 싶어요."

지역을 돌아보는 희망제작소를 통해 지역, 시민, 도시 공간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게 됐다는 그가 희망제작소를 통해 발견한 희망은 무엇일까.

"뿌리센터 신택리지 사업의 일환으로 박원순 상임이사를 비롯한 희망제작소 식구들과 만경강 걷기대회에 참여했어요. 도시와는 다른 군더더기 없는 깨끗한 공간을 걸으면서 지역의 삶도 충분 히 행복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역 의 희망을 봤다고 해야 할까요."

희망제작소에서 희망씨앗 하나를 들고 가게 된 그가 앞으로 희망제작소와 연을 맺게 될 인턴들 에게 '자유로운 분위기의 열린 공간 희망제작소 에 자신의 희망씨앗 하나씩 들고 와 가능성을 마 음껏 펼치길 바란다.' 고 전했다. *



"때로는 외로웠지만 그만큼 성숙해졌어요"

김정훈 웹미디어센터 인턴

"희망제작소 2층 희망모울에 사무실이 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인턴카페 닉네임도 '2층 성격만 좋은 김정훈(26 · 경일대 사진영상학부)' 으로 지 었답니다.(웃음)"

정훈씨는 자칭 '희망모울 지킴이' 다. 그는 희망모울에서 열리는 강연을 녹화 · 편집하는 일을 한다. 다른 인턴들과는 외따로 떨어진 2층, '나홀로 인턴생활' 이 외롭기도 했지만, 그래서 인턴모임에 더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려고 애썼다고.

2개월 동안 희망모울에서 열린 대부분의 강연이 그의 손을 거쳐 녹화 편집되어 호프 TV에 올라갔다. '100인의 희망릴레이' 촬영 편집과 열 개 부서 인턴홍보영 상, 완주걷기대회 촬영 편집도 도맡아 했다. 그 때문에 다른 부서 인턴들보다 일찍 출근했고 야근도 잦았다. 밀린 작업 때문에 밤을 새우는 일도 허다했다.

정훈씨는 매체사진을 전공한 사진영상학도다. 누벨바그시대 흑백영화를 사랑하고 책읽기와 글쓰기를 좋아한다는 그는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던 인턴 경험이 방송 전반에 대해서 풍부하게 배우는 기회가 되었다고 자신 있게 말한다.

희망제작소 인턴 이전과 이후의 그는 어떻게 달라졌을까? "인간관계의 스펙트럼이 넓어졌어요. 이제껏 앞만 보며 달렸는데 인턴경험을 통해 옆을 보게 되었지요. 꿈을 가진 다른 인턴들을 보면서 제 삶을 성찰하고 성숙해질 수 있었어요."

그는 희망제작소에서 인턴을 했다는 것 보다 희망제작소에서도 열심히 일한 자신이 자랑스럽다. *****

"사회를 더 깊이 바라보게 되었어요"

윤태환 기후 · 환경팀 인턴

윤태환(28·국민대 나노전자물리학과)씨는 '배워서 남주자'라는 신념을 가진 알토란 같이 생긴 청년, 공부하고 배우는 것을 좋아해 그것을 적용하고 실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많은 이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는 밀알 같은 마음을 가진 청년이다.



"원래 기후·환경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 문제점들을 푸는 해결책에 관심을 갖다보니까 어떻게 풀어내는지 배우고 싶었고요. 개인이 가치 있게 쓰일 수 있는 NGO를 찾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해왔죠." 희망제작소에 지원하게 된 계기에 대해 막힘없이 풀어내는 그가 장기적인 비전이라며 자신 있게 꺼내 보이는 장래희망은 아직까진 다소 생소한 CSO(Chief Sustain Officer·최고지속가능경영책임자)이다.

또렷한 꿈을 가꾸는 태환씨는 희망제작소 인턴들의 반장이다. "반장은 제 천성인 것 같아요. 나서는 것보다 는 책임지는 걸 좋아해요.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하 려는 습성이 있죠. 인턴 MT를 가야하는데 의견만 분분해

서, 그걸 가지고 저 혼자 고민하고 관심을 갖다 보니까 결국 제가 총대를 메게 됐네요.(하하)"

인턴 모두가 참여한 인턴홍보 동영상을 만든 일은 지금 생각해 도 무척 뿌듯하다. "인턴홍보 프로젝트는 앞으로 오게 될 인턴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가장 큰 목표는 희망제작소란 브랜드네임을 사람들에게 알리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거예요."

독특하지만 쉽지 않은 일들을 하고 있는 희망제작소 덕분에 우리 사회를 보다 세밀하게 바라볼 수 있는 눈을 떴다는 태환씨는 궁정의 에너지를 가진 뿌리센터의 전우석 연구원을 닮고 싶다고 한다. "연구원님처럼 어딜 가든지 내가 먼저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게중요하다고 봐요. 누군가 먼저 희생할 수 있는 솔선이 필요한 거죠. 앞으론 그게 제가 됐으면 좋겠어요." ★

★ 이 글을 쓰고 사진을 찍는 일은 인턴 기간 중 박성미·서연미·구홍림 세 사람에게
 추어진 마지막 과제였다. 희망제작소 구석구석을 분주히 오가며 성실하게 과제를
 마친 이들의 앞날에 희망이 가득하기 바란다.